

Working Paper 2006-05

2006년 빈곤포럼 II

편저
이태진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발 간 사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도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과정에서 절대 빈곤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각종 사회병리적 현상 및 양극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빈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에 대응하고자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가 초래한 ‘안전망 위기’ 속에서 복지분야를 압축성장시켰다. 이 중 기존의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상 일대 전환을 이룬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세계화,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경제구조의 재편, 산업-고용-소득 양극화, 상대빈곤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의 증대 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긴급복지지원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정책 기본 패키지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복지가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학문적 측면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구조의 변화, 근로빈곤, 사회적 배제, 사회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현상의 원인, 경로, 현상간의 관계, 대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의 원인, 현상적 측면, 결과 등이 다양한 만큼 개별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분석이 아우러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빈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빈곤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학문분야 전공자들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은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빈곤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사회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논의

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빈곤포럼」에서는 “빈곤에 관한 이론적 연구부터 실증적 분석연구”까지 빈곤의 원인, 경로, 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빈곤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이를 「빈곤포럼」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 문제의 원인 파악 및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6년 빈곤포럼에서는 기존 연구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중 주제를 선별하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재 「빈곤포럼」에는 학계에서는 주로 경제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의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연구본부에 소속된 위원급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빈곤포럼」은 2007년에도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관련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명실상부한 논의의 장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빈곤 및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학술적, 정책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포럼」에서 논의된 주제 및 토론 결과물들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자 및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유관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특히 본 「빈곤포럼」은 발표원고 뿐 아니라 논의된 내용의 회의록을 함께 수록하여 발간함으로써 연구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빈곤포럼」에 참여해 발표 및 열띤 토론을 해주신 원내의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빈곤포럼」이 해외의 우수한 사회복지포럼과 비견될 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

2006年 12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편저

-
- ◆ 이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 ◆ 김은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 우선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주제별 발표자

주 제	발표자
의료급여제도 내실화 방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빈곤 및 불평등 동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가구주 특성별 빈곤상태의 변화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제4회: 의료급여제도 내실화 방안	15
1. 현황	15
2. 문제점	22
3. 내실화 방안	23
4. 주요 쟁점	25
[회의록] 의료급여제도 내실화방안	26
제5회: 빈곤, 불평등 동향 및 빈곤상태의 변화	31
1주제: 빈곤 및 불평등 동향	31
1. 서론	31
2. 빈곤	38
3. 불평등	68
2주제: 가구주 특성별 빈곤 상태의 변화	81
1. 서론	81
2. 빈곤선 및 빈곤 측정 방법	83
3. 빈곤 변화 추이	90
4. 결론	106
[회의록]	110
1주제: 빈곤 및 불평등 동향	110
2주제: 가구주 특성별 빈곤상태의 변화	112

제6회: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117
1. 서론	117
2.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121
3. 빈곤이력에 따른 집단구분(<i>typology of poverty profiles</i>)과 특성비교	132
4. 빈곤 진입탈출 분석	157
5. 결론	170
[회의록]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180

표 목 차

〈표 4-1〉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	15
〈표 4-2〉 연도별 노인인구 추이	16
〈표 4-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총 진료비 증가양상	16
〈표 4-4〉 의료급여의 신규 대상자(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전환) 현황	17
〈표 4-5〉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 1인당 총 진료비	18
〈표 4-6〉 연령별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2003년)	19
〈표 4-7〉 의료보장 유형별, 의료급여 자격종별 진료비 비교	20
〈표 4-8〉 세부 개선 방안	24
〈표 5-1-1〉 도시간계 및 가계조사 구분	33
〈표 5-2-1〉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84
〈표 5-2-2〉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85
〈표 6-1〉 년 단위 가구 및 개인 빈곤율 및 실업률 추이	124
〈표 6-2〉 연간(12개월) 단위로 패널화된 데이터의 연간 빈곤율	125
〈표 6-3〉 응답개월 수에 따른 가구별 빈곤가구 비율	126
〈표 6-4〉 패널데이터의 분기별 가구 빈곤율	127
〈표 6-5〉 분기 단위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	128
〈표 6-6〉 연간 단위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	128
〈표 6-7〉 취업상태를 고려한 근로빈곤층의 규모	130
〈표 6-8〉 한국과 유럽의 근로빈곤층 규모	131
〈표 6-9〉 유형화된 집단의 구성	135
〈표 6-10〉 집단별 가구주의 연령과 성	136
〈표 6-11〉 집단별 구성원의 연령	137

〈표 6-12〉	집단별 가구규모	139
〈표 6-13〉	가족구조 비교	141
〈표 6-14〉	취업한 가구의 종사직업 비교	142
〈표 6-15〉	종사상태를 중심으로 한 가구구분	143
〈표 6-16〉	비취업가구의 비취업사유 비교	145
〈표 6-17〉	사회보장수혜비교	150
〈표 6-18〉	공적지원 수혜경험 비교	151
〈표 6-19〉	가구특성이 빈곤역동성 유형에 미치는 영향	153
〈표 6-20〉	1인 가구 빈곤율	154
〈표 6-21〉	2006 상반기 1인 빈곤가구 특성	155
〈표 6-22〉	총빈곤기간의 분포	158
〈표 6-23〉	빈곤지속구간(poverty spell)의 분포	159
〈표 6-24〉	빈곤지속구간 차수별 지속기간 분포	159
〈표 6-25〉	생존분석 대상가구의 빈곤지속구간(poverty spell)의 분포	161
〈표 6-26〉	빈곤지속구간(poverty spell)의 길이 분포	161
〈표 6-27〉	빈곤지속기간별 탈출확률	163
〈표 6-28〉	집단별 빈곤탈출확률 비교	163
〈표 6-29〉	빈곤탈출모형 추정결과	165
〈표 6-30〉	비빈곤지속구간(non-poverty spell)의 길이 분포	166
〈표 6-31〉	비빈곤지속기간별 재진입확률	167
〈표 6-32〉	집단별 빈곤재진입확률 비교	168
〈표 6-33〉	빈곤재진입모형 추정결과	169

그림 목 차

[그림 5-2- 1]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비율	86
[그림 5-2- 2]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추이	90
[그림 5-2- 3]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갭 추이	91
[그림 5-2- 4] 도시근로자 가구의 센지수 추이	92
[그림 5-2- 5] 도시근로자 가구의 FGT지수 추이	93
[그림 5-2- 6] 학력별 임금격차	93
[그림 5-2- 7] 가구주 학력별 빈곤율	94
[그림 5-2- 8] 가구주 학력별 빈곤갭	95
[그림 5-2- 9] 가구주 학력별 센지수	96
[그림 5-2-10] 가구주 학력별 FGT 지수	97
[그림 5-2-11]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 추이	98
[그림 5-2-12] 가구주 연령별 빈곤갭 추이	99
[그림 5-2-13] 가구주 연령별 Sen지수 추이	100
[그림 5-2-14] 가구주 연령별 FGT지수 추이	101
[그림 5-2-15] 가구주 성별 빈곤율 추이	102
[그림 5-2-16] 가구주 성별 빈곤갭 추이	103
[그림 5-2-17] 가구주 성별 Sen지수 추이	104
[그림 5-2-18] 가구주 성별 FGT 지수	105
[그림 6-1] 1980년 이후 도시임금근로자가구의 빈곤율 변화	123
[그림 6-2] 분기별 빈곤율 및 실업률	124
[그림 6-3] 데이터에 따른 분기별 빈곤율 비교	127
[그림 6-4] 집단의 구분	133
[그림 6-5] 빈곤무경험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148

[그림 6-6]	일시빈곤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148
[그림 6-7]	반복빈곤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149
[그림 6-8]	계속빈곤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149
[그림 6-9]	빈곤층 지원정책의 예시	173

제 4회 빈곤포럼

〈주제 및 발표자〉

- 의료급여제도 내실화 방안
-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일시: 2006. 10. 26(목). 16:00 ~ 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소회의실

■ 좌장: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 토론자

〈원외〉

김진수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진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수연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원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팀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창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팀장)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총괄팀장)

의료급여제도 내실화 방안

신영석

1. 현황

가. 의료급여 수급자

□ 2005년 말 기준 총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176만명으로, 의료급여 1종이 약 100만명(56.7%), 의료급여 2종이 약 76만명(43.3%)임.

〈표 4-1〉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

(단위: 명, %)

대상자 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대상자수	1,520,986	1,420,539	1,453,786	1,528,843	1,767,885
1종 대상자	831,854	828,922	867,305	919,181	1,002,76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64,288	660,991	690,766	729,537	793,508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	78,158	79,068	81,715	86,374	87,668
국가유공자	77,793	75,993	80,584	83,999	85,287
북한이탈주민	1,709	2,653	2,994	4,481	5,158
인간문화재	402	385	425	434	410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9,040	9,108	9,221	9,342	9,322
이재민	10	289	1,172	20	561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454	435	428	525	574
입양아동 및 희귀질환자				4,469	20,281
2종 대상자	671,132	591,617	586,481	609,662	765,1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71,132	591,617	586,481	596,639	630,792
12세미만아동 및 만성질환자				13,023	134,324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 연도별 노인인구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명	%	명	%	명	%	명	%	명	%
건강 보험	전체	46,379,161	100.0	46,659,476	100.0	47,102,786	100.0	47,371,992	100.0	47,392,052	100.0
	65세 이상	3,216,228	6.9	3,344,770	7.2	3,541,138	7.5	3,747,875	7.9	3,919,404	8.3
의료 급여	전체	1,502,986	100.0	1,420,539	100.0	1,453,786	100.0	1,528,843	100.0	1,767,885	100.0
	65세 이상	371,398	24.7	374,134	26.3	391,667	26.9	415,138	27.2	452,175	25.6

□ 2005년 기준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중 노인인구수는 약 45만명(25.6%)으로 건강보험 노인인구비율 8.3%보다 3배 이상 높음.

나. 총 진료비

〈표 4-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총 진료비 증가양상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억원	증가비	억원	증가비	억원	증가비	억원	증가비	억원	증가비	
총진료비	보험	178,195	100	190,606	107	205,336	115	223,559	125	247,968	139	
	급여	소계	19,495	100	20,310	104	22,118	113	26,160	134	32,370	166
		1종	14,958	100	16,075	107	17,917	120	21,482	144	26,103	175
		2종	4,537	100	4,235	93	4,201	93	4,678	103	6,267	138
입원	보험	44,369	100	46,787	105	54,528	123	59,308	134	65,299	147	
	급여	소계	8,627	100	8,998	104	10,264	119	12,391	144	15,221	176
		1종	7,174	100	7,694	107	8,880	124	10,823	151	13,027	182
		2종	1,453	100	1,304	90	1,384	95	1,568	108	2,194	151
외래	보험	88,083	100	93,255	106	96,454	110	102,574	116	112,335	128	
	급여	소계	7,398	100	7,631	103	7,859	106	8,858	120	10,771	146
		1종	5,310	100	5,678	107	6,021	113	6,908	130	8,292	156
		2종	2,088	100	1,953	94	1,837	88	1,950	93	2,418	116
약국	보험	45,743	100	50,565	111	54,354	119	61,677	135	70,333	154	
	급여	소계	3,470	100	3,681	106	3,996	115	4,911	142	6,439	186
		1종	2,474	100	2,703	109	3,016	122	3,751	152	4,784	193
		2종	996	100	978	98	980	98	1,160	116	1,655	166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 (천원)	보험	384	100	409	106	436	113	472	123	523	136	
	급여	소계	1,297	100	1,430	110	1,521	117	1,711	132	1,838	142
		1종	1,798	100	1,939	108	2,066	115	2,337	130	2,620	146
		2종	676	100	716	106	716	106	767	114	819	121

□ 의료급여의 총 진료비는 2005년 기준 약 3조2천억원으로 2001년 대비 약 66%(1.7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 39%(1.4배)를 상회

<표 4-4> 의료급여의 신규 대상자(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전환)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대상자수 (명)	의료급여 총 대상자수		1,528,848	1,767,885
	신규 대상자수	소계	17,492 (1.14%)	154,605 (8.74%)
		입양아동 및 희귀질환자(1종)	4,469	20,281
		12세미만아동 및 만성질환자(2종)	13,023	134,324
의료비 (천원)	의료급여 총 진료비		2,616,104,675	3,237,171,723
	신규 대상자 진료비	소계	10,746,718 (0.41%)	217,427,219 (6.72%)
		희귀질환(1종)	6,824,105	111,332,005
		만성질환(2종)	3,922,612	93,640,918
		아동(2종)	-	12,454,296

자료: 김세라, 의료급여 종합대책 마련, 2006.

□ <표 4-4>에서와 같이 2005년 말 기준 적용대상자 기준 확대를 통해 신규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총 154,605명(전체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의 약 8.7%)으로 1년간 사용한 총 의료비는 약 2천2백억원(의료급여 총진료비의 약 6.7%)에 해당함.

- 신규 적용대상자의 의료비는 총 진료비의 약 6.7% 수준이나, 의료급여 총 진료비 증가분의 약 35%에 해당함.

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비교

1) 적용인구 1인당 총 진료비

□ 2005년도 기준 보정된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5만원이고(보정 전 : 약

53만원) 의료급여가 192만원으로 약 2.6배 높음.

- 의료급여2종의 1인당 진료비는 80만원으로 건강보험의 1인당 진료비 75만원과 비슷하나, 의료급여1종과 건강보험의 1인당 진료비 차이는 매우 큼(약 3.6배).

〈표 4-5〉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 1인당 총 진료비

(단위 :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의료급여	계	1,185	1,370	1,518	1,730	1,922
	1종	1,759	1,961	2,138	2,421	2,729
	2종	526	586	619	693	802
건강보험*		509	566	622	679	750

주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간 연령구조 차이를 보정한 1인당 진료비, 김세라, 의료급여 종합대책 마련, 2006.

2) 동일 연령대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 입원일수 : 의료급여2종의 경우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령대별로는 건강보험 대비 96%~117% 수준임. 의료급여1종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비해 평균 약 1.7배 이상 높고 연령대별로는 1.3배~2배 수준으로 12세미만과 노동인구인 18~49세 연령대에서 입원일수가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 총 진료비 : 의료급여2종의 경우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102%)이나 의료급여1종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비해 평균 약 1.5배 이상 높고 17세미만과 18~49세 연령대의 총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2배~2.5배).

〈표 4-6〉 연령별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2003년)

(단위: 건, 일, 원)

구분	건강보험(A)	의료급여		B/A(%)	C/A(%)	
		1종(B)	2종(C)			
12세미만	진료건수	402,265	10,190	3,991	2.5	1.0
	입원일수	7.57	14.83	8.12	195.9	107.3
	총진료비	786,155	1,981,145	902,705	252.0	114.8
12-17세	진료건수	79,585	4,416	2,194	5.5	2.76
	입원일수	7.44	12.93	8.17	173.8	109.8
	총진료비	851,930	2,095,202	915,855	245.9	107.5
18-49세	진료건수	1,290,585	51,621	18,953	4.0	1.47
	입원일수	9.20	18.35	10.77	199.5	117.1
	총진료비	994,730	2,105,304	1,200,580	211.6	120.7
50-64세	진료건수	659,178	45,518	12,861	6.9	1.95
	입원일수	12.55	20.70	13.82	164.9	110.1
	총진료비	1,614,067	2,107,946	1,575,536	130.6	97.6
65세이상	진료건수	775,031	122,056	6,842	15.7	0.88
	입원일수	14.49	18.64	13.86	128.6	95.7
	총진료비	1,809,931	1,818,848	1,580,673	100.5	87.3
전체	진료건수	3,206,644	233,801	44,841	7.3	1.4
	입원일수	11.79	18.70	11.75	171.3	99.7
	총진료비	1,289,366	1,950,672	1,325,675	151.3	102.8

〈표 4-7〉 의료보장 유형별, 의료급여 자격종별 진료비 비교

(단위 : 건, 일, 원)

구분		적용인구1인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적용인구1인당 청구건수	건당 내원일수		
의료보장 종별	전체	건강보험	25.29	0.94	22,064
		의료급여	27.54	2.05	32,513
	입원	건강보험	0.12	9.52	116,413
		의료급여	0.82	18.37	57,452
	외래	건강보험	16.75	0.84	16,821
		의료급여	11.89	2.24	22,851
	약제	건강보험	8.42	1.00	17,586
		의료급여	14.83	1.00	24,578
의료급여 수급종별	전체	1종	33.62	2.22	35,038
		2종	19.63	1.67	25,006
	입원	1종	1.23	18.84	56,380
		2종	0.28	15.71	64,762
	외래	1종	14.41	2.33	24,801
		2종	8.60	2.04	18,000
	약제	1종	17.98	1.00	26,640
		2종	10.74	1.00	20,085

주: 1) 적용인구1인당 내원일수 = 적용인구1인당 청구건수 × 건당 내원일수

2) 통계곤란한 요소(인구구조 변동,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를 보정한 값

자료: 김세라, 의료급여 종합대책 마련, 2006.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간의 연령 및 상병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동일 연령대 및 동일 상병별로 입원일수 및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의료급여1종과 건강보험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의료급여2종은 대체적으로 건강보험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인구(연령)구조,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통계곤란한 요인들을 보정한 후에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진료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1종의 진료비가 매우 큼.

라. 최근 진료비 급증 원인

- 수급권자 증가 ('02년 대비 25.0%) : 차상위 만성, 희귀질환 보유자 및 12세 미만 아동에게 수급권 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가
 - 인구 구조의 변화 : 진료비 소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 질환 구성의 변화 : 정신질환, 희귀질환, 만성질환 보유자들의 증가
 - 수가 인상 : 8.9%(2002년 대비)
 - 급여 확대 : 3대 중증질환(암, 뇌혈관계, 심혈관계)의 본인부담 인하,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 면제,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MRI, 인공와우 등 고가 소요 장비의 급여화, 희귀질환 수 확대 등
 - 수진율 증가 : 1인당 수진율 및 내원일수 증가
 - 기타
- * 진료비 급증 관련 특이 현상
- 약국의 청구액 급증 : 31.2%('04년 대비)
 - 지자체간 진료비 격차 큼 : 부산, 울산, 경남이 집중적으로 높음(최대 1인당 73만원 차이)

2. 문제점

가. 재정 관련 의료급여제도의 기존 문제점

- 365일 진료일수 상한제 유명무실 : 지자체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365일 연장 승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하면 서면심의에 의해 거의 100% 연장 되고 있음.
- 1종 외래 본인부담이 없어 남용 가능성이 제도화 되어 있음(본인부담이 없는 제도는 OECD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자발적 절감 유인 부재
- 입원시 생계의 이중 급여(3달 이상 입원시만 차감) : 장기 입원 유도
- 인별, 기관별 관리방안 부재
 - 수급자 개인별 진료실적에 대한 D-base 구축 절실
 - 요양기관별 진료내역 및 청구실적에 대한 D-base 구축 필요
- 지자체 단위의 관심 부족 : 기금 부담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배치의 취지 상실 : 사례 관리를 위하여 배정된 요원이 기존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하는 실정임.

나.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고려해야할 문제점

- 비용조장적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개편 필요
- 3차 진료기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도록 되어 있음(공급이 수요를 낳는다는 Say's Law 적용).

다. 보장성의 한계

- 본인부담액이 1년에 1백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약 3만명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진료에 대한 Need가 있음에도 과도한 본인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 건강보험과 급여범위가 거의 비슷하되 경증질환은 본인부담(비급여 포함)이 거의 없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남용가능성이 있고 반면 중증질환은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질환 이환시 생계 유지 곤란

3. 내실화 방안

- 방향
 - 최근의 재정 급증은 타당한 이유가 있음.
 - 그러나 기존 제도의 비합리적(365일 연장 승인제 등), 비효율적(1종 외래 본인부담 면제 등)인 부분은 제도 개선 필요
 -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료급여의 과도한 재정급증은 경계해야 함.
 - 국가 재정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다소간 차별성 용인 필요
- 원칙
 - 의료보장 확보
 - 재정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부문 재정확대의 균형 도모

〈표 4-8〉 세부 개선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비고
365일 연장 승인제	- 365일 이후 진료일수는 건강보험에 준하여 선 본인부담케 하고 사후 승인(지자체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을 통하여 환불 방식 적용(프랑스, 싱가포르 등) : 카드제 도입후 실시	
1종 외래 본인부담 면제	- 1종 수급자에게도 2종의 외래 본인부담제 실시(미국의 Medicaid에서도 최하 1\$에서 5\$까지 외래 본인부담 실시)	
입원시 생계의 2중 급여	- 입원일에 해당하는 만큼 생계급여 공제	
인별, 기관별 관리방안 부재	- 개인별 진료내역에 관한 D-base를 구축하여 해당 보장기관에 매일 통보함으로써 보장기관에서 개인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요양기관별 진료실적에 관한 D-base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청구를 하는 기관에 대해 경고 및 실사 실시	
지자체 단위의 관심 부족	- 현재 기금 부담을 하지 않는 모든 지자체에 기금 부담 의무화 -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인상(서울 : 50%→60%, 기타 20%→30%)	
사례관리요원 취직 무색	-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토록 의무화하고 매월 100명씩 집중 관리하되 연간 1인당 400명 관리 의무화(매월 관리 내역 및 성과 보고 의무화) : 보상체계 작동 -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	
지불보상시스템 및 전달체계	- 요양 기관 계약제 도입 -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국공립기관에 1차 진료 의무화	중 장 기 검토 과제
약제비 급증	- 최근 약제비 급증 원인 별도의 원인분석 필요 - 동등성 실험을 통과한 약제의 경우 copy약 처방 의무화(미국의 Medicaid에서도 의무적으로 Copy약 처방을 의무화하고 Original을 처방받고자 하는 수급자에게는 그 차액만큼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음.)	
지자체간 진료비 격차	- 부산, 울산, 경남 집중관리(심평원 및 사례관리사 동시 동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실시	- 중증질환의 비급여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상제 도입	
기타	- 매년 진료비 관련 평가를 통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 실시	

4. 주요 쟁점

- 수급자 선정 기준 : 개별급여 적용시 선정기준 변경
 - Medically Needy 계층 : 1종
 - PL 이하 근로 무능력자 : 2종
 - PL 이하 근로 유능력자 : 건강보험으로 전환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관계
 - 건강보험의 급여율이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2010년대 초반까지 별도로 운영하되 급여율 80% 시점을 전후하여 건강보험과 통합
- 차상위 계층 확대 계획(임산부, 장애인 등)
 - 희망한국 계획 예정대로 진행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간 급여범위
 - 의료급여제도의 급여범위가 최소한 건강보험보다 같거나 넓어야 함.
 - 다만 의료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Copy약 처방, 전달체계의 의무화 등의 조건으로 차별화
- 전달체계 :
 -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여 공급자에 대한 통제 기능 강화
- 지불 보상체계
 - 건강보험과 같이 논의 필요

[제 4 회 회 의 록] 의 료 급 여 제 도 내 실 화 방 안

□ 의 견 및 토 론

○ 건강보험관련 제도의 당면 문제

- 지출문제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음. 내년도 25조 정도 필요하다고 추산되고, 보험료를 10% 올려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논의 등이 나오고 있음.
- 현재 운영되는 제도를 보았을 때, 의료급여의 경우 발표자 발표문대로 진행을 하면 제도의 건강성,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는 적당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임.
- 건강보험의 경우 2012년 정도면 과연 이 제도가 유지가 가능한지 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음.

○ 의료급여 관련 문제

- 의료급여 증가의 원인이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인지, 공급자 요인에 의해서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례로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2004년 1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에서 전환한 사람을 이용행태(전환 1년 전후)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1인당 진료비가 78만원 정도 차이, 건강부담금 150만원, 입내원일수 건강보험일 때 84일에서 의료급여일 때 101일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이러한 의료이용 행태를 볼 때,

현재의 의료급여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의료급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수급권자에게 일정정도 책임부담을 시키는 것, 2) 수급권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 문제

- 근로능력자를 건강보험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음.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 조세부담률에 비해 역진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이들을 건강보험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며(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 오히려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단계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주치의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서 재정절감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좋다고 보임.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율이 80%되는 시점에 건보와의 통합이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시스템이 유사한 상태에서 ‘통합’을 하는데, 보장률 수준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의문이 듦. 현재 만약 통합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list up하고, 제도의 통합이 무리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Q & A

- 실제 의료서비스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궁금함.

▶▶ 발표자 답변

- 사각지대의 경우 건강보험 체납세대(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현재 약 200만 세대)가 대표적인데, 1) 제도 저항, 2) 생계형 체납으로 구분할 때 생계형 체

납은 30%임. 1)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험료 경감, 당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경우 성실납부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체납자의 직업 분포를 보았는데,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들이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었음.

- 데이터와 관련해 Dbase 구축이 미비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1-2년 사이에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닌데 계속 제기되는 것이 의아함.

▶▶ 발표자 답변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를 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의 미비와 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실정임.

□ 발표자 종합 정리

- 현재 90% 이상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는데, 실제 병원에 가는 횟수는 이에 못 미치기 때문임.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사회보험 내에서 소득분배의 기능을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불만이 높은 제도가 건강보험임. 현재 건강보험 급여율은 65%, 의료보험의 경우 1종은 80%(2종은 70%)임. 이러한 급여율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제도의 통합을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커질 수 있음.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보장성이 80% 되는 시점이 건보와의 통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임.
-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과 관련해 발표자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함.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급여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음.

제5회 빈곤포럼

〈주제 및 발표자〉

- 1주제: 빈곤 및 불평등 동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2주제: 가구주 특성별 빈곤상태의 변화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시: 2006. 11. 24(금). 15:00 ~ 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 좌장: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 토론자

〈원외〉

김용성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

〈원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팀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팀장)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주 제 : 빈곤 및 불평등 동향 *

김태완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계획

- 지난 70,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지 못함.
 - 90년대 들어 분배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동 시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는 지난 시기 경제위기를 전후로 수많은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경제위기 전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불평등 및 빈곤의 변화만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 및 불평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의 빈곤율 등 빈곤관련 통계는 연구자마다 기준이 다양하여, 대표적인 하나의 빈곤통계가 제시되지 못 하였음.
 - 빈곤선의 설정방법, 소득 및 지출,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및 미적용, 대상자 범위 등

* 본 원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에서 진행 중인 『2006년 빈곤통계 연보』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

에서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관심 및 정책적인 중요성은 증가하였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빈곤 및 불평등자료에 대한 생산은 이루어지지 못함.
 - 본 연구는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의 인식하에 본 연구원의 국민기초보장평가센터의 주요한 과제중 하나인 「2006년 빈곤통계연보」의 한 부문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될 연구주제중 하나임.
 - 즉, 단년만 이루어지는 연구과제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통계적인 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적인 논의는 본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기고자 함.

나. 연구방법

-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통계는 기존 국내외 문헌 등에서 많이 분석되고 사용되어온 빈곤 및 불평등지표를 이용하고자 함.
 - 분석전에 국내외 주요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파악하고자 함.
- 분석자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와 통계청에서 승인을 얻고,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함.

다. 주요연구내용

1)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빈곤통계연보」가 처음 발간되는 시기로 장기적인 분석을 하기 보다는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추정방법과 기타 사회변수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즉, 장기적인 빈곤 및 불평등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초기에 기본적인 개념정립이 필요함.
- 추정방법이 정확히 설정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기준으로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분석시기

- 1995~2005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연(年) 및 분기(分期)별 분석을 시도함.
- 이를 위한 기초 분석 자료는 1995~2002년까지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2003~2005년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고자 함.

〈표 5-1-1〉 도시가계 및 가계조사 구분

조사구분연도		도시가계		가계조사		
		2002년 이전		2003년 이후		
조사범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외 가구		읍면을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외 가구		
표본수		연기준 약 6만가구		연기준 약 8만 5천가구		
자료계 공	도시	구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근로자	○	○	○	○
	근로자 외	×	○	○	○	
	읍면	근로자	×	×	○	○
		근로자 외	×	×	○	○
1인 및 농어가가구		×	×	×1	×1	

주: 1) 2005년도 1인가구에 대한 샘플조사가 실시되어 통계청자체내에는 보유하고 있으나, 샘플조사라는 한계로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음. 그러나 2006년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지출자료 제공, 현재 통계청 2006년 보도자료에서는 1인가구사항을 발표하고 있음. 단 농어가가구는 제외됨.

- 통계청 자료 중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 도시가

계의 단점은 1인 가구 및 농어가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며,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 가구만 제공되었음.

- 2003년 가계조사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및 농어가가구는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반면에 근로자 외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지출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 통계청 자료를 이용, 1990년대 이전 즉 1980년대 분석시 1988년 이전의 통계청 도시가계자료의 경우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즉, 가중치의 개념하에서 1988년 이전과 이후가 단절되는 단점이 있음.

□ 분석대상

- 전체 분석자료와 여성가구주, 아동 및 노인에 따른 빈곤분석을 시도
- 빈곤지수의 분석단위는 인구와 가구를 동시에 분석함. 불평등지수의 경우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분석
 - 빈곤지수의 분석시 인구와 가구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함.

□ 빈곤 및 불평등 통계이외에 연구에서는 경제 및 사회복지통계를 포함함.

- 경제통계로는 1인당 GDP, 경제성장율, 수출입, 기초노동통계(경활인구, 실업률 등), 인구관련 통계(출산율, 사망률 등) 등
- 복지통계로는 사회복지지출 관련 통계, 기초보장수급자 관련 통계, 장애, 노인 및 아동관련 통계 등 임.

2) 빈곤 및 불평등 분석틀

가) 빈곤 및 불평등지수

□ 빈곤지수로는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및 센지수를 추정함.

-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UNDP, 혹은 여러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FGT지수(-제공 빈곤갭비율)를 포함할 예정

- 빈곤지수를 측정함에 따른 논의사항
 - 절대적 빈곤지수를 산출시 가구원수별 빈곤선을 사용할 경우, 이론상 빈곤율과 소득갭비율의 곱이 빈곤갭비율로 도출되어야 하나 계산시 편의가 발생함¹⁾.
 - 위와 같은 문제는 빈곤층에 적용되는 빈곤선과 전체 계층에 적용되는 빈곤선의 차이에 의한 것. 따라서 동일한 빈곤선이 적용되는 상대빈곤선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소득분배 및 불평등지표

- 소득분배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5분위, 10분위 및 분위수 배율(Percentile)을 이용함.
- 불평등지수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 및 앳킨슨지수를 이용하여, 앳킨슨지수의 ϵ 값은 0.5와 1을 기준으로 함.
-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기준의 값을 이용함($Ey_i = y_i / (\text{가구원수})^\epsilon$, $\epsilon=2$).
- 소득분배 및 불평등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논의사항
 - 첫째, 소득분배를 계산하는데 있어 소득점유율 추정시, 계층간 합을 이용하는 방법과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위 문제는 현재 통계청 자료가 가구개념이므로 이를 개인개념으로 전환시 분위간 자료수의 차이가 발생함. 즉, 분위별로 분석 대상수가 고루게 분포되지 않고 달리 분포됨에 따른 문제(부록 4 참조)
 - 둘째, 불평등지수 추정시, 로그를 이용한 분배지수의 경우 소득(혹은 지출)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처리방법

나) 소득과 지출

- 분석의 기준으로 2006년에는 소득을 이용함. 분석대상 소득으로는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경상소득-조세-사회보장분담금)을 기준으로 함.
 - 2006년 분석에서 지출은 제외함.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출도 분석대상이 포

1) $PGR = HR \times IGR$ (PGR: 빈곤갭비율, HR: 빈곤율, IGR: 소득갭비율)

함하여 발표할 예정임.

- 국내외 여러 학자 혹은 세계은행, UNDP 등에서는 소득에 비해 지출을 기준으로 빈곤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소득과 관련한 논의사항

- 우리나라 소득자료의 특성상 소득이 “0”이거나, 가처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음의 소득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함. 이들 자료를 포함해 분석하는 경우, 빈곤지수에서는 빈곤갭에서 불평등지수에서는 소득점유율 및 로그를 이용한 불평등지수(대수편차평균, 앳킨수지수)의 경우 문제가 발생
-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음. 첫째, 음수 및 “0”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둘째 음의 소득을 모두 “0”이나 그 이상의 작은 값으로 전환, 셋째 Outlier 라는 개념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음.

다) 빈곤선 설정방법

□ 절대적 빈곤선은 2006년에는 두 가지 빈곤선을 이용함. 첫 번째는 정부가 1999년 이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함에¹⁾ 따라 이를 기준으로 분석함.

- 두 번째는 계측년도간 동일한 삶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원이 최저생계비를 측정한 계측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비계측년도간의 빈곤선을 설정함.
- 위의 방법이외에 절대적 빈곤선은 특정연도의 삶의 수준을 보장한다는 개념하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설정이 가능함.
- 동 방법을 이용해 절대빈곤을 측정시, 통계청 자료의 한계에 따른 문제 발생. 즉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0년 혹은 200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절대빈곤 추정시 1980년대의 빈곤지표들이 매우 높게 나타남.

1) 정부발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2000년부터 발표되었으나, 2000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1999년 계측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이용함.

- 특정연도에는 70~80%까지 높아짐. 따라서 동 기준을 설정시 기간을 나누어 측정하거나, 80년대는 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상대적 빈곤선

- 중위소득의 40, 50, 60%를 사용함.
- 국제기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평균소득의 40, 50, 60%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평균소득의 경우 극단치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써 값에 편의를 유발할 수 있어 중위소득을 사용함.

□ 빈곤선의 포함 여부

- 빈곤선은 이하가 아닌 미만의 개념을 적용함. 이하와 미만은 빈곤갭을 계산하는데 있어 고려할 수 있음. 즉 빈곤선에 있는 사람의 빈곤갭은 “0”이 됨으로써 이를 빈곤한지 안하지의 판단문제 발생.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만을 사용함.

2. 빈곤

가. 절대빈곤: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1) 인구기준

가) 연간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9	8.55	33.08	2.83	8.19	32.08	2.63	9.35	32.29	3.02
2000	6.90	31.92	2.20	6.42	30.44	1.95	7.61	31.16	2.37
2001	5.82	31.43	1.83	5.25	30.28	1.59	6.50	30.36	1.97
2002	4.70	28.74	1.35	4.17	27.48	1.15	5.21	27.94	1.46
2003	5.90	36.89	2.18	5.26	36.50	1.92	6.13	36.98	2.27
2004	5.91	39.39	2.33	5.10	38.80	1.98	6.05	39.16	2.37
2005	6.78	35.80	2.43	5.70	33.17	1.89	6.54	34.45	2.25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1.68	53.38	6.23	9.97	46.57	4.64	11.11	46.65	5.18
2004	11.58	52.25	6.05	9.61	45.67	4.39	10.83	45.93	4.98
2005	12.74	51.20	6.52	10.51	43.68	4.59	11.68	44.29	5.17

나) 분기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9	1	9.70	32.38	3.14	10.74	32.41	3.48
	2	8.91	32.44	2.89	10.57	32.44	3.43
	3	7.30	32.96	2.41	8.14	33.20	2.70
	4	6.90	30.27	2.09	7.98	31.01	2.48
2000	1	7.90	31.48	2.49	8.90	32.05	2.85
	2	6.08	29.45	1.79	7.72	30.96	2.39
	3	5.99	29.56	1.77	6.73	30.92	2.08
	4	5.69	30.96	1.76	7.10	30.48	2.16
2001	1	6.60	31.18	2.06	7.80	30.40	2.37
	2	5.51	30.48	1.68	7.10	30.27	2.15
	3	4.83	28.91	1.40	5.85	29.55	1.73
	4	4.04	30.18	1.22	5.22	31.35	1.64
2002	1	4.21	28.28	1.19	5.15	29.25	1.51
	2	4.39	26.01	1.14	5.33	26.76	1.43
	3	4.21	28.15	1.18	5.22	27.55	1.44
	4	3.86	27.56	1.06	5.14	28.23	1.45
2003	1	5.49	37.27	2.05	6.27	37.46	2.35
	2	5.42	39.51	2.14	6.15	40.33	2.48
	3	5.10	38.01	1.94	6.10	38.02	2.32
	4	5.03	30.76	1.55	6.01	31.89	1.92
2004	1	5.70	39.84	2.27	6.53	40.37	2.64
	2	4.34	35.20	1.53	5.56	34.94	1.94
	3	4.77	36.18	1.73	5.68	36.56	2.08
	4	5.61	42.80	2.40	6.44	43.94	2.83
2005	1	6.85	38.34	2.63	7.66	39.04	2.99
	2	6.05	31.70	1.92	6.96	33.42	2.33
	3	5.09	31.73	1.62	6.03	32.56	1.96
	4	4.82	29.21	1.41	5.52	31.46	1.74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	11.06	47.37	5.24	12.08	47.23	5.70
	2	9.97	47.27	4.71	10.96	47.78	5.23
	3	9.94	46.78	4.65	11.23	46.75	5.25
	4	8.86	44.48	3.94	10.15	44.57	4.53
2004	1	10.54	47.87	5.04	11.62	47.90	5.57
	2	9.01	44.00	3.96	10.26	44.03	4.52
	3	9.42	43.56	4.11	10.68	44.24	4.73
	4	9.44	46.90	4.43	10.77	47.27	5.09
2005	1	11.91	46.18	5.50	12.97	46.80	6.07
	2	10.43	42.77	4.46	11.60	43.20	5.01
	3	9.97	43.32	4.32	11.34	44.01	4.99
	4	9.71	41.92	4.07	10.78	42.71	4.60

2) 가구기준

가) 연간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9	8.44	33.32	2.81	8.07	32.28	2.60	9.17	32.52	2.98
2000	6.90	32.41	2.24	6.40	30.69	1.97	7.58	31.40	2.38
2001	5.78	31.89	1.84	5.21	30.78	1.60	6.42	30.86	1.98
2002	4.67	29.10	1.36	4.13	27.80	1.15	5.15	28.10	1.45
2003	6.08	37.71	2.29	5.38	37.18	2.00	6.20	37.93	2.35
2004	5.97	40.47	2.42	5.17	39.80	2.06	6.05	40.32	2.44
2005	6.73	35.84	2.41	5.66	33.44	1.89	6.45	34.65	2.24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3.33	55.88	7.45	11.17	47.99	5.36	12.30	48.19	5.93
2004	13.12	54.47	7.14	10.69	46.82	5.00	11.89	47.19	5.61
2005	14.32	53.76	7.70	11.68	45.22	5.28	12.84	45.77	5.88

나) 분기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9	1	9.42	32.79	3.09	10.42	32.69	3.41
	2	8.87	32.32	2.87	10.40	32.58	3.39
	3	7.12	33.54	2.39	7.92	33.71	2.67
	4	6.91	30.30	2.10	7.99	31.05	2.48
2000	1	7.93	31.45	2.49	8.85	32.17	2.85
	2	6.04	30.71	1.85	7.71	31.65	2.44
	3	6.04	30.32	1.83	6.79	31.61	2.15
	4	5.62	30.00	1.69	6.98	29.92	2.09
2001	1	6.44	31.61	2.04	7.61	30.91	2.35
	2	5.47	30.69	1.68	6.99	30.74	2.15
	3	4.90	29.59	1.45	5.91	30.18	1.78
	4	4.00	31.01	1.24	5.17	31.71	1.64
2002	1	4.31	28.78	1.24	5.25	29.30	1.54
	2	4.16	26.84	1.12	5.09	27.22	1.39
	3	4.23	27.80	1.18	5.20	27.55	1.43
	4	3.82	27.74	1.06	5.05	28.31	1.43
2003	1	5.85	37.17	2.18	6.60	37.65	2.49
	2	5.45	40.58	2.21	6.17	41.30	2.55
	3	5.14	38.83	2.00	6.03	39.39	2.38
	4	5.05	31.72	1.60	5.98	33.18	1.98
2004	1	5.69	41.58	2.37	6.43	42.29	2.72
	2	4.41	36.35	1.60	5.55	35.90	1.99
	3	4.92	37.87	1.86	5.78	38.51	2.23
	4	5.66	42.43	2.40	6.44	43.85	2.82
2005	1	6.81	38.15	2.60	7.56	38.90	2.94
	2	5.91	32.20	1.90	6.78	33.46	2.27
	3	5.05	31.98	1.61	5.94	32.96	1.96
	4	4.89	30.01	1.47	5.55	32.24	1.79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	12.36	48.73	6.02	13.39	48.59	6.51
	2	11.26	48.63	5.48	12.25	49.08	6.01
	3	11.07	47.89	5.30	12.33	48.09	5.93
	4	9.95	46.43	4.62	11.22	46.81	5.25
2004	1	11.68	49.10	5.73	12.70	49.31	6.26
	2	10.09	45.33	4.57	11.31	45.38	5.13
	3	10.47	45.19	4.73	11.74	45.84	5.38
	4	10.52	47.34	4.98	11.81	48.02	5.67
2005	1	13.08	47.16	6.17	14.11	47.82	6.75
	2	11.54	44.53	5.14	12.66	44.90	5.68
	3	11.08	44.73	4.96	12.54	45.30	5.68
	4	11.01	44.11	4.86	12.05	44.76	5.39

나. 절대빈곤: 동일비율 최저생계비기준

1) 인구기준

가) 연간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5	4.85	30.31	1.47	4.71	30.26	1.43	5.24	30.01	1.57
1996	4.59	29.71	1.36	4.50	29.56	1.33	4.95	30.24	1.50
1997	4.05	33.26	1.35	3.90	33.56	1.31	4.79	30.68	1.47
1998	7.79	38.07	2.97	7.62	37.28	2.84	8.90	36.00	3.20
1999	8.55	33.08	2.83	8.19	32.08	2.63	9.35	32.29	3.02
2000	7.02	32.15	2.26	6.56	30.54	2.00	7.92	30.69	2.43
2001	6.16	31.16	1.92	5.57	30.00	1.67	6.95	29.86	2.08
2002	5.16	28.09	1.45	4.61	26.80	1.23	5.76	27.20	1.57
2003	6.35	36.63	2.32	5.71	35.98	2.05	6.69	36.26	2.43
2004	6.48	38.55	2.50	5.68	37.51	2.13	6.71	37.90	2.55
2005	6.80	35.95	2.44	5.73	33.29	1.91	6.60	34.44	2.27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2.31	52.40	6.45	10.62	45.69	4.85	11.83	45.81	5.42
2004	12.28	51.35	6.30	10.34	44.78	4.63	11.64	45.08	5.25
2005	12.77	51.22	6.54	10.53	43.74	4.61	11.72	44.29	5.19

나) 분기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5	1	5.58	31.42	1.75	6.25	30.32	1.90
	2	4.85	30.73	1.49	5.36	30.61	1.64
	3	4.16	30.48	1.27	4.61	29.50	1.36
	4	4.26	27.97	1.19	4.73	29.38	1.39
1996	1	5.78	33.14	1.92	6.14	34.70	2.13
	2	4.16	28.26	1.18	4.87	27.51	1.34
	3	3.91	28.31	1.11	4.15	29.18	1.21
	4	4.13	26.98	1.12	4.64	28.11	1.30
1997	1	4.87	33.56	1.63	5.72	30.90	1.77
	2	3.84	32.69	1.26	4.84	30.09	1.46
	3	3.14	33.60	1.05	3.87	30.14	1.17
	4	3.76	34.40	1.29	4.72	31.46	1.48
1998	1	7.23	41.95	3.03	8.02	40.93	3.28
	2	7.64	37.43	2.86	9.34	35.85	3.35
	3	8.34	36.10	3.01	9.60	34.44	3.31
	4	7.29	33.71	2.46	8.65	33.17	2.87
1999	1	9.70	32.38	3.14	10.74	32.41	3.48
	2	8.91	32.44	2.89	10.57	32.44	3.43
	3	7.30	32.96	2.41	8.14	33.20	2.70
	4	6.90	30.27	2.09	7.98	31.01	2.48
2000	1	8.04	31.69	2.55	9.07	32.19	2.92
	2	6.18	29.71	1.84	8.17	30.01	2.45
	3	6.16	29.49	1.82	6.99	30.51	2.13
	4	5.84	30.94	1.81	7.45	29.78	2.22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1	1	7.02	30.77	2.16	8.29	30.10	2.49
	2	5.84	30.18	1.76	7.56	29.92	2.26
	3	5.11	28.81	1.47	6.21	29.30	1.82
	4	4.29	29.90	1.28	5.72	30.06	1.72
2002	1	4.69	27.28	1.28	5.81	27.82	1.61
	2	4.76	26.01	1.24	6.03	25.57	1.54
	3	4.71	27.08	1.27	5.63	27.50	1.55
	4	4.27	26.86	1.15	5.56	28.04	1.56
2003	1	6.07	36.01	2.18	7.05	35.70	2.52
	2	5.76	39.39	2.27	6.69	39.32	2.63
	3	5.52	37.42	2.07	6.53	37.82	2.47
	4	5.48	30.79	1.69	6.49	32.05	2.08
2004	1	6.26	38.91	2.44	7.37	38.34	2.83
	2	4.92	33.79	1.66	6.12	34.48	2.11
	3	5.38	34.84	1.87	6.24	36.03	2.25
	4	6.17	41.42	2.56	7.14	42.10	3.00
2005	1	6.90	38.34	2.65	7.74	38.93	3.01
	2	6.08	31.83	1.93	7.05	33.31	2.35
	3	5.09	31.99	1.63	6.09	32.49	1.98
	4	4.84	29.36	1.42	5.52	31.76	1.75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	11.83	46.27	5.47	12.93	46.13	5.96
	2	10.55	46.64	4.92	11.72	46.64	5.46
	3	10.56	46.07	4.86	11.88	46.22	5.49
	4	9.52	43.44	4.14	10.78	44.05	4.75
2004	1	11.28	46.99	5.30	12.50	46.82	5.85
	2	9.67	43.40	4.20	10.99	43.53	4.78
	3	10.22	42.61	4.36	11.45	43.71	5.00
	4	10.18	45.82	4.66	11.64	46.03	5.36
2005	1	11.95	46.19	5.52	13.04	46.71	6.09
	2	10.44	42.89	4.48	11.67	43.13	5.03
	3	9.99	43.37	4.33	11.39	44.00	5.01
	4	9.74	41.98	4.09	10.78	42.87	4.62

2) 가구기준

가) 연간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5	4.59	31.36	1.44	4.46	31.31	1.40	4.96	30.93	1.53
1996	4.37	30.73	1.34	4.29	30.60	1.31	4.71	31.22	1.47
1997	3.91	34.09	1.33	3.80	34.31	1.30	4.63	31.49	1.46
1998	7.58	38.73	2.93	7.41	37.97	2.81	8.63	36.69	3.17
1999	8.44	33.32	2.81	8.07	32.28	2.60	9.17	32.52	2.98
2000	7.01	32.62	2.29	6.55	30.75	2.01	7.89	30.91	2.44
2001	6.12	31.53	1.93	5.53	30.42	1.68	6.87	30.27	2.08
2002	5.13	28.38	1.46	4.56	27.09	1.24	5.68	27.41	1.56
2003	6.56	37.27	2.44	5.85	36.52	2.14	6.74	37.20	2.51
2004	6.52	39.64	2.59	5.72	38.54	2.20	6.67	39.10	2.61
2005	6.73	36.04	2.43	5.68	33.53	1.90	6.50	34.61	2.25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4.05	54.71	7.68	11.88	47.07	5.59	13.05	47.38	6.18
2004	13.80	53.76	7.42	11.43	46.09	5.27	12.68	46.54	5.90
2005	14.33	53.79	7.71	11.68	45.26	5.29	12.86	45.79	5.89

나) 분기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1995	1	5.17	32.34	1.67	5.78	31.16	1.80
	2	4.53	32.30	1.46	5.04	31.78	1.60
	3	4.07	31.89	1.30	4.47	31.01	1.39
	4	4.04	28.25	1.14	4.52	29.58	1.34
1996	1	5.35	33.11	1.77	5.70	34.62	1.97
	2	4.03	29.97	1.21	4.70	29.17	1.37
	3	3.84	29.97	1.15	4.06	30.70	1.25
	4	3.92	28.44	1.11	4.37	29.50	1.29
1997	1	4.66	34.03	1.58	5.42	31.57	1.71
	2	3.81	33.80	1.29	4.71	31.37	1.48
	3	3.11	34.11	1.06	3.85	30.53	1.18
	4	3.62	35.40	1.28	4.53	32.35	1.47
1998	1	7.15	43.30	3.09	7.87	42.43	3.34
	2	7.41	38.31	2.84	9.05	36.50	3.30
	3	7.95	35.89	2.85	9.15	34.32	3.14
	4	7.15	34.47	2.46	8.46	34.00	2.88
1999	1	9.42	32.79	3.09	10.42	32.69	3.41
	2	8.87	32.32	2.87	10.40	32.58	3.39
	3	7.12	33.54	2.39	7.92	33.71	2.67
	4	6.91	30.30	2.10	7.99	31.05	2.48
2000	1	8.05	31.69	2.55	9.03	32.27	2.91
	2	6.14	30.95	1.90	8.12	30.76	2.50
	3	6.23	30.13	1.88	7.07	31.09	2.20
	4	5.78	29.92	1.73	7.33	29.24	2.14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1	1	6.90	30.95	2.14	8.09	30.53	2.47
	2	5.78	30.45	1.76	7.41	30.46	2.26
	3	5.17	29.50	1.52	6.31	29.72	1.88
	4	4.25	30.65	1.30	5.68	30.28	1.72
2002	1	4.79	27.75	1.33	5.91	27.90	1.65
	2	4.51	26.71	1.21	5.76	25.99	1.50
	3	4.68	27.07	1.27	5.57	27.67	1.54
	4	4.27	26.78	1.14	5.46	28.13	1.54
2003	1	6.48	35.88	2.32	7.32	36.32	2.66
	2	5.87	39.92	2.34	6.71	40.19	2.70
	3	5.54	38.30	2.12	6.49	38.90	2.52
	4	5.48	31.74	1.74	6.44	33.28	2.14
2004	1	6.20	40.68	2.52	7.20	40.23	2.90
	2	5.02	34.62	1.74	6.08	35.47	2.16
	3	5.48	36.68	2.01	6.32	37.89	2.40
	4	6.19	41.27	2.56	7.10	42.20	3.00
2005	1	6.84	38.14	2.61	7.64	38.70	2.96
	2	5.94	32.25	1.92	6.85	33.33	2.28
	3	5.04	32.23	1.63	5.99	32.89	1.97
	4	4.91	30.11	1.48	5.55	32.51	1.80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소득갭 비율	빈곤갭 비율
2003	1	13.22	47.48	6.28	14.24	47.63	6.78
	2	11.93	47.83	5.71	13.05	48.00	6.26
	3	11.71	47.25	5.53	13.02	47.53	6.19
	4	10.63	45.47	4.83	11.88	46.22	5.49
2004	1	12.39	48.47	6.01	13.52	48.55	6.56
	2	10.80	44.67	4.83	12.05	44.91	5.41
	3	11.28	44.31	5.00	12.50	45.42	5.68
	4	11.23	46.62	5.24	12.66	47.05	5.96
2005	1	13.09	47.17	6.18	14.17	47.71	6.76
	2	11.54	44.59	5.14	12.70	44.85	5.70
	3	11.07	44.81	4.96	12.53	45.43	5.69
	4	11.02	44.15	4.86	12.03	44.89	5.40

다. 상대빈곤

1) 인구기준

가. 연간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4.21	8.20	14.74	31.42	27.48	25.24	1.32	2.25	3.72
1996	4.88	9.40	15.75	29.66	26.98	26.64	1.45	2.54	4.20
1997	4.34	8.67	15.15	33.10	28.45	26.68	1.44	2.47	4.04
1998	6.38	10.84	17.07	39.82	34.27	31.46	2.54	3.72	5.37
1999	6.23	10.78	16.88	36.14	32.18	30.70	2.25	3.47	5.18
2000	5.70	10.19	16.60	33.44	30.21	28.74	1.91	3.08	4.77
2001	5.72	10.32	17.10	31.11	29.04	27.97	1.78	3.00	4.75
2002	5.39	10.06	16.77	27.93	27.00	26.67	1.51	2.72	4.47
2003	6.75	11.29	17.11	37.41	33.84	32.37	2.52	3.82	5.54
2004	7.57	12.33	17.98	37.23	34.17	33.48	2.82	4.21	6.02
2005	7.98	12.41	18.74	35.66	34.64	32.90	2.84	4.30	6.17

(단위: %)

구분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4.11	8.03	14.54	31.45	27.47	25.17	1.29	2.21	3.66
1996	4.84	9.24	15.82	29.55	27.18	26.29	1.43	2.51	4.16
1997	4.59	8.91	15.44	30.82	27.22	25.78	1.42	2.43	3.98
1998	6.34	10.77	17.13	38.64	33.78	31.03	2.45	3.64	5.31
1999	5.95	10.52	17.02	35.30	31.32	29.42	2.10	3.30	5.01
2000	5.40	10.00	16.33	31.33	28.44	27.77	1.69	2.84	4.54
2001	5.22	9.72	16.51	30.13	28.11	27.02	1.57	2.73	4.46
2002	4.82	9.63	16.28	26.98	25.42	25.69	1.30	2.45	4.18
2003	6.25	10.66	16.59	36.01	32.58	31.06	2.25	3.47	5.15
2004	6.77	11.59	17.54	36.28	32.54	31.71	2.46	3.77	5.56
2005	6.97	11.70	18.21	32.96	31.36	30.32	2.30	3.67	5.52

(단위: %)

구분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4.05	7.89	14.59	31.85	27.67	25.02	1.29	2.18	3.65
1996	4.83	9.13	15.60	29.61	27.20	26.33	1.43	2.48	4.11
1997	4.37	8.71	15.47	32.92	28.20	26.00	1.44	2.46	4.02
1998	6.16	10.57	16.82	40.35	34.34	31.39	2.49	3.63	5.28
1999	5.92	10.48	16.76	35.89	31.41	29.74	2.12	3.29	4.98
2000	5.22	9.63	16.09	34.17	29.90	28.09	1.78	2.88	4.52
2001	5.31	9.71	16.41	31.31	28.82	27.28	1.66	2.80	4.48
2002	4.72	9.33	16.15	28.78	26.33	25.63	1.36	2.46	4.14
2003	6.09	10.55	16.40	37.86	32.96	31.19	2.31	3.48	5.12
2004	6.65	11.08	17.24	38.32	34.22	31.97	2.55	3.79	5.51
2005	6.72	11.24	17.67	34.80	32.35	30.73	2.34	3.64	5.43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1.32	16.07	21.23	55.66	48.15	44.82	6.30	7.74	9.51
2004	12.00	16.61	22.23	52.50	47.50	44.04	6.30	7.89	9.79
2005	12.56	16.88	22.57	52.20	48.57	44.78	6.56	8.20	10.11
	경상소득기준								
2003	9.87	14.73	20.11	48.58	42.62	40.32	4.79	6.28	8.11
2004	10.34	15.00	21.05	45.74	42.01	39.12	4.73	6.30	8.23
2005	10.78	15.28	21.41	44.38	42.06	39.31	4.78	6.43	8.42
	가처분소득기준								
2003	10.11	14.63	20.18	49.04	43.89	40.80	4.96	6.42	8.23
2004	10.44	15.03	20.96	47.29	43.12	39.88	4.94	6.48	8.36
2005	10.78	15.17	21.21	45.68	42.98	39.84	4.92	6.52	8.45

나) 분기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1	4.41	7.75	14.86	32.91	30.62	25.78	1.45	2.37	3.83
	2	3.96	7.14	13.92	30.78	28.95	24.89	1.22	2.07	3.46
	3	4.13	7.97	14.79	31.58	28.21	25.49	1.30	2.25	3.77
	4	3.86	7.76	14.81	30.03	26.92	23.79	1.16	2.09	3.52
1996	1	5.63	10.18	15.81	33.08	29.52	29.38	1.86	3.00	4.65
	2	4.34	8.06	14.32	25.85	25.60	25.15	1.12	2.06	3.60
	3	5.19	9.94	16.84	27.96	26.13	25.90	1.45	2.60	4.36
	4	4.44	8.58	15.55	27.54	26.26	24.91	1.22	2.25	3.87
1997	1	5.05	9.75	16.16	33.67	29.13	28.19	1.70	2.84	4.56
	2	3.92	7.84	14.75	33.35	28.43	24.97	1.31	2.23	3.68
	3	4.77	8.75	15.40	28.55	27.61	26.13	1.36	2.41	4.02
	4	4.01	8.17	14.68	33.72	28.14	25.80	1.35	2.30	3.79
1998	1	6.68	10.76	17.11	42.45	36.97	32.88	2.84	3.98	5.63
	2	6.00	10.36	16.57	39.96	33.87	30.86	2.40	3.51	5.11
	3	6.70	11.31	17.15	36.46	32.77	31.70	2.44	3.71	5.44
	4	5.73	10.46	17.17	36.19	31.16	28.92	2.07	3.26	4.97
1999	1	6.41	11.50	17.30	37.20	31.65	31.40	2.38	3.64	5.43
	2	6.01	10.09	16.18	35.59	32.70	30.28	2.14	3.30	4.90
	3	6.06	11.13	17.76	34.31	29.81	28.79	2.08	3.32	5.11
	4	5.45	10.34	16.50	32.75	28.35	28.05	1.78	2.93	4.63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0	1	6.23	11.11	17.67	33.02	29.64	28.76	2.06	3.29	5.08
	2	4.86	9.21	15.29	29.74	27.51	26.94	1.45	2.53	4.12
	3	5.35	10.16	16.88	31.42	28.24	27.53	1.68	2.87	4.65
	4	4.95	9.51	15.94	31.81	28.22	27.15	1.58	2.68	4.33
2001	1	5.43	10.47	17.33	33.81	29.33	27.98	1.84	3.07	4.85
	2	5.06	9.11	16.05	29.98	28.61	26.20	1.52	2.61	4.21
	3	5.59	10.62	17.02	28.74	26.94	27.50	1.61	2.86	4.68
	4	4.53	9.33	16.31	28.77	25.42	24.83	1.30	2.37	4.05
2002	1	4.54	8.99	16.51	27.74	25.98	24.73	1.26	2.34	4.08
	2	4.82	0.10	16.43	25.82	24.42	25.74	1.24	2.47	4.23
	3	5.38	9.97	16.27	27.57	26.76	27.04	1.48	2.67	4.40
	4	4.84	9.14	15.86	25.64	25.46	25.34	1.24	2.33	4.02
2003	1	6.14	10.38	16.27	36.75	32.93	31.02	2.26	3.42	5.05
	2	6.10	10.19	16.41	39.37	34.81	31.50	2.40	3.55	5.17
	3	6.70	11.44	17.13	35.95	32.27	31.63	2.41	3.69	5.42
	4	6.40	10.94	16.84	30.87	30.27	30.05	1.97	3.31	5.06
2004	1	6.81	11.43	17.20	38.06	33.99	32.68	2.59	3.89	5.62
	2	5.84	10.53	16.14	32.38	29.90	30.06	1.89	3.15	4.85
	3	6.91	12.26	18.06	34.75	31.15	31.68	2.40	3.82	5.72
	4	7.31	12.02	18.46	40.38	35.36	32.88	2.95	4.25	6.07
2005	1	7.88	12.49	19.06	37.25	34.63	32.64	2.94	4.33	6.22
	2	7.19	11.58	17.75	31.70	31.54	30.86	2.28	3.65	5.48
	3	7.04	11.76	18.62	30.61	30.52	29.63	2.16	3.59	5.52
	4	6.15	11.04	17.47	30.13	28.72	28.47	1.85	3.17	4.97

(단위: %)

구분	분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1	4.23	7.74	14.42	33.05	29.52	25.69	1.40	2.28	3.71
	2	3.86	7.23	13.94	31.73	28.51	24.79	1.23	2.06	3.46
	3	4.04	8.10	14.74	31.92	27.38	25.28	1.29	2.22	3.72
	4	3.95	7.86	14.49	30.51	26.70	24.41	1.20	2.10	3.54
1996	1	5.46	9.72	15.81	35.02	31.03	29.32	1.91	3.02	4.63
	2	3.95	8.06	14.32	28.45	25.64	25.01	1.12	2.07	3.58
	3	4.96	9.54	16.67	28.86	26.77	25.88	1.43	2.55	4.31
	4	4.57	8.68	15.73	27.30	26.21	24.91	1.25	2.27	3.92
1997	1	5.05	9.53	16.43	33.46	29.43	27.43	1.69	2.80	4.51
	2	4.14	8.04	14.60	32.56	28.40	25.66	1.35	2.28	3.75
	3	4.62	8.74	15.43	29.46	27.40	25.92	1.36	2.39	4.00
	4	4.16	8.21	14.20	32.64	27.94	26.44	1.36	2.29	3.75
1998	1	6.61	10.68	16.34	42.91	36.99	33.84	2.84	3.95	5.53
	2	5.88	10.15	16.38	42.19	35.06	31.18	2.48	3.56	5.11
	3	6.24	10.84	16.92	39.24	33.60	31.54	2.45	3.64	5.34
	4	5.76	10.17	16.85	36.99	32.07	29.38	2.13	3.26	4.95
1999	1	6.44	11.09	17.14	36.87	32.31	31.18	2.37	3.58	5.34
	2	5.82	10.17	15.82	37.68	32.74	30.91	2.19	3.33	4.89
	3	5.89	10.69	17.07	35.33	30.69	29.30	2.08	3.28	5.00
	4	5.50	9.95	16.67	33.29	29.71	28.12	1.83	2.96	4.69

(단위: %)

구분	분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0	1	5.85	10.22	17.06	35.31	31.59	28.94	2.07	3.23	4.94
	2	4.66	9.01	15.02	35.72	29.56	27.89	1.67	2.66	4.19
	3	5.32	9.78	16.83	32.69	29.44	27.42	1.74	2.88	4.62
	4	4.86	9.40	15.30	33.91	28.78	28.06	1.65	2.71	4.29
2001	1	5.25	10.18	16.92	35.10	29.81	28.05	1.84	3.03	4.75
	2	5.00	9.18	15.44	32.35	29.28	27.57	1.62	2.69	4.26
	3	5.65	10.16	17.00	30.32	28.78	27.56	1.71	2.92	4.69
	4	4.73	9.87	15.99	30.98	28.26	25.84	1.47	2.51	4.13
2002	1	4.51	8.73	16.07	29.52	26.86	24.80	1.33	2.35	3.99
	2	4.68	9.57	15.88	26.88	24.99	25.73	1.26	2.39	4.09
	3	5.21	9.76	16.04	28.50	27.23	27.14	1.48	2.66	4.35
	4	4.47	9.01	15.87	30.38	26.71	25.53	1.36	2.41	4.05
2003	1	5.85	10.28	16.29	39.50	33.40	30.93	2.31	3.43	5.04
	2	6.01	10.07	15.67	40.54	34.85	32.16	2.44	3.51	5.04
	3	6.53	11.02	16.91	38.23	33.94	32.18	2.49	3.74	5.44
	4	6.31	11.11	16.79	32.21	29.86	30.13	2.03	3.32	5.06
2004	1	6.67	10.96	17.12	40.11	35.44	32.43	2.68	3.89	5.55
	2	5.70	10.34	15.78	35.36	30.79	30.54	2.02	3.18	4.82
	3	7.06	11.76	17.88	35.10	32.67	31.83	2.48	3.84	5.69
	4	7.28	11.43	18.03	42.04	37.63	33.46	3.06	4.30	6.03
2005	1	7.47	12.15	18.68	39.97	35.47	32.88	2.98	4.31	6.14
	2	6.88	10.86	17.03	33.55	33.17	31.27	2.31	3.60	5.33
	3	6.72	11.54	18.28	32.27	30.64	29.64	2.17	3.53	5.42
	4	5.98	10.22	16.72	31.60	30.36	28.89	1.89	3.10	4.83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	9.98	14.42	19.86	51.21	45.22	41.91	5.11	6.52	8.32
	2	9.77	14.49	20.00	49.36	43.21	40.20	4.82	6.26	8.04
	3	10.51	15.20	21.19	46.99	42.70	39.47	4.94	6.49	8.36
	4	9.47	13.99	19.85	44.67	40.79	37.81	4.23	5.71	7.50
2004	1	10.13	15.01	20.62	50.57	44.04	41.18	5.12	6.61	8.49
	2	9.73	14.25	20.17	44.08	40.82	38.10	4.29	5.82	7.68
	3	10.69	15.26	21.54	43.20	41.09	38.44	4.62	6.27	8.28
	4	10.62	15.28	21.62	46.39	42.77	39.40	4.92	6.54	8.52
2005	1	11.48	15.92	21.76	47.43	44.55	41.58	5.45	7.09	9.05
	2	10.54	14.85	20.95	43.56	41.77	38.88	4.59	6.20	8.15
	3	10.65	15.49	21.59	43.80	40.94	38.87	4.66	6.34	8.39
	4	10.19	15.00	20.83	43.12	40.25	38.56	4.40	6.04	8.03
		가처분소득기준								
2003	1	10.21	14.83	20.28	51.43	45.11	41.96	5.25	6.69	8.51
	2	9.99	14.32	19.77	49.70	44.54	41.20	4.97	6.38	8.14
	3	10.57	15.31	21.03	48.87	43.77	40.77	5.16	6.70	8.57
	4	9.48	13.99	19.51	46.72	41.97	39.22	4.43	5.87	7.65
2004	1	10.49	14.96	20.80	50.41	45.12	41.25	5.29	6.75	8.58
	2	9.74	14.17	19.79	45.66	41.88	39.10	4.45	5.93	7.74
	3	10.87	15.39	21.62	44.81	42.34	39.29	4.87	6.52	8.49
	4	10.83	15.53	21.38	47.67	43.39	40.41	5.16	6.74	8.64
2005	1	11.49	15.79	21.78	48.77	45.69	41.85	5.60	7.21	9.11
	2	10.37	14.62	20.59	45.15	42.77	39.45	4.68	6.25	8.12
	3	10.92	15.39	21.76	44.78	42.37	39.23	4.89	6.52	8.54
	4	10.17	14.74	20.81	44.28	41.28	38.50	4.50	6.09	8.01

2) 가구기준

가) 연간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4.32	8.46	15.06	32.18	27.88	25.72	1.39	2.36	3.87
1996	4.99	9.62	16.25	30.19	27.17	26.53	1.51	2.62	4.31
1997	4.85	9.48	15.90	30.68	26.97	26.21	1.49	2.56	4.17
1998	6.61	11.17	17.25	39.49	34.24	31.93	2.61	3.82	5.51
1999	6.49	11.16	17.30	36.11	32.26	30.97	2.34	3.60	5.36
2000	6.09	10.71	17.07	33.44	30.59	29.38	2.04	3.28	5.02
2001	6.00	10.61	17.53	31.11	29.58	28.26	1.87	3.14	4.95
2002	5.77	10.63	17.49	27.99	27.34	27.12	1.62	2.91	4.74
2003	7.40	11.96	17.83	37.57	34.73	33.30	2.78	4.15	5.94
2004	8.11	13.10	18.85	37.45	34.46	33.93	3.04	4.51	6.40
2005	8.41	13.08	19.35	35.45	34.55	33.43	2.98	4.52	6.47

(단위: %)

구분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4.22	8.35	15.81	32.33	27.90	24.31	1.37	2.33	3.84
1996	4.95	9.51	16.14	30.15	27.29	26.48	1.49	2.59	4.28
1997	5.06	9.32	16.11	29.53	27.48	25.98	1.49	2.56	4.19
1998	6.57	11.10	17.29	38.31	33.72	31.49	2.52	3.74	5.44
1999	6.20	10.93	17.55	35.17	31.41	29.62	2.18	3.43	5.20
2000	5.77	10.53	16.83	31.12	28.69	28.30	1.80	3.02	4.76
2001	5.43	10.16	17.00	30.46	28.14	27.25	1.65	2.86	4.63
2002	5.31	10.18	17.06	26.40	25.78	26.07	1.40	2.62	4.45
2003	6.80	11.30	17.27	36.17	33.22	31.89	2.46	3.76	5.51
2004	7.22	12.31	18.33	36.73	32.87	32.24	2.65	4.05	5.91
2005	7.33	12.31	18.73	33.12	31.49	30.95	2.43	3.88	5.80

(단위: %)

구분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4.22	8.19	14.91	32.04	27.82	25.41	1.35	2.28	3.79
1996	4.94	9.31	15.86	30.20	27.51	26.55	1.49	2.56	4.21
1997	4.66	9.18	16.02	32.60	28.22	26.36	1.52	2.59	4.22
1998	6.40	10.87	17.04	39.99	34.43	31.81	2.56	3.74	5.42
1999	6.18	10.85	17.17	35.67	31.49	30.05	2.20	3.42	5.16
2000	5.59	10.15	16.51	33.73	30.06	28.75	1.88	3.05	4.75
2001	5.51	10.00	16.86	31.72	29.26	27.54	1.75	2.93	4.64
2002	5.07	9.90	16.95	28.67	26.46	25.89	1.45	2.62	4.39
2003	6.58	11.15	17.08	38.16	33.64	31.92	2.51	3.75	5.45
2004	7.09	11.73	18.02	38.66	34.59	32.48	2.74	4.06	5.85
2005	7.09	11.91	18.30	34.61	32.13	31.15	2.45	3.83	5.70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3.27	17.77	22.66	57.20	51.45	48.46	7.59	9.14	10.98
2004	13.75	18.34	24.02	54.48	50.09	46.41	7.49	9.19	11.15
2005	14.27	18.75	24.25	54.49	50.76	47.35	7.77	9.52	11.48
	경상소득기준								
2003	11.43	16.37	21.75	49.21	44.26	42.18	5.63	7.24	9.17
2004	11.68	16.37	22.36	46.90	43.84	41.07	5.48	7.18	9.18
2005	12.13	16.79	22.78	45.83	43.67	41.25	5.56	7.33	9.40
	가처분소득기준								
2003	11.57	16.19	21.63	50.03	45.62	42.98	5.79	7.39	9.30
2004	11.74	16.40	22.06	48.30	44.72	42.08	5.67	7.33	9.28
2005	12.09	16.62	22.59	47.08	44.64	41.72	5.69	7.42	9.43

나) 분기

(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1	4.44	7.74	14.89	33.45	31.04	26.01	1.49	2.40	3.87
	2	4.12	7.54	14.18	31.57	29.04	25.70	1.30	2.19	3.64
	3	4.52	8.23	14.90	31.16	28.99	26.34	1.41	2.39	3.93
	4	4.03	8.17	15.29	29.89	26.85	24.26	1.20	2.19	3.71
1996	1	5.51	10.03	15.88	33.00	29.47	29.07	1.82	2.96	4.62
	2	4.67	8.63	14.82	26.59	25.82	25.66	1.24	2.23	3.80
	3	5.39	10.19	17.10	28.94	26.92	26.45	1.56	2.74	4.52
	4	4.53	9.05	15.94	28.59	25.86	25.15	1.29	2.34	4.01
1997	1	5.19	10.13	16.61	33.41	28.76	28.20	1.74	2.91	4.68
	2	4.27	8.25	15.37	33.16	29.11	25.59	1.42	2.40	3.93
	3	5.08	9.06	15.89	28.34	28.03	26.39	1.44	2.54	4.19
	4	4.17	8.71	15.01	33.59	27.40	26.17	1.40	2.39	3.93
1998	1	6.92	10.96	17.40	43.18	37.91	33.41	2.99	4.16	5.81
	2	6.27	10.62	16.91	39.37	33.99	31.06	2.47	3.61	5.25
	3	6.84	11.59	17.74	35.42	32.30	31.12	2.42	3.74	5.52
	4	6.01	10.93	17.38	36.18	31.21	29.65	2.17	3.41	5.15
1999	1	6.70	11.74	17.52	36.65	31.82	31.70	2.45	3.73	5.56
	2	6.28	10.51	16.49	35.25	32.68	30.87	2.21	3.44	5.09
	3	6.27	11.54	18.32	34.56	29.89	28.96	2.17	3.45	5.30
	4	5.87	10.84	17.12	32.08	28.73	28.54	1.88	3.12	4.88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0	1	6.66	11.55	17.96	32.28	29.94	29.40	2.15	3.46	5.28
	2	5.39	9.86	16.02	29.95	28.39	27.86	1.62	2.80	4.46
	3	5.82	10.68	17.43	31.42	28.84	28.11	1.83	3.08	4.90
	4	5.13	9.91	16.32	30.87	27.79	27.23	1.58	2.75	4.44
2001	1	5.55	10.44	17.59	33.66	29.76	27.83	1.87	3.11	4.90
	2	5.34	9.49	16.44	30.05	28.85	26.68	1.60	2.74	4.39
	3	5.92	10.86	17.64	29.15	27.88	27.76	1.72	3.03	4.90
	4	4.82	9.84	16.88	28.88	25.58	25.31	1.39	2.52	4.27
2002	1	5.02	9.79	17.36	27.78	26.32	25.44	1.40	2.58	4.42
	2	5.07	10.54	17.04	26.02	24.51	25.93	1.32	2.58	4.42
	3	5.76	10.67	17.18	27.68	26.84	27.43	1.60	2.86	4.71
	4	5.22	9.76	16.67	25.63	25.60	25.67	1.34	2.50	4.28
2003	1	6.83	10.96	17.00	36.72	34.38	32.11	2.51	3.77	5.46
	2	6.57	10.82	17.10	39.58	35.18	32.14	2.60	3.81	5.49
	3	7.13	12.16	17.89	36.56	32.61	32.28	2.61	3.97	5.78
	4	6.86	11.59	17.60	31.48	30.84	30.74	2.16	3.57	5.41
2004	1	7.13	12.14	18.14	39.39	34.29	33.01	2.81	4.16	5.99
	2	6.49	11.25	17.01	32.27	30.66	30.77	2.09	3.45	5.23
	3	7.46	12.94	18.66	35.50	31.97	32.63	2.65	4.14	6.09
	4	7.70	12.66	19.15	39.95	35.25	33.17	3.08	4.46	6.35
2005	1	8.22	13.02	19.65	36.91	34.54	32.85	3.03	4.49	6.45
	2	7.47	12.17	18.38	32.16	31.54	31.19	2.40	3.84	5.73
	3	7.40	12.38	19.24	30.82	30.61	29.99	2.28	3.79	5.77
	4	6.61	11.79	17.89	30.52	29.03	29.61	2.02	3.42	5.30

(단위: %)

구분	분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5	1	4.26	7.92	15.23	33.91	29.74	25.12	1.45	2.35	3.83
	2	3.93	7.70	14.19	33.01	28.17	25.44	1.30	2.17	3.61
	3	4.23	8.38	14.84	32.90	28.07	26.10	1.39	2.35	3.87
	4	4.12	8.21	14.78	30.11	26.58	24.85	1.24	2.18	3.67
1996	1	5.34	9.76	15.91	34.92	30.39	28.91	1.86	2.97	4.60
	2	4.20	8.29	14.76	29.47	26.74	25.43	1.24	2.22	3.75
	3	5.17	9.82	17.06	29.88	27.53	26.29	1.55	2.70	4.49
	4	4.73	8.98	16.08	27.98	26.35	25.22	1.32	2.37	4.06
1997	1	5.16	9.83	16.98	33.47	29.23	27.28	1.73	2.87	4.63
	2	4.46	8.57	15.09	32.52	28.41	26.20	1.45	2.44	3.95
	3	4.95	9.13	15.93	29.46	27.91	26.51	1.46	2.55	4.22
	4	4.28	8.68	14.67	33.16	27.70	26.74	1.42	2.40	3.92
1998	1	6.91	10.91	16.69	43.34	37.87	34.27	2.99	4.13	5.72
	2	6.05	10.42	16.79	42.05	35.15	31.26	2.54	3.66	5.25
	3	6.38	11.05	17.16	37.88	33.15	31.48	2.42	3.66	5.40
	4	6.08	10.62	17.07	36.82	32.27	30.19	2.24	3.43	5.15
1999	1	6.62	11.23	17.35	36.81	32.68	31.42	2.44	3.67	5.45
	2	6.01	10.54	16.33	37.85	32.84	31.11	2.27	3.46	5.08
	3	6.12	11.07	17.60	35.40	30.81	29.48	2.17	3.41	5.19
	4	5.99	10.66	17.36	32.48	29.68	28.68	1.95	3.16	4.98

(단위: %)

구분	분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0	1	6.23	10.80	17.49	34.60	31.43	29.49	2.16	3.39	5.16
	2	5.18	9.82	15.76	35.26	29.68	28.72	1.83	2.91	4.53
	3	5.74	10.29	17.27	32.90	30.05	28.16	1.89	3.09	4.86
	4	5.05	9.73	15.64	32.92	28.57	28.25	1.66	2.78	4.42
2001	1	5.38	10.41	17.22	35.36	29.88	28.19	1.90	3.11	4.85
	2	5.23	9.52	15.83	33.02	29.84	28.15	1.73	2.84	4.46
	3	6.00	10.53	17.39	30.69	29.48	28.26	1.84	3.11	4.91
	4	4.98	9.26	16.74	31.07	28.50	25.87	1.55	2.64	4.33
2002	1	4.94	9.41	16.79	29.28	27.16	25.54	1.45	2.55	4.29
	2	4.99	10.00	16.82	26.81	25.29	25.58	1.34	2.53	4.30
	3	5.56	10.36	16.85	28.57	27.31	27.42	1.59	2.83	4.62
	4	4.83	9.58	16.70	29.82	26.72	25.66	1.44	2.56	4.28
2003	1	6.52	10.83	16.91	38.96	34.65	31.96	2.54	3.75	5.41
	2	6.43	10.51	16.29	40.77	35.72	32.81	2.62	3.76	5.34
	3	6.96	11.66	17.55	38.51	34.16	32.78	2.68	3.98	5.75
	4	6.63	11.76	17.43	33.56	30.39	30.87	2.23	3.57	5.38
2004	1	6.95	11.51	17.92	41.36	35.87	32.76	2.88	4.13	5.87
	2	6.24	11.01	16.53	35.12	31.31	31.23	2.19	3.45	5.16
	3	7.59	12.42	18.59	36.32	33.73	32.79	2.76	4.19	6.09
	4	7.69	12.05	18.76	41.40	37.35	33.64	3.18	4.50	6.31
2005	1	7.76	12.67	19.29	39.51	35.20	32.98	3.07	4.46	6.36
	2	7.13	11.46	17.65	33.69	32.76	31.45	2.40	3.75	5.55
	3	7.10	12.09	18.76	32.23	30.87	30.26	2.29	3.73	5.68
	4	6.46	11.17	17.56	31.86	30.22	29.69	2.06	3.38	5.21

(2)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분기	경상소득기준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	11.60	16.32	21.79	51.82	46.59	43.81	6.01	7.60	9.54
	2	11.42	16.03	21.49	49.85	45.37	42.61	5.69	7.28	9.16
	3	11.66	16.79	22.07	49.24	44.31	42.66	5.74	7.44	9.42
	4	10.86	15.63	20.87	46.68	42.81	41.22	5.07	6.69	8.60
2004	1	11.65	16.63	22.39	51.17	45.57	42.71	5.96	7.58	9.56
	2	11.17	15.77	21.54	45.15	42.62	40.27	5.04	6.72	8.68
	3	11.93	16.66	22.67	45.08	43.01	40.77	5.38	7.16	9.24
	4	11.90	16.65	22.80	47.04	44.06	41.11	5.60	7.33	9.37
2005	1	12.72	17.39	23.32	48.71	45.87	43.00	6.20	7.98	10.03
	2	11.85	16.14	22.29	45.38	44.04	40.95	5.38	7.11	9.13
	3	12.13	16.78	23.09	44.62	43.03	40.50	5.41	7.22	9.35
	4	11.75	16.45	22.39	44.68	42.66	40.64	5.25	7.02	9.10
		가처분소득기준								
2003	1	11.73	16.29	21.83	51.83	46.97	43.78	6.08	7.65	9.56
	2	11.44	15.87	21.29	50.86	46.51	43.48	5.82	7.38	9.26
	3	12.15	16.75	22.39	49.14	45.66	42.98	5.97	7.65	9.62
	4	10.91	15.40	20.88	48.17	44.17	41.51	5.26	6.80	8.67
2004	1	11.85	16.37	22.03	51.28	46.75	43.41	6.08	7.65	9.56
	2	11.09	15.63	21.06	46.75	43.61	41.35	5.18	6.81	8.71
	3	12.13	16.66	22.78	46.35	44.29	41.30	5.62	7.38	9.41
	4	12.08	16.82	22.59	48.39	44.85	42.13	5.85	7.54	9.52
2005	1	12.83	17.31	23.12	49.45	46.70	43.52	6.34	8.08	10.06
	2	11.53	16.13	21.81	47.20	44.22	41.63	5.44	7.13	9.08
	3	12.26	16.83	23.10	45.94	43.91	41.03	5.63	7.39	9.48
	4	11.65	16.22	22.17	45.68	43.33	40.77	5.32	7.03	9.04

3. 불평등

가. 소득분배

1) 소득점유율

가) 근로자가구

(단위: %, 배)

구분	시장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배율	5분위 소득배율
1995	3.45	5.54	6.11	7.31	8.32	9.33	10.68	12.46	14.71	22.08	6.406	4.093
1996	3.33	5.19	6.33	7.17	8.34	9.47	10.78	12.42	14.90	22.07	6.631	4.338
1997	3.39	5.25	6.37	7.33	8.69	9.18	10.78	12.47	14.94	21.59	6.364	4.228
1998	2.79	5.04	6.23	7.30	8.26	9.47	10.84	12.55	15.18	22.33	8.006	4.790
1999	2.86	4.97	6.06	7.09	8.17	9.38	10.77	12.46	15.05	23.17	8.089	4.881
2000	3.04	5.05	6.19	7.19	8.22	9.42	10.68	12.42	15.06	22.73	7.481	4.673
2001	3.04	4.95	6.07	7.03	8.10	9.31	10.70	12.52	15.10	23.19	7.625	4.788
2002	3.17	5.01	6.12	7.09	8.16	9.30	10.72	12.44	15.06	22.93	7.227	4.646
2003	2.76	4.99	6.28	7.28	8.34	9.49	10.71	12.45	14.95	22.75	8.229	4.860
2004	2.60	4.85	6.18	7.22	8.32	9.45	10.84	12.60	15.18	22.75	8.742	5.089
2005	2.60	4.82	6.10	7.24	8.32	9.53	10.97	12.48	15.18	22.76	8.753	5.114

(단위: %, 배)

구분	경상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배율	5분위 소득배율
1995	3.49	5.36	6.29	7.30	8.29	9.38	10.69	12.32	14.80	22.08	6.320	4.167
1996	3.35	5.20	6.26	7.27	8.30	9.46	10.84	12.37	14.89	22.08	6.600	4.327
1997	3.39	5.29	6.44	7.28	8.38	9.49	10.80	12.47	14.90	21.57	6.366	4.204
1998	2.84	5.11	6.17	7.26	8.31	9.45	10.84	12.53	15.15	22.33	7.868	4.713
1999	2.94	4.98	6.08	7.09	8.18	9.39	10.75	12.45	15.00	23.13	7.864	4.812
2000	3.14	5.07	6.20	7.20	8.22	9.38	10.71	12.40	15.03	22.64	7.215	4.587
2001	3.15	5.00	6.09	7.04	8.10	9.28	10.67	12.47	15.06	23.13	7.335	4.685
2002	3.29	5.06	6.12	7.10	8.14	9.30	10.70	12.43	15.00	22.85	6.947	4.533
2003	2.89	5.19	6.17	7.30	8.29	9.41	10.82	12.35	14.91	22.68	7.841	4.651
2004	2.80	4.91	6.19	7.23	8.30	9.45	10.81	12.55	15.10	22.65	8.086	4.895
2005	2.84	4.91	6.13	7.25	8.34	9.51	10.93	12.36	15.05	22.67	7.973	4.864

(단위: %, 배)

구분	가처분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배율	5분위 소득배율
1995	3.52	5.38	6.42	7.38	8.39	9.47	10.73	12.32	14.70	21.68	6.161	4.088
1996	3.37	5.29	6.35	7.36	8.42	9.57	10.84	12.41	14.78	21.61	6.411	4.200
1997	3.41	5.36	6.45	7.41	8.47	9.58	10.84	12.47	14.81	21.19	6.216	4.105
1998	2.82	5.11	6.30	7.35	8.38	9.54	10.89	12.54	15.08	21.99	7.792	4.674
1999	2.96	5.05	6.16	7.19	8.26	9.46	10.81	12.45	14.93	22.73	7.690	4.701
2000	3.10	5.16	6.30	7.32	8.32	9.47	10.79	12.44	14.95	22.16	7.144	4.494
2001	3.15	5.09	6.22	7.11	8.20	9.39	10.75	12.48	15.00	22.61	7.182	4.566
2002	3.28	5.14	6.25	7.21	8.25	9.37	10.81	12.38	14.89	22.44	6.849	4.438
2003	2.87	5.13	6.35	7.36	8.40	9.48	10.79	12.43	14.82	22.37	7.792	4.649
2004	2.74	5.03	6.28	7.32	8.38	9.53	10.88	12.54	15.03	22.26	8.111	4.794
2005	2.80	5.04	6.24	7.35	8.44	9.65	10.82	12.46	14.94	22.27	7.965	4.751

나) 전가구

(단위: %, 배)

구분	시장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배율	5분위 소득배율
2003	1.35	4.32	5.84	7.23	8.22	9.62	11.03	12.92	15.64	23.81	17.685	6.959
2004	1.37	4.15	5.80	7.10	8.35	9.62	11.10	12.99	15.76	23.76	17.390	7.163
2005	1.32	4.19	5.60	7.28	8.20	9.63	11.26	12.86	15.69	23.96	18.140	7.193
	경상소득											
	2003	1.85	4.49	5.95	7.16	8.29	9.54	11.06	12.66	15.46	23.53	12.699
2004	1.88	4.43	5.88	7.14	8.30	9.63	10.94	12.82	15.55	23.44	12.490	6.183
2005	1.88	4.37	6.15	6.83	8.33	9.61	11.02	12.80	15.41	23.61	12.567	6.249
	가처분소득											
	2003	1.81	4.52	5.99	7.20	8.34	9.59	10.99	12.79	15.45	23.33	12.909
2004	1.82	4.45	5.95	7.20	8.37	9.62	11.06	12.85	15.52	23.17	12.730	6.167
2005	1.84	4.42	5.92	7.19	8.40	9.67	11.06	12.79	15.41	23.29	12.691	6.190

2) 분위수배율

가) 근로자가구

(단위: 원, 배)

구분	시장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5	445,977	550,000	825,000	1,250,000	1,555,000	3.487	1.885	2.273
1996	485,000	606,680	941,081	1,421,375	1,774,200	3.658	1.885	2.343
1997	519,615	659,731	1,000,000	1,518,489	1,877,962	3.614	1.878	2.302
1998	450,427	599,266	932,168	1,435,100	1,795,223	3.986	1.926	2.395
1999	465,000	614,500	961,935	1,491,053	1,873,000	4.028	1.947	2.426
2000	511,296	667,761	1,035,325	1,595,161	1,999,075	3.910	1.931	2.389
2001	560,000	725,000	1,131,450	1,775,969	2,221,025	3.966	1.963	2.450
2002	612,012	789,980	1,228,352	1,907,450	2,407,798	3.934	1.960	2.415
2003	626,099	851,592	1,325,000	2,014,952	2,535,755	4.050	1.914	2.366
2004	647,003	899,841	1,415,000	2,184,075	2,715,175	4.197	1.919	2.427
2005	669,527	918,130	1,483,701	2,257,440	2,840,500	4.243	1.914	2.459

(단위: 원, 배)

구분	경상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5	447,214	550,000	827,350	1,251,840	1,559,375	3.487	1.885	2.276
1996	490,000	611,059	945,584	1,428,869	1,782,500	3.638	1.885	2.338
1997	525,000	665,000	1,004,500	1,524,205	1,887,830	3.596	1.880	2.292
1998	455,000	600,000	938,971	1,442,300	1,800,888	3.958	1.918	2.404
1999	473,427	619,563	967,500	1,495,000	1,876,000	3.963	1.939	2.413
2000	520,700	673,155	1,040,720	1,600,470	2,006,960	3.854	1.928	2.378
2001	575,618	739,512	1,141,623	1,787,435	2,231,817	3.877	1.955	2.417
2002	629,312	800,000	1,237,000	1,919,973	2,424,750	3.853	1.960	2.400
2003	649,000	866,025	1,331,000	2,020,000	2,543,322	3.919	1.911	2.332
2004	674,000	911,000	1,428,557	2,194,000	2,731,560	4.053	1.912	2.408
2005	702,500	937,553	1,500,481	2,267,842	2,857,860	4.068	1.905	2.419

(단위: 원, 배)

구분	가처분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5	424,942	525,000	791,716	1,181,685	1,465,615	3.449	1.851	2.251
1996	462,660	585,861	899,628	1,337,165	1,653,406	3.574	1.838	2.282
1997	498,911	633,750	960,127	1,431,600	1,756,577	3.521	1.830	2.259
1998	430,848	566,779	880,744	1,337,015	1,664,592	3.864	1.890	2.359
1999	446,850	581,100	907,473	1,388,709	1,726,000	3.863	1.902	2.390
2000	490,344	632,377	970,006	1,474,795	1,846,112	3.765	1.903	2.332
2001	537,401	687,785	1,063,650	1,646,759	2,036,865	3.790	1.915	2.394
2002	588,250	753,120	1,149,865	1,763,270	2,201,900	3.743	1.915	2.341
2003	602,846	798,943	1,231,370	1,859,604	2,306,187	3.826	1.873	2.328
2004	630,030	848,528	1,318,760	2,010,622	2,478,623	3.934	1.880	2.370
2005	663,850	876,812	1,389,588	2,076,794	2,592,133	3.905	1.865	2.369

나) 전가구

(단위: 원, 배)

구분	시장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430,628	700,000	1,203,750	1,895,615	2,382,500	5.533	1.979	2.708
2004	448,603	725,000	1,287,975	2,035,747	2,563,969	5.715	1.991	2.808
2005	450,000	750,000	1,341,641	2,102,695	2,651,650	5.893	1.976	2.804
구분	경상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494,126	730,488	1,222,600	1,907,350	2,402,500	4.862	1.965	2.611
2004	511,507	760,263	1,308,148	2,051,145	2,585,650	5.055	1.977	2.698
2005	523,259	793,500	1,374,450	2,125,000	2,680,060	5.122	1.950	2.678
구분	가처분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455,108	683,650	1,144,800	1,774,347	2,227,135	4.894	1.945	2.595
2004	476,535	717,860	1,222,950	1,903,241	2,377,716	4.990	1.944	2.651
2005	490,146	742,877	1,280,268	1,969,619	2,463,145	5.025	1.924	2.651

나. 불평등지수

1) 지니계수

가) 근로자가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995	0.28118	0.28055	0.27474
1996	0.28455	0.28439	0.27762
1997	0.27898	0.27821	0.27282
1998	0.29590	0.29513	0.29036
1999	0.30380	0.30203	0.29654
2000	0.29596	0.29362	0.28725
2001	0.30298	0.30018	0.29353
2002	0.29769	0.29494	0.28858
2003	0.29801	0.29499	0.29042
2004	0.30355	0.29946	0.29392
2005	0.30414	0.29860	0.29210

나) 전가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3	0.33630	0.32485	0.32308
2004	0.33846	0.32580	0.32300
2005	0.34135	0.32692	0.32361

2) 앳킨슨지수

가) 근로자가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epsilon=0.5$	$\epsilon=1.0$	$\epsilon=0.5$	$\epsilon=1.0$	$\epsilon=0.5$	$\epsilon=1.0$
1995	0.06642	0.15575	0.06606	0.15414	0.06372	0.15093
1996	0.06744	0.15702	0.06724	0.15471	0.06465	0.15319
1997	0.06553	0.15857	0.06520	0.15780	0.06313	0.15537
1998	0.07661	0.20830	0.07586	0.20243	0.07427	0.20668
1999	0.07911	0.18903	0.07789	0.18401	0.07584	0.18548
2000	0.07373	0.16903	0.07206	0.16204	0.06998	0.17138
2001	0.07651	0.17168	0.07470	0.16447	0.07219	0.16665
2002	0.07303	0.15783	0.07139	0.15320	0.06905	0.15593
2003	0.07727	0.19358	0.07528	0.18560	0.07423	0.19648
2004	0.08006	0.20074	0.07719	0.19005	0.07571	0.20321
2005	0.07958	0.19045	0.07567	0.17559	0.07353	0.18244

나) 전가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epsilon=0.5$	$\epsilon=1.0$	$\epsilon=0.5$	$\epsilon=1.0$	$\epsilon=0.5$	$\epsilon=1.0$
2003	0.11239	0.41648	0.09896	0.32560	0.09959	0.34562
2004	0.11162	0.38962	0.09805	0.30446	0.09857	0.33285
2005	0.11405	0.39352	0.09852	0.29576	0.09855	0.32003

참고문헌

- 김미곤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김미곤·김태완, 「우리나라의 빈곤현황과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3호, 2004, pp.173~2000.
- 김성용·이계입,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농촌경제』 25권 4호, 2002 겨울.
- 김진욱, 「빈곤지수의 공리적 접근」, 『경상연구』 제23집 1호, 1998.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연구 02-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 99-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안창수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연구 03-05,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윤기중,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박영사, 1997.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연구05-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여유진,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빈곤론』, 나남출판사, 1991.
-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7.
- 이정우·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정책연구』 20(1) 20(2), 1998, pp.153~214.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7.

임병인·전승훈,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6회, 한국노동연구원, 2005.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02-04, 한국노동연구원, 2002.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및 「가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tkinson, A. B. & Bourguignon, F.,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Elsevier, 2000.

Atkinson, A. B., Rainwater, L. & Smeeding, T. M.,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1995.

Blackorby, C. & Donaldson, D., "Measures of Relative Equality and Their Meaning in Terms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Economic Theory*, 18, 1978, pp.55~80.

Donaldson, D. & Weymark, J. A., "Properties of fixed population poverty indic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27, No.3, 1986, pp.667~688.

Fields, G. 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Cambridge, 1980.

Förster Michael F., "Measurement of Low Incomes and Poverty in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14*, OECD/GD(94)10, OECD, Paris 1994.

Foster J., Greer, J & Thorbecke, E.,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Vol.52, No.3, 1984.

Hagenaars, Aldi, "A Class of Poverty Indic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28, No.3, 1987,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Inequality II*(F. A. Cowell, edit), 2003.

Kawani, Nanak, "Inequality, Welfare and Poverty: Three Interrelated Phenomena", *Handbook on Income Inequality Measuremen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pp.599~628.

_____, "On a Class of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Vol.48, No.2, 1980.

Kundu, A. & Smith, T. E., "An Impossibility Theorem on Poverty Indic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24, No.2, 1983.

Lancaster, Geoffrey, Ranjan Ray & Maria Rebecca Valenzuela, "A Cross-country Study of Equivalence Scales and Expenditure Inequality on Unit Record Household Budget Dat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5, No.4., 1999, pp.455~482.

Litchfield, Julie A.,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World Bank PovertNet website: <http://www.worldbank.org/poverty>, 1999.

Rowntree, Seebohm, *Poverty: The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1901.

Sen, Amartya,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Vol.44, No.2, 1976.

_____,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Shorrocks, A.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50 No.1, 1982, pp.193~211.

Takayama, N.,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Theil Measures: Professor Sen's Axiomatic Approach Reconsidered," *Econometrica*, Vol.47, 1979, pp.747~759.

Townsend, P.,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Harmondsworth: Allen Lane and Penguin Books, 1979.

_____, *The Concept of Poverty*,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1970.

World Bank,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vol 1 Core Techniques and Cross-country issues*, 2002.

Yitzhaki, S.,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93, 1979, pp.321~324.

Yitzhaki, S. & R. Lerman,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3), 1991, pp.313~329.

부록 : 빈곤선

1. 정부발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 동일비율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95	224,127	383,470	575,191	706,794	810,071	896,700
1996	243,950	414,004	607,680	751,093	859,125	955,579
1997	265,527	446,970	642,005	798,169	911,151	1,018,323
1998	289,012	482,560	678,268	848,195	966,326	1,085,187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	327,550	542,474	746,137	938,536	1,067,116	1,204,142
2001	341,060	564,850	776,913	977,249	1,111,132	1,253,811
2002	355,128	588,149	808,959	1,017,559	1,156,964	1,305,528
2003	369,777	612,409	842,328	1,059,531	1,204,687	1,359,379
2004	385,029	637,670	877,072	1,103,235	1,254,378	1,415,451
2005	400,911	663,973	913,250	1,148,741	1,306,119	1,473,836

2주제: 가구주 특성별 빈곤 상태의 변화*

김진욱

1. 서론

OECD 가입의 선결 조건이었던 국제 자본이 개방됨에 따라 한국에 국제 단기 자본이 동시에 투입되기도 하고 회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1997년 말에 외환위기라는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후진국으로부터 출발하여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였던 대표적인 국가로써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은 일순간에 경제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전 국민은 높은 경제성장하에서 누리던 많은 혜택을 한번에 잃어버리는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였다. IMF로부터 지원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전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리해고를 경험하게 되었고, 해고당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월급이 동결되는 등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여 경기가 침체되자 기업은 노동자를 다시 해고하였고, 실업자로 전락한 이들은 구매력이 급감하여 소비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실업자 가구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고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지 않아 고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이 가출하여 노숙자로 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밀어닥쳤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국민·기업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은 대비하지 못한 사회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 본 원고는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2005)의 3장과 4장을 요약한 것임.

그러나 최근 우리의 경제 실적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힘들었던 시절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에 들어서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였고, GDP 실질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6.9%로 하락한 이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6.1%에 이르는 등 경기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업률도 1998년 7.0%에서 점차 개선되어 2002년에는 3.3%에 달하고 2005년에는 소폭 악화(3.7%)되었으나,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충격을 벗어난 듯 하다. 외환보유고도 1997년 말 기준으로 204억 달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5년 말에 2.10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실시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빈곤층을 퇴치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노동시장, 조세 및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불평등한 분배구조와 빈곤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분배정책과 빈곤대책이 잘 되었다고도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대책들이 단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어서 소외된 계층에게는 전혀 혜택이 전달되지 않는 정책이었는데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특성별로 빈곤의 실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빈곤층의 변화는 빈곤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지수인 빈곤율(Head-Count Ratio),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센지수, FGT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가구주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도시경제자료』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학력별 빈곤 상태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가운데 조기 퇴직이 나타날 것으로 미루어보아 소수의 젊은 남자가 나머지 전체 인구를 부양하는 구조로 이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30~40대 젊은이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양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서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해고되거나 조기퇴직(혹은 명예퇴직)하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세대이므로 실직은 곧 빈곤으로 연결되기 쉽다. 『도시가계자료』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빈곤 지수를 계측하여 가구주 연령별 빈곤 상태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써 대표적인 신빈곤층이다.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은 일용직·임시직·계약근로·파견근로·가내근로·계절근로 등 비정규직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고용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상용직은 줄어들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늘어난 것이므로 여성 계층의 소득이 불안정하고, 여성의 빈곤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가구주의 빈곤 상태를 남성근로가구주와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소득자료는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의 경상소득으로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이다.

2. 빈곤선 및 빈곤 측정 방법

본 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절대적 빈곤선을 설정하고, 빈곤선이 과연 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할 빈곤 지수를 제시한다.

가. 빈곤선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사용한다. <표 1>에 수록한 최저생계비는 1994년과 1999년 자료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0년 이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다. 1994년과 1999년 사이의 비계측 연도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동일한 액수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1995\text{년 최저생계비} = 1994\text{년 최저생계비} + \frac{(1999\text{년 최저생계비} - 1994\text{년 최저생계비})}{5}$$

〈표 5-2-1〉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94	206,141	355,580	545,039	665,840	764,659	842,377	920,095
1995	227,828	388,661	579,347	712,943	816,696	905,190	993,684
1996	249,514	421,742	613,655	760,047	868,733	968,003	1,067,273
1997	271,201	454,822	647,963	807,150	920,769	1,030,815	1,140,861
1998	292,887	487,903	682,271	854,254	972,806	1,093,628	1,214,450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1,288,039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680
2001	333,731	552,711	760,218	956,248	1,087,255	1,226,868	1,366,481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1,414,307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1,456,738
2004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1,507,723

자료: 박순일 외(1994), 김미곤 외(2000), 2000년 이후는 정부의 최저생계비 발표 자료.

나. 최저생계비의 변화

1996년 이래로 최저생계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가구원수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1997년보다 평균소득 규모는 줄어든다. 이러한 평균소득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평균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1999년을 정점으로 평균 소득 상승률 보다는 최저생계비 상승률이 적어서 평균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은 다시 줄어든다. (그림 5-2-1 참조) 가구원 수별로 보았을 때는 대체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소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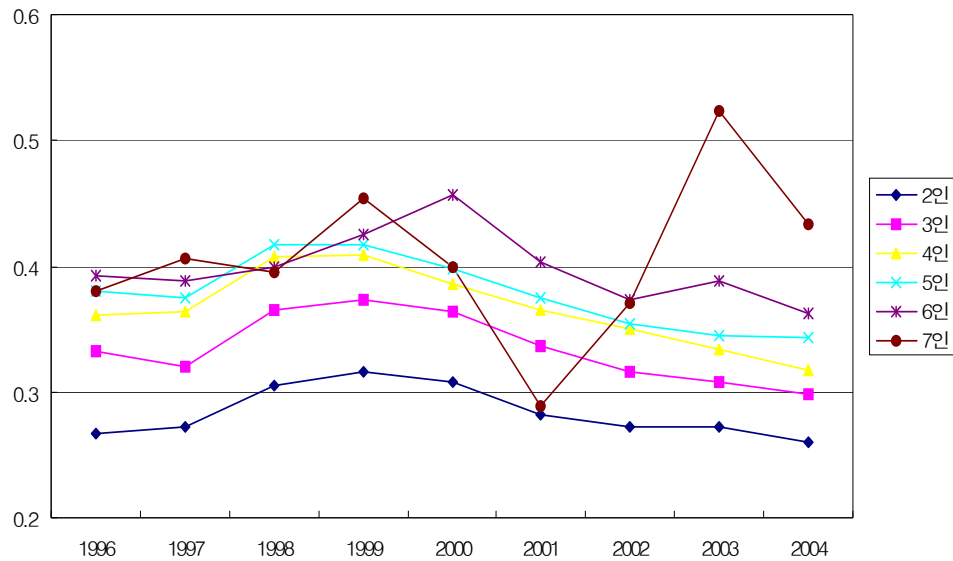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급권자들은 대체로 가구원수가 적으므로 이들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평균소득 상승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표 5-2-2〉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96	최저생계비(A)	421,742	613,655	760,047	868,733	968,003	1,067,273
	평균소득(B)	1,577,705	1,844,977	2,102,738	2,288,226	2,464,818	2,804,825
	A/B	0.2673	0.3326	0.3615	0.3797	0.3927	0.3805
1997	최저생계비(A)	454,822	647,963	807,150	920,769	1,030,815	1,140,861
	평균소득(B)	1,673,854	2,020,792	2,220,088	2,460,348	2,654,800	2,811,318
	A/B	0.2717	0.3206	0.3636	0.3742	0.3883	0.4058
1998	최저생계비(A)	487,903	682,271	854,254	972,806	1,093,628	1,214,450
	평균소득(B)	1,598,155	1,868,587	2,094,141	2,333,927	2,742,516	3,076,235
	A/B	0.3053	0.3651	0.4079	0.4168	0.3988	0.3948
1999	최저생계비(A)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1,288,039
	평균소득(B)	1,651,716	1,917,685	2,207,637	2,460,140	2,718,460	2,835,169
	A/B	0.3154	0.3737	0.4083	0.4166	0.4254	0.4543
2000	최저생계비(A)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680
	평균소득(B)	1,745,440	2,024,851	2,405,273	2,652,277	2,611,818	3,325,758
	A/B	0.3074	0.3645	0.3860	0.3980	0.4561	0.3989
2001	최저생계비(A)	552,711	760,218	956,248	1,087,255	1,226,868	1,366,481
	평균소득(B)	1,962,023	2,261,916	2,621,933	2,905,424	3,046,128	4,732,889
	A/B	0.2817	0.3361	0.3647	0.3742	0.4028	0.2887
2002	최저생계비(A)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1,414,307
	평균소득(B)	2,102,573	2,494,080	2,831,122	3,172,890	3,398,028	3,809,847
	A/B	0.2721	0.3155	0.3496	0.3547	0.3737	0.3712
2003	최저생계비(A)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1,456,738
	평균소득(B)	2,168,508	2,633,360	3,051,534	3,364,068	3,368,979	2,782,844
	A/B	0.2717	0.3078	0.3341	0.3445	0.3882	0.5235
2004	최저생계비(A)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1,507,723
	평균소득(B)	2,349,634	2,807,250	3,329,109	3,490,159	3,740,344	3,482,347
	A/B	0.2595	0.2988	0.3169	0.3437	0.3619	0.433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그림 5-2-1]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비율



다. 빈곤 측정 방법

빈곤의 측정 방법으로는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율,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그리고 빈곤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고려하는 동시에 빈곤율과 빈곤갭을 포함하는 센(Sen) 지수와 FGT 지수를 들 수 있다.

1) 빈곤율

부트(Booth, 1889)와 라운트리(Rowntree, 1901) 이래로 계속 사용된 가장 알려진 빈곤 지수로는 빈곤율(Head-Count Ratio: PH로 표시)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 가구(혹은 n 명)로 구성된 경제에서 소득분배 상태가 x 라고 하자. 이때 빈곤선을 π 라고 하고, $q(x, \pi)$ 가 빈곤층이라면 즉, $\pi(x)$ 이하에 속하는 가구 수라면 빈곤율은 전체 가구에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 수를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_H(x, \pi) = \frac{q}{n} \dots\dots\dots (1)$$

2) 빈곤갭 비율

빈곤갭과 더불어 자주 사용하는 지표로는 빈곤층에 속한 가구들의 소득이 빈곤선에서 떨어진 정도, 즉 심도(depth)를 나타내는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PG로 표시)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제에서 빈곤층($\pi > 0$)이 존재한다면, 빈곤층에 속한 가구 i 의 빈곤갭을 $g_i = \pi - x_i$ 로 정의하면 총빈곤갭은 $\sum_{i \in \pi(x)} g_i$ 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갭은 모든 가난한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액수를 나타내며, 빈곤갭 비율은 다음과 같다.

$$P_G(x, \pi) = \frac{\sum_{i \in \pi(x)} g_i}{\pi q} \dots\dots\dots (2)$$

3) Sen 지수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빈곤지수로는 Sen 지수를 들 수 있다. Sen은 빈곤층의 소득 부족분(income shortfall)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을 고려하여 계산한 다음과 같은 지수를 제시하였다.

$$P_S(x, \pi) = A(x, \pi) \sum_{i \in \pi(x)} g_i v_i(x, \pi) \dots\dots\dots (3)$$

여기서, $A(x, \pi) > 0$ 로 일반화 계수(normalization coefficient)로써 만약 빈곤선과 빈곤가구 수가 두 소득분배 상태(x, y) 하에서 동일하다면, $A(x, \pi) = A(y, \pi)$ 이다. $v_i(x, \pi)$ 는 양의 가중치로써 전체 소득분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센(Sen; 1976)은 가구 i 의 빈곤갭에 대한 가중치 $v_i(x, \pi)$ 가 빈곤층의 소득분배 상태에 있어 가구 i 의 순위 $r_i(x, \pi)$ 와 일치한다고 하여, 빈곤지수를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_S(x, \pi) = \frac{2}{(q + 1) n \pi} \sum_{i \in \pi(x)} g_i r_i(x, \pi) \dots\dots\dots (4)$$

x분배상태를 소득수준에 의거하여 소득의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조합을 \bar{x} (즉, $\bar{x}_1 < \dots < \bar{x}_n$)라고 하여 쉐지수를 다시 쓰면

$$P_S(x, \pi) = \frac{2}{(q+1)n\pi} \sum_{i=1}^q (\pi - \bar{x}_i)(q+1-i) \dots \dots \dots (5)$$

q의 값이 큰 경우에는 PS(x, π)가 다음과 같이 변한다.

$$P_S(x, \pi) = P_H [P_G + (1 - P_G) G_P^q] \dots \dots \dots (6)$$

여기서, GPq는 빈곤층의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상대지니계수(relative Gini index)로써 다음과 같다.

$$G_P^q = \frac{1}{q^2 \mu(x^P)} \sum_{i=1}^q (2i - q - 1) x_i \dots \dots \dots (7)$$

여기서, $\mu(x^P)$ 는 빈곤층의 평균소득이고, i는 빈곤층의 순위로써 빈곤층 가운데 가장 가난한 가구의 경우 $i = 1$ 이고, 가장 빈곤선에 근접한 가구, 즉 빈곤층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는 $i = q$ 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PS는 빈곤층의 총상대적 박탈감지수(index of aggregate relative deprivation)로 해석할 수 있으며, GPq와 양의 관계이다. 만약 빈곤층의 수가 동일하고, 빈곤층이 전부 동일한 소득을 수령한다면, GPq에 의한 소득 분배 상태의 순서는 PS의 순서와 동일하다. q대신 n을 대입하고, π대신 x의 평균소득인 $\mu(x)$ 를 대입한다면, PS는 지니계수와 비례한다.

4) FGT지수

FGT지수는 1981년 포스터·그리어·토르벡(Foster·Greer·Thorbecke)이 제시하였으며 이들 이름의 첫자를 따서 FGT로 명명되고 있다. FGT지수는 다른 빈곤지수와는 달리 파라메

터 α 의 값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데 파라미터 α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로서 α 값이 커질수록 이 지수는 빈곤에 대해 민감해진다. 이 지수는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정도(depth)의 유의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센지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편리한 빈곤계측 지수이며 주로 세계은행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FGT지수는 다음과 같다.

$$P_{\alpha}(x, \pi) = \frac{1}{n} \sum_{i \in \pi(x)} \left(\frac{g_i}{\pi} \right)^{\alpha} \dots\dots\dots (8)$$

여기서, x 는 사회 전체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며, g_i 는 빈곤갭이며, $\alpha \geq 0$ 이다.

P_{α} 는 상대빈곤지수의 일종이며, 빈곤선이 증가하면 FGT 빈곤지수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π 의 증가함수이다. 이 지수는 소득에 대칭적이며, α 가 0보다 큰 경우, 소득(x)과 빈곤선(π)에 대하여 P_{α} 는 연속이다. 만약 $\alpha = 0$ 인 경우에는 FGT빈곤지수는 빈곤율이 된다.

$$P_0 = \frac{1}{n} \sum 1 = \frac{q}{n} = P_H$$

그리고 만약 $\alpha = 1$ 인 경우에는 FGT 빈곤지수가 빈곤율과 빈곤갭의 곱이 된다.

$$P_1 = \frac{1}{n} \sum_i \frac{g_i}{\pi} = \frac{q}{n} \sum_i \frac{g_i}{\pi q} = P_H * P_G$$

$\alpha = 2$ 인 경우에는 센지수가 지니계수와 함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G_{α} 는 일종의 불평등지수(inequality index)인 빈곤층의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함수 관계에 있다. 즉,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P_2(x, \pi) = P_H [(P_G)^2 + (1 - P_G)^2 (C_P^q)^2] \dots\dots\dots (9)$$

여기서 CP_q 는 빈곤층 사이의 분산계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의 수가 동일하고 빈곤층이 동일한 소득을 수령할 경우, P_2 에 의해 나타난 빈곤지수와 $(CP_q)^2$ 에 의한 빈곤지수가 비례 관계에 있다.

3. 빈곤 변화 추이

이번 장에서는 전체 도시근로자의 빈곤추이를 살펴본 후 가구주 특성을 학력, 연령, 성별로 구분하여 빈곤 추세를 분석한다.

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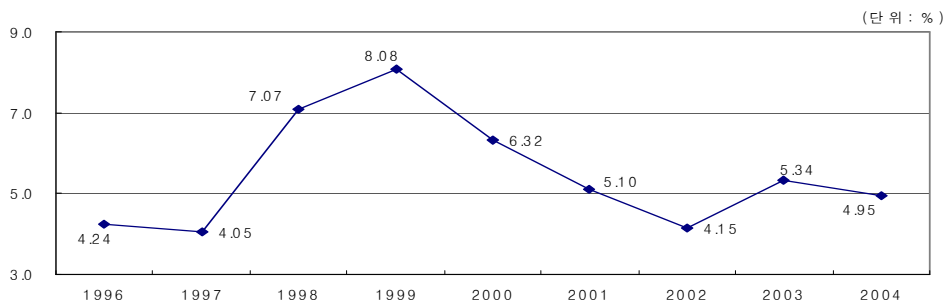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도시가계자료」는 2004년부터 비근로자가구의 연간 소득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시계열로 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1)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율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Head-Count Ratio)은 1996년 4.24%에서 이듬해인 1997년에는 4.05%로 빈곤상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7.07%로 상승하고, 1999년에는 8.08%에 도달하여 2년 사이에 2배가량 악화되었다.

1999년 이후에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힘입어서 2000년에는 5.85%, 2001년에 5.68%로 줄어들었고, 2002년에는 외환위기 전 수준인 4.15%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다시 악화되어 5.34%였으며, 2004년에는 4.95%로 외환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2-2]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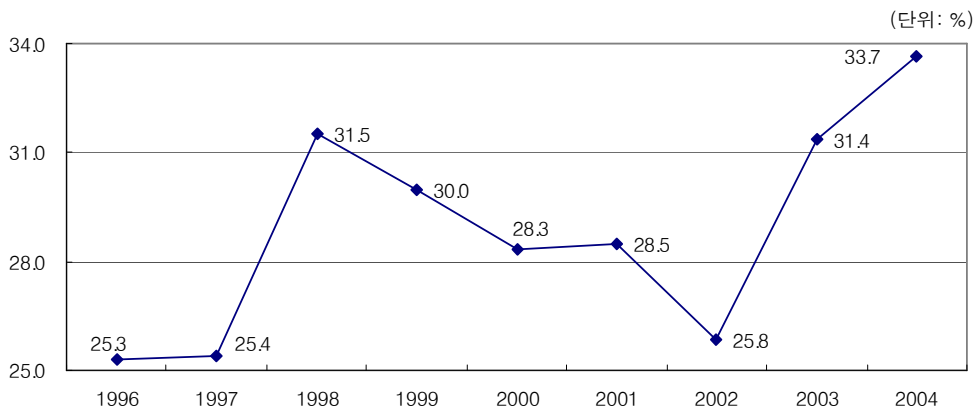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2)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갭 비율

빈곤갭 비율의 추이는 외환위기 전에 25.4%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의 질이 악화되어 1999년에 31.5%까지 상승하였다.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외환위기 전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25.8%에 도달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계속해서 빈곤갭이 악화되어 2004년에는 33.7%에 까지 이르게 되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빈곤의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빈곤율과 빈곤갭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빈곤의 강도가 심화된 후 2002년까지 소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빈곤층은 줄어들었지만, 빈곤의 강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의 악화와 함께 빈곤의 질적인 악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2-3]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갭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3) 도시근로자 가구의 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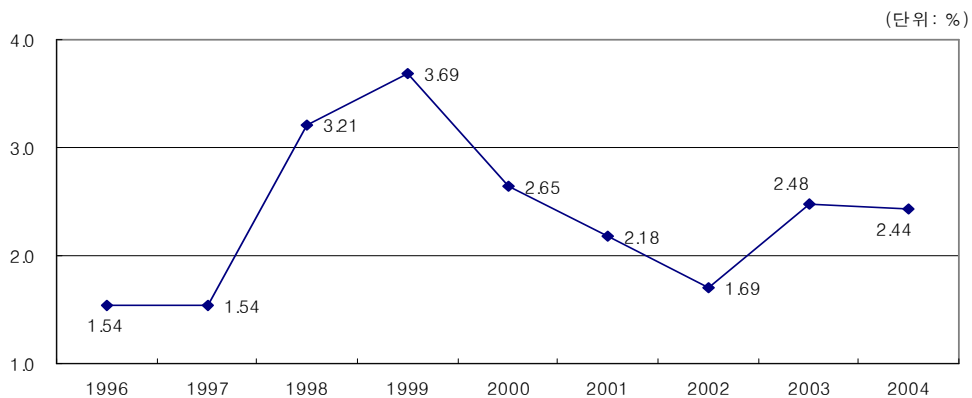
센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간의 소득분배 상태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균등화 지수를 OECD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OECD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구균등화 지수 가운데 최근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Buhmann, et. al.의 방법을 이용한다. 즉,

$$\text{가구균등화지수} = \frac{1}{\sqrt{\text{가구원수}}}$$

센지수에 의하면 1996년과 1997년에 1.54%에 불과하던 빈곤 상태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3.21%, 1999년에는 3.69%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빈곤상태는 개선되어서 2002년에 1.69%에 이르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어 2003년, 2004년 연속적으로 2.4%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2-4] 도시근로자 가구의 센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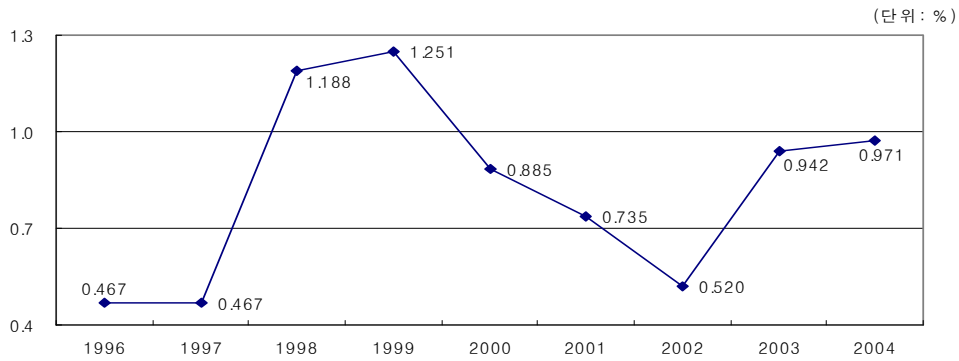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4) 도시근로자 가구의 FGT 지수

FGT 지수는 다른 빈곤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1996년과 1997년에는 0.47%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에는 이보다 2.5배 이상 상승한 1.19%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더 악화되어 1.25%였다. 2000년에 소폭 개선되어 0.8%였고, 2001년에는 악화되어 0.87%였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는 큰 폭으로 개선되어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0.52%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0.97%로 외환위기 전보다는 2배 이상 악화된 상태였다.

[그림 5-2-5] 도시근로자 가구의 FGT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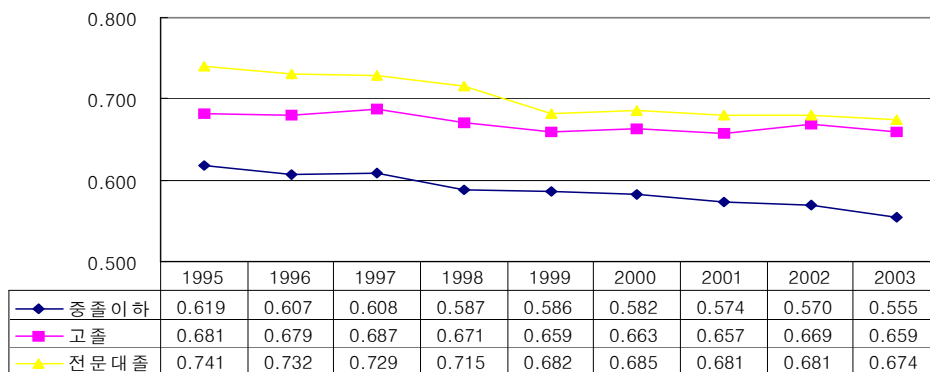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나. 가구주 학력별 빈곤 변화 추이

1) 가구주 학력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는 주로 대졸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문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임금 수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림 5-2-6] 학력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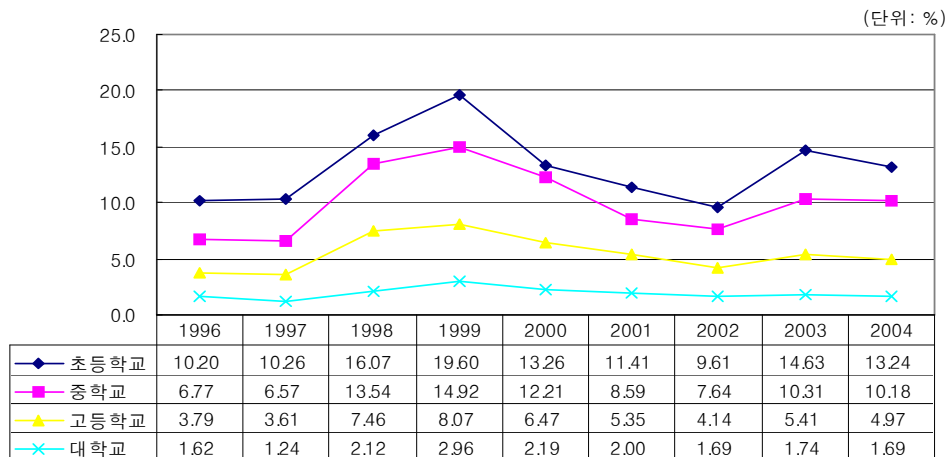
자료: KOSIS>주제별 검색(KOSIS)>고용·노동·임금>임금>학력 및 성별임금

1995년부터 대졸자의 임금에 대한 해당 학력을 소유한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면 <그림 6>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과거에는 초급대학) 졸업한 사람의 임금은 1995년 대졸자 임금의 74.1%에서 점차로 줄어들어서 2003년에 67.4%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의 임금은 1995년 68.1%에서 1997년에 소폭 상승하여 68.7%에 이르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줄어들어 2003년에는 대졸자의 65.9%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는 근로자의 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1995년 대졸자의 61.9%에 달하였으나 그 후 점차 하락하여 2003년에는 55.5%에 불과하였다. 즉, 학력간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여 저학력자의 빈곤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구주 학력별 빈곤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가구(이하 그림에서는 초등학교로 표시), 중학교 중퇴 및 졸업 가구(이하 그림에서는 중학교로 표시),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가구(이하 그림에서는 고등학교로 표시),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대학 중퇴 및 졸업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이하 그림에서는 대학교로 표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 가구주 학력별 빈곤율

[그림 5-2-7] 가구주 학력별 빈곤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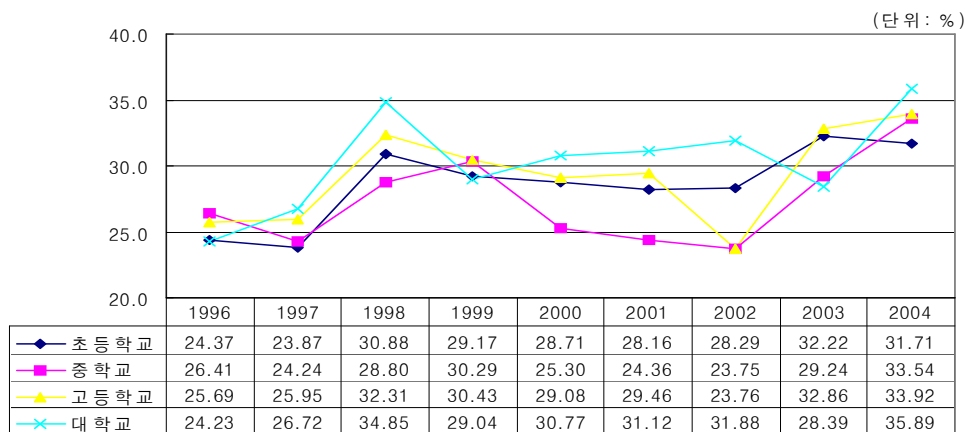
가구주 학력별에 의거한 빈곤율 추이는 다른 사회·인구학적변수와는 상이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던 1998년보다 1999년의 빈곤 상태가 악화되었고, 2002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악화되는 일관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년과 비교한 1999년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가 1997년보다 1999년에 2.38 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고학력자들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3) 가구주 학력별 빈곤갭 비율

가구주 학력별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그림 5-2-8>에 의하면 1997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빈곤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빈곤의 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전 계층의 빈곤갭이 악화되었다. 이후 학력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04년에는 빈곤의 심도가 크게 악화되어 전 계층의 빈곤갭이 30% 이상에 도달하였으며, 빈곤의 심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추정되어 빈곤율 정책과 더불어 빈곤의 심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2-8] 가구주 학력별 빈곤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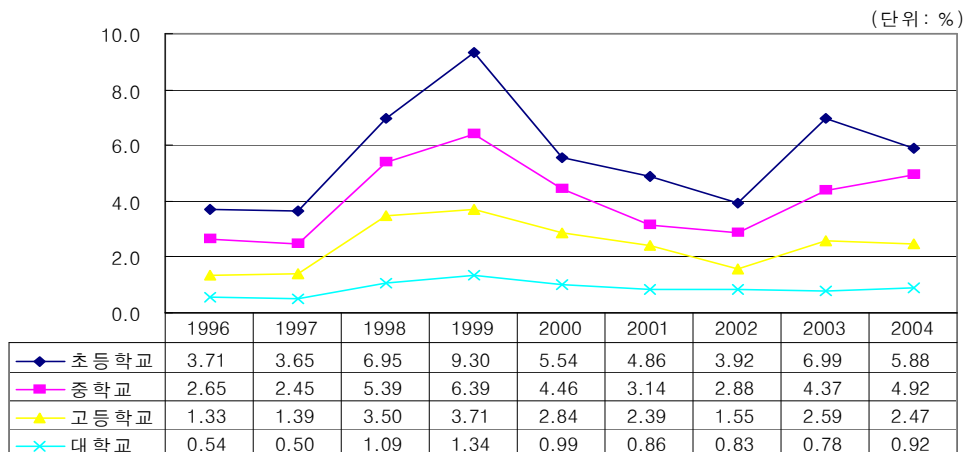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4) 가구주 학력별 센지수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센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빈곤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학력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센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까지 개선되어 1997년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으나 다시 악화되어 2004년의 센지수는 1997년보다 2배가량 악화된 상태였다.

[그림 5-2-9] 가구주 학력별 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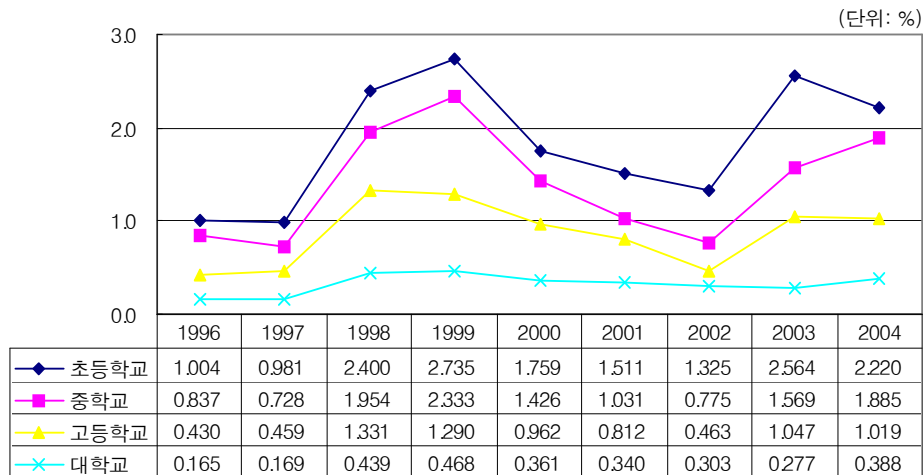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5) 가구주 학력별 FGT 지수

FGT 지수에 의하면 1999년의 빈곤상태는 1997년의 빈곤 상황보다 2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지수와 마찬가지로 2002년까지 외환위기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하였으며, 중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1996년 보다 빈곤 상태가 개선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악화되었으며, 2004년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과 비교하면 2004년의 빈곤상태는 2배에 이를 정도이다.

[그림 5-2-10] 가구주 학력별 FGT 지수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다. 가구주 연령별 빈곤 변화 추이

가구주 연령별 빈곤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5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특히 장·노년층의 빈곤율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 빈곤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50대 가구주 가구로 이루어진 계층이 2.49%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가구주 연령이 29살 이하인 계층이 3.36%였으며, 60대 이상인 가구주 가구로 이루어진 계층은 8.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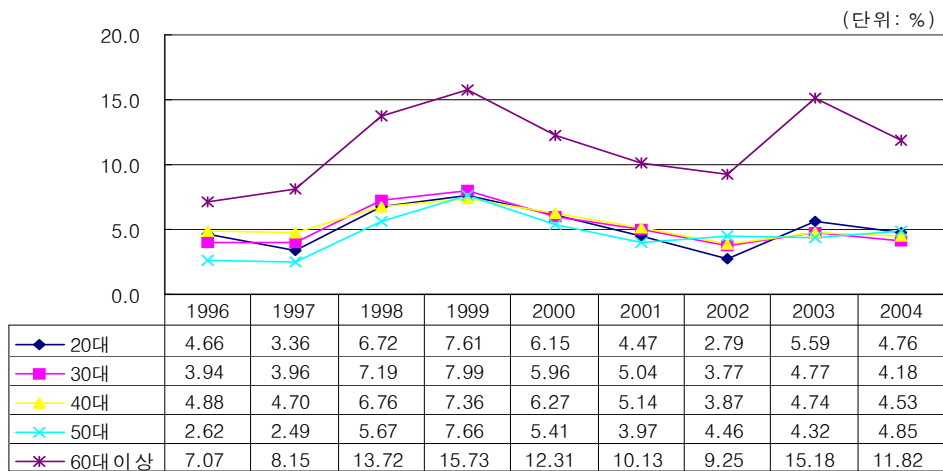
그러나 1998년에는 전 계층의 빈곤율이 악화되었고, 1999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가장 빈곤 상태가 악화된 계층은 50대 가구주 가구 계층으로써 1997년 2.49%보다 3.5배 증가한 8.78%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20대와 3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7년 각기 3.36%, 3.96%에서 2.4배 증가한 8.00%와 9.36%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빈곤율이 높았던 40대 가구주로 이루어진 계층(4.70%)과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계층(8.15%)

의 빈곤율은 각기 1.9배, 1.8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외환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전 계층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2002년까지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로 이루어진 계층은 2002년에도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3년에는 50대 가구주 가구의 계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이 다시 악화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구주 연령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 2004년에 이르러서는 전 연령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4%대를 유지하고,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로 이루어진 계층만 11.82%로 높은 빈곤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전인 1997년과 2004년을 비교해보면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계층을 제외하고, 1997년에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았던 계층은 빈곤 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았던 계층은 빈곤 상태가 적게 악화되어¹⁾ 각 계층의 빈곤율이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림 5-2-11]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1) 4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2004년의 빈곤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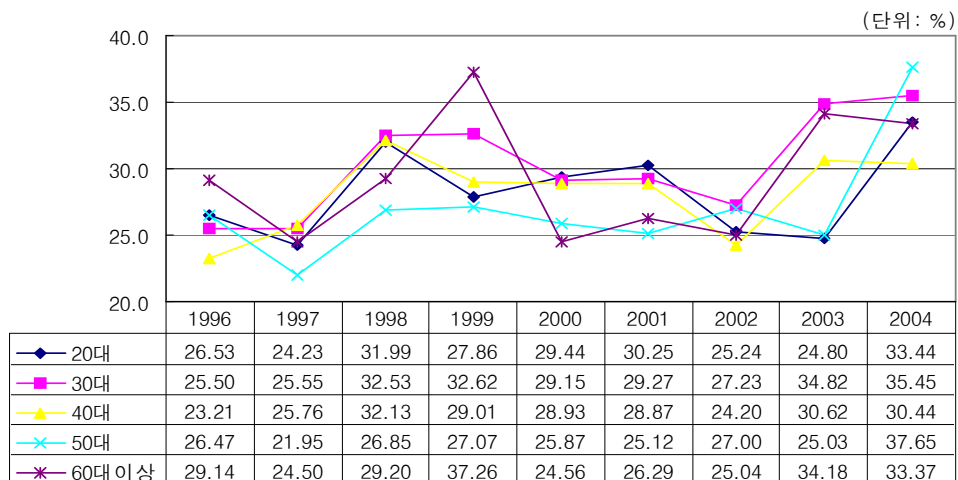
2) 가구주 연령별 빈곤갭 비율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 가구주 연령이 40대로 이루어진 계층의 빈곤갭은 23.2%로 상대적으로 빈곤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고, 60대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빈곤갭이 29.1%로 가장 빈곤 상태가 나쁜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계층을 제외하고서는 빈곤의 심도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2001년까지 계속되다가 2002년에는 빈곤갭이 줄어들어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여파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4년에 이르러서는 전 계층이 30% 이상으로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심도는 악화되었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계층은 빈곤율의 상승과 더불어서 빈곤의 심도가 가장 크게 악화된 계층이므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5-2-12] 가구주 연령별 빈곤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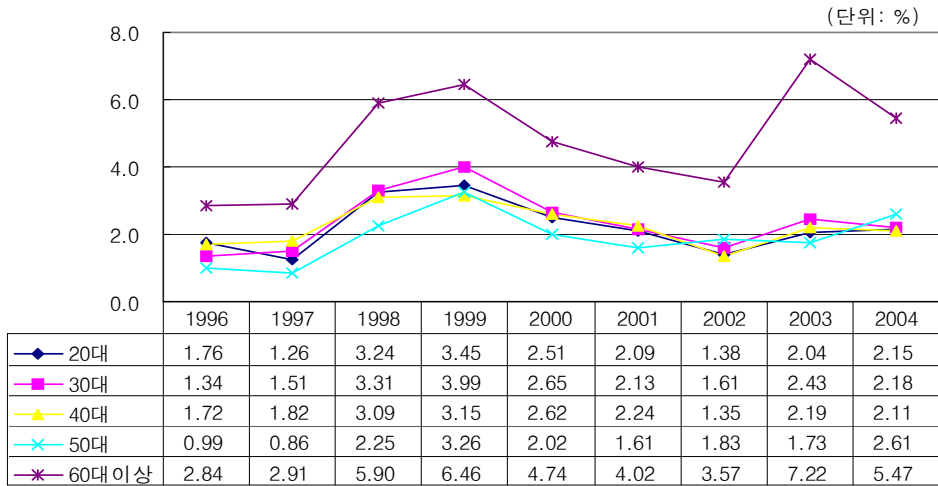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3) 가구주 연령별 센지수

센지수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과 1997년에 연령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빈곤 상태가 0.86%에 불과하고, 20대 이하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계층은 1.26% 등으로 2% 미만이었으며,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2.91%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1999년에는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빈곤상태가 6.46%에 이르렀고, 가장 빈곤 상태가 우수한 계층인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계층도 3.20%에 도달할 정도로 크게 악화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50대 가구주 가계로 센지수가 3배 이상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50대 가구주로 이루어진 계층의 빈곤 상태는 2002년에 더욱 악화되어 1.83%로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에 이어 가장 빈곤한 계층으로 추정되었다. 2004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계층의 빈곤 상태가 2%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5.47%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5-2-13] 가구주 연령별 Sen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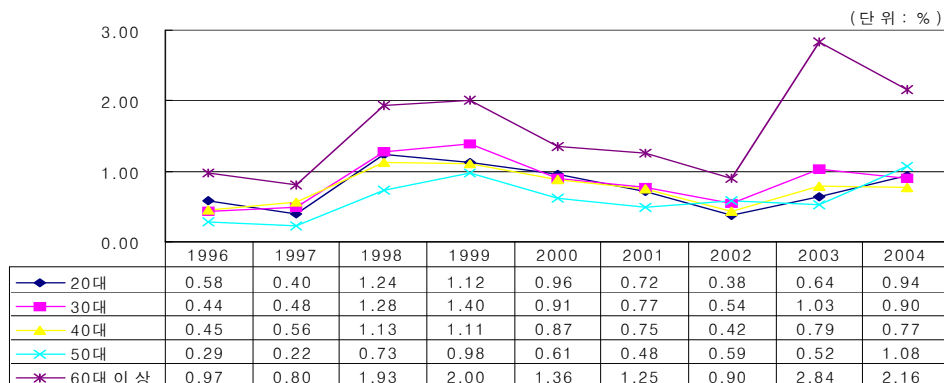
4) 가구주 연령별 FGT 지수

FGT 지수는 앞에서 언급한 센지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전에 가장 빈곤 상태가 양호했던 5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가 악화되어, 2004년에 이르러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계층에 이어 빈곤 상태가 두 번째로 열악한 계층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는 50대 가구주의 빈곤 상태(0.22%)가 가장 좋은 상태였고, 20대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0.40%),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구(0.48%), 40대 가구주로 이루어진 계층(0.56%)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빈곤 상태가 열악한 연령 계층은 60대 이상으로 0.80%이었다. 다른 빈곤 지수와 마찬가지로 1999년에 빈곤 상태가 가장 악화되어 전 계층이 1%를 초과하였고, 60대 이상 가구주 계층은 2.00%에 이르렀다.

계층별로 약간 상이한 추세를 보였으나,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계층을 제외하고서는 2002년의 빈곤 상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악화되어 2004년에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전에 빈곤 상태가 가장 좋던 50대 가구주 가구가 2004년에는 1.08%로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계층의 2.16%에 이어 빈곤 상태가 열악한 계층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5-2-14] 가구주 연령별 FGT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라. 가구주 성별 빈곤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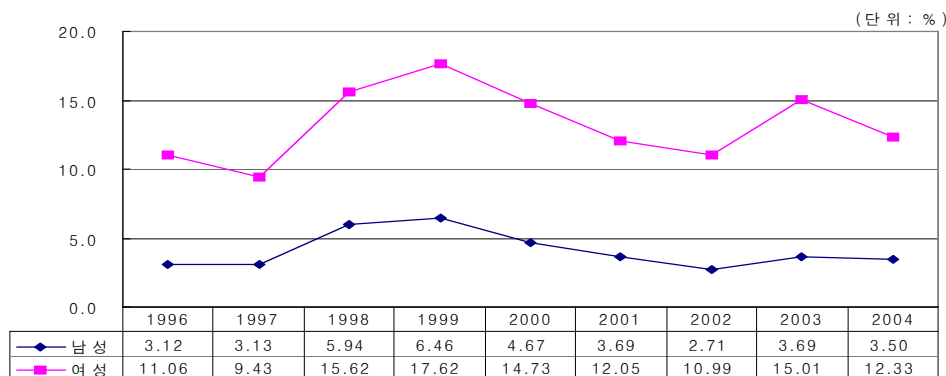
1) 가구주 성별 빈곤율

가구주 성별에 의거하여 분석한 빈곤율 추이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남성가구주의 빈곤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빈곤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계속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남성,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공통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997년과 비교하여 1.8배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외환위기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는 절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상승률(65.6%)이 낮아서, 빈곤의 악화 정도는 적은 것으로 계속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어 2002년에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외환위기 전인 1997년 수준(9.43%)보다 약간 높은 빈곤율(10.99%)을 보였고, 남성가구주 가구는 외환위기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2.71%에 이르렀다. 2003년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남성가구주 가구는 소폭 상승하였다. 2004년에는 전 가구의 빈곤율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나, 외환위기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다시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가하는 우려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15] 가구주 성별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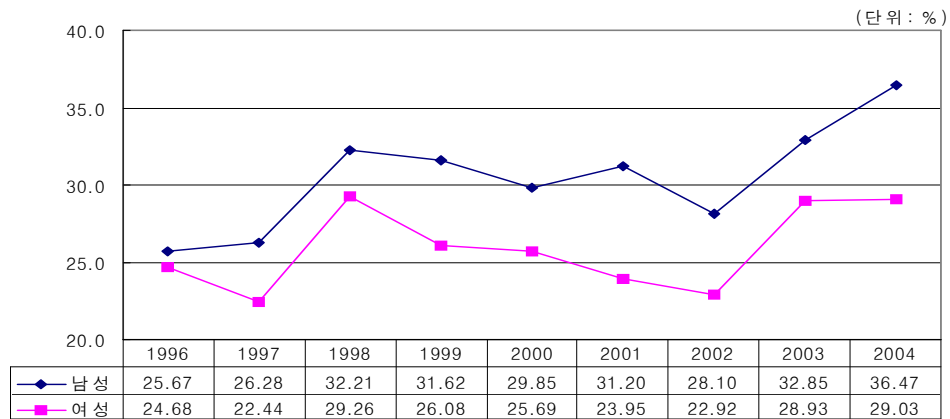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2) 가구주 성별 빈곤갭 비율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빈곤갭 계산 결과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이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되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전반적인 추세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빈곤갭이 상승하고, 1999년에는 빈곤갭이 줄어들며, 그 이후 여성가주 가구의 빈곤갭은 계속 줄어들어 2002년에 거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남성가주 가구의 빈곤갭은 2001년에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빈곤갭이 증가하는데 특히 남성가주주의 빈곤갭이 상승하여 2004년에 36.5%에 이를 정도였다. 빈곤의 질적인 차원에서 남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질적인 빈곤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5-2-16] 가구주 성별 빈곤갭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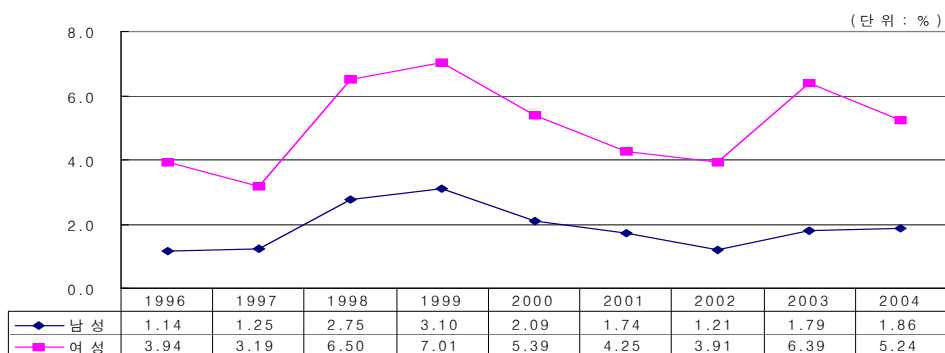
3) 가구주 성별 센지수

가구주 성별에 의거하여 계산한 센지수에 의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가 남성보다 열악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센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빈곤율이 빈곤갭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센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에 남성가구주의 센지수는 상승하는 반면에 여성가구주의 센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상승하고, 빈곤갭이 줄어들지만, 남성가구주의 빈곤층 간의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빈곤율과 빈곤층 사이의 지니계수 효과가 빈곤갭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과 1999년 연속적으로 두 계층의 센지수가 커져서 빈곤상태가 악화되었고, 2000년에 개선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001년에 들어와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센지수는 줄어들었으나, 남성가구주 가구의 센지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남성가구주 가구의 센지수 상승은 빈곤갭의 상승효과가 빈곤율의 하락효과보다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002년에 센지수는 전 계층에서 줄어들었고,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03년에는 상승한 후 2004년에 센지수가 줄어들었으나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센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여성의 빈곤상태 악화(3.19%에서 5.24%)가 남성의 빈곤상태 악화(1.25%에서 1.8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17] 가구주 성별 Sen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4) 가구주 성별 FGT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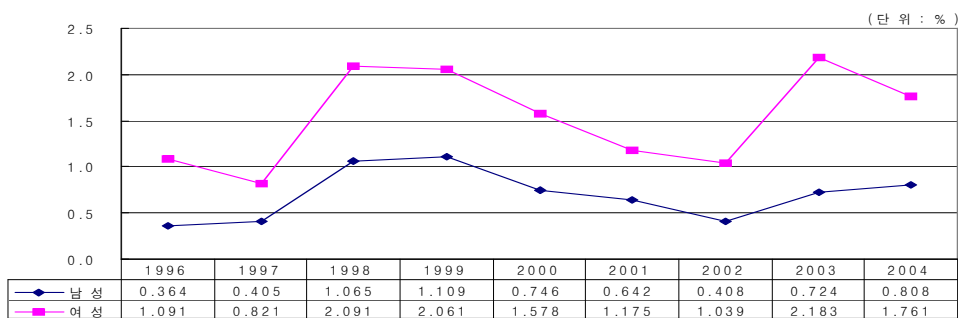
1996년이래로 2004년까지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를 FGT 지수에 의해 비교해 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계속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보다 1997년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남성가구주 가구의 FGT지수는 소폭 상승하여 악화된 것으로 계속되었다.

그 후 외환위기에 접해서 1998년의 FGT 지수는 남성가구주 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 전부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속되어서 빈곤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1999년 이후 여성가구주 가구는 점차 빈곤상태가 개선되어서 2002년에 FGT지수가 1.04%에 이르게 되었다. 2002년의 수준은 금융위기 전인 1996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빈곤상태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1999년에 소폭 악화되고, 2002년에 이르러서는 FGT지수가 0.41%로 줄어들었으므로 1997년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상태는 다시 큰 폭으로 악화되어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2004년에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외환위기전인 1997년의 2배 수준(1.76%)이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FGT 지수는 2003년, 2004년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0.81% 도달하게 되었고, 이 수준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과 1997년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림 5-2-18] 가구주 성별 FGT 지수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4. 결론

1996년 이래로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마찬가지로 평균소득의 상승률보다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최저생계비의 평균소득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 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1995년 이후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학력별 빈곤 상태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화될 확률이 높으며, 빈곤의 정도(빈곤갭)도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별로 보았을 때는 1998년에 큰 폭으로 빈곤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1999년에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2002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최근에 다시 악화되어 1998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저학력 근로자의 빈곤화는 정부가 학력보다는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저학력 근로자에게 본인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직업 교육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실업률 상승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50대에 퇴직을 하면 남은 20여년 동안 살아나갈 길이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장·노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첫째, 장·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장·노년층의 경우에는 기존의 직장에서 익힌 노하우(know-how)를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장·노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에 여러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장년층의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이들의 기술을 젊은 노동자에게 전수할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하기 어려운 노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형식적인 소득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채용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직접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을 제고하여 탈루소득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빈곤화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들은 성별분업과 성차별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특히 가족과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남성에 비해 경제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이 제한되어 있고, 건강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여성 노인들의 빈곤문제 또한 확대되는 추세이며,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여성의 탈빈곤이 불가능해 보인다.

UNDP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고한다.¹⁾ 여성 빈곤의 원인이 반드시 노동시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가족구조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빈곤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소득과 소비 관점을 넘어서서 ‘사회적 배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²⁾

여성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빈곤문제에 대한 ‘예방적 · 생애주기 접근’을 취해야 한다. 기존의 여성빈곤 정책은 모자가정이나 공공부조 수급자의 경우와 같이 빈곤 문제가 발행한 이후 개입을 해 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탈빈곤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빈곤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빈곤화 현상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집단은 혼자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여성가구주와 독거 여성노인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장애여성과 폭력피해 여성 등 사회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하며, 이들의 심층적인 욕구와 빈곤문제 해결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부처별로 산재되어있는 기존의 여성빈곤 관련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

1) UNDP(1998), *Overcoming Human Poverty*, UNDP

2) 1980년대 프랑스에서는 기술의 변화와 경제구조 조정과 더불어 나타난 ‘신빈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장기 실업의 증가, 불안정해진 가족구조, 노숙자의 증가와 판자촌에서 폭력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무너지는 과정을 ‘사회적 배제’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시민권과 사회적 통합의 개념을 배경으로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개념이 태동하였다.

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곤(1997), 「최저생계비 계층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3호.
- 김미곤 외(2000),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욱(2006), 『새로운 빈곤층의 출현과 정부의 정책 과제』, 집문당
- 김진욱, 박찬용(2000),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 변화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연구』, 5권 2호
- 김진욱·정의철(2004),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27권 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 김진욱(1999), 「위기경제 전후 가구주 특성별 빈곤수준 변화계측」, 『사회보장연구』, 16권 1호
- 박찬용·김진욱·김태완(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인숙(2003), 「여성빈곤의 인구학적 프로파일」,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여성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제 5 회 회 의 록 〕

1 주제 : 빈곤 및 불평등 동향

2 주제 : 가구주 특성별 빈곤상태의 변화

《 1주제 : 빈곤 및 불평등 동향 》

□ 의견 및 토론

○ 빈곤 추이 분석

- 절대빈곤 추이와 관련해 발표문 10쪽에 가구 기준 빈곤율을 제시해 놓았음. 그런데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비교 시 가처분 소득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그런데 전가구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리고 인구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기준 시장소득 빈곤율을 보면, 98, 99, 00, 01년을 볼 때 불평등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샘플 교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노동시장과의 관계는? 미국의 경우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빈곤율을 계산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음. 샘플교체에 따라 5년 주기로 빈곤율이 패턴을 가지고 나타남.

▶▶ 답변

- 지적하신 말씀에 일정정도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1인가구와 농어촌의 공적이전수급률이 높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패턴이 2002년과 2003년의 데이터의 빈곤갭에서도 불안정한 느낌이 있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빈곤 추이 분석방법

- 상대소득을 분석하면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고, 절대빈곤의 경우는 가구원별 기준을 사용해서 빈곤율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
- 가처분소득을 사용할 시 음수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데, 기준사용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했으면 함.

▶▶ 발표자 답변

- 상대빈곤이라는 개념에 더 충실하자면 가구균등화의 개념에 더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됨.

□ Q & A

○ 절대빈곤의 경우 7인 까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는가?

▶▶ 발표자 답변

- 원래 정부 발표가 6인까지만 되기 때문에 5인과 6인의 차이를 빼서 7인에 더하는 방법을 사용.

○ 빈곤율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지?

▶▶ 발표자 답변

- 절대빈곤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들어가는 아이템과 대칭성이 있는 경상소득이 가장 낮다고 생각함. 상대빈곤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다고 생각함.

○ 지출기준으로 빈곤율을 계산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

▶▶ 발표자 답변

- 2007년부터 지출기준 빈곤율을 제시하려고 계획 중

《 2주제 : 가구주 특성별 빈곤상태의 변화 》

□ 의견 및 토론

○ 다변수 분석의 필요성

- 자료를 활용해 다변수로 분석해 갈 때,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성별을 통제변수로 두면서 학력과 연령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함의를 보다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음
- 학력별로 보았을 때, 고학력자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측면도 중요하지만 학력간 격차라는 측면을 숫자적으로 파악해볼 때 저학력자가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해석해볼 여지도 있음.

○ 연령별 빈곤율 차이 해석

- 연령별 빈곤율 차이를 강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임금결정방정식을 fitting해보면, 40

대 중반에 피크임. 이러한 추세를 발표자료의 빈곤율과 연결해보면 96, 97, 98, 99년도의 40대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론과 차이를 보임. 위의 설명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어떻게 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함

○ 분석방법에 대한 의견

- 앞의 발표자료(김태완박사님)와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면 동일비율 증가와 동일액수의 증가의 차이가 있음. 동일비율이 더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듦.

○ 논의의 발전

- 빈곤문제의 원인이나 심각성에 대한 진단은 이미 합의가 많이 된 상황인 듯함.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빈곤을 완화,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와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이 많이 제시되어야 함.

□ Q & A

- 일반적으로 센지수와 빈곤갭이 동일하지 않는가?

▶▶ 발표자 답변

- 센지수를 100%로 볼 때, 빈곤율이 50%, 저소득층 지니계수가 30%의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음.

□ 발표자 종합 정리

- 어떤 변수를 통제하고, 두변수간의 관계를 보아서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연령, 성, 학력별로만 보면 분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앞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킬 것임.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나름대로 빈곤정책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득의 상승률에 못미친다는 점을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었음.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빈곤정책이 필요하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도 필요함을 부각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음.
- 노동시장과 (연령별) 빈곤율간의 불일치성에 대한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러한 원인을 데이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론적 정합성을 높여볼 것임.

제6회 빈곤포럼

〈주제 및 발표자〉

-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 발표자 :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일시: 2006. 12. 21(목). 16:00 ~ 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1회의실

■ 좌장: 이성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원외〉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용성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진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원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팀장)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팀장)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 가구조득변화를 중심으로 -

노대명

1. 서론

가. 연구목적

- 최근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관심은 단순한 규모추정을 넘어 빈곤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양태와 그러한 발생 및 변화의 원인에 맞추어져 있음. 이는 정책의 정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먼저 연구의 출발은 계속빈곤층(persistent poor)은 누구이며, 이들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 통념적으로 알고 있듯, 계속빈곤층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책적으로 관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할 것임. 하지만 계속빈곤층 속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대한 소득보장과 다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어 최근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연구가 주목하고 있듯이, 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빈곤으로 진입하고 탈출하는가 하는 점. 특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소득변화

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끝으로 빈곤층의 빈곤탈출이 갖는 불안정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기존의 빈곤동태성 (poverty dynamics) 연구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듯이, 특정 시점에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의 절반 가량이 수 년 내에 다시 빈곤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제한된 자원으로 빈곤탈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임.

※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탈빈곤을 촉진하는 고용지원 정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이 어떠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나.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Survey Data를 Panel Data로 재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할 것임.

- 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의 추정
- 빈곤 Dynamics의 특성을 고려한 빈곤가구의 유형화
-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주기에 대한 Survival Analysis

Cross-Section data 및 Panel Data의 빈곤율 추정방법

-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년도 Cross-Section data를 활용하여 년도별, 분기별, 월별 빈곤율을 추정함으로써 패널데이터와의 빈곤율 비교를 위한 준거점을 제시
- 빈곤선은 경상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가구균등화 지수)으로 균등화한 뒤, 그 중 위소득의 50%로 설정하였음.

- 모든 데이터는 Cross-Section data를 토대로 추출된 빈곤선을 적용하였음. 즉, 패널데이터의 경우에도 패널데이터의 중위소득이 아닌 Cross-Section data의 중위소득에서 추출한 빈곤선을 적용하였음. 이는 패널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빈곤층 탈락비율이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

2) 분석자료

- 본 연구는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자료('03년~'06년 2/4분기)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03년~'06년 2/4분기)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03년~'06년 2/4분기)
- 전국가계조사자료 Panel Data의 기간설정
 - 본 연구는 전국가계조사(3년 6개월)의 월별 데이터를 가구id를 기준으로 Panel Data로 가공하여 활용해야 함. 이 점에서 Cross-Section Data의 분석대상기간 중 응답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가구데이터를 Matching하는 기간에 따라 표본유지율이 큰 폭의 변화를 보임. 따라서 Panel Data Sample Size를 감안하여 분석대상기간을 2003년 1월에서 2005년 12월(총 36개월)로 제한
- 전국가계조사자료 Panel Data의 분석단위 기간설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전국가계조사자료의 Panel Data로의 가공과 관련해서 데이터의 각 분석단위기간을 분기로 정하여, 총 12개 시점의 데이터로 재구성하였음. 이는 Poverty Spells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점의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
 - Panel Data의 분기데이터 구축을 위해 월간 데이터를 분기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관련 변수는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최종 월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 단, 데이터의 표본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 분기 중 1월 이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데이터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따라서 각 분기를 구성하는 3개월의 데이터 중 1개월의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이 분기 값을 의미함.

다.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2장은 패널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기본정보를 정리하고, 기존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이후의 논의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제시. 특히 빈곤가구의 규모와 사회보장 실태를 분석하여 위기집단 및 정책의 사각지대를 제시
- 제3장은 지난 3년간 전체가구의 소득변화를 Didier Fouarge(2003)의 유형화 방법에 따라 계속빈곤가구, 일시빈곤가구, 반복빈곤가구 등으로 구분하고, 빈곤동태성의 유형에 따른 각 집단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06년 상반기 데이터를 활용
- 제4장은 Bane & Ellwood(1983)의 분석방법에 따라 빈곤가구가 그 특성에 따라 빈곤상태에 빠진 후 그로부터 탈출할 확률 또는 반대로 빈곤상태에 빠질 확률을 분석(Survival Analysis)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앞 장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빈곤층의 유형별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2.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가. 패널데이터의 빈곤율 추정방법

1) 데이터에 따른 빈곤율 추정방식의 장단점

- 빈곤율은 계측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빈곤율을 추정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
 - 기존의 가구소득 관련 데이터 중에는 가계부 기장 방식의 도시가계(전국가계) 데이터가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음. 이 점이 회고방식의 연간 단위 Survey data(대부분의 조사)에 비해 통계청 조사자료가 갖는 강점
 - 하지만 통계청 데이터는 중요한 한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연간 단위 데이터의 경우 월 단위 데이터의 단순 합계라는 점에서, 특정 월에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가 모두 빈곤가구로 파악되어 빈곤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
 - ※ 특정 월에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라도 전후의 소득을 통해 실제 지출에 있어 빈곤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빈곤가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
 - 결국 빈곤율을 추정함에 있어 데이터의 신뢰도는 통계청 데이터가 높지만, 가구소득을 1년 혹은 6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으로 조사하는 일반 Survey data의 빈곤율이 실제에 보다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이는 통계청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 간의 빈곤율 추정에 대한 우열논쟁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 과거 보사연 조사 데이터를 통해 추정되었던 빈곤율은 최근 통계청 도시가계조사가 전국가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정되는 빈곤율과 유사하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음.
 - 물론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의 월별 또는 분기별 데이터를 패널화 하여 가구소득을 연간단위의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빈곤선을 적용한다면, 일반 Survey data의 강점과 통계청 가계부 기장 데이터의 강점을 모두 수용하는 최선의 빈곤율 추정방식

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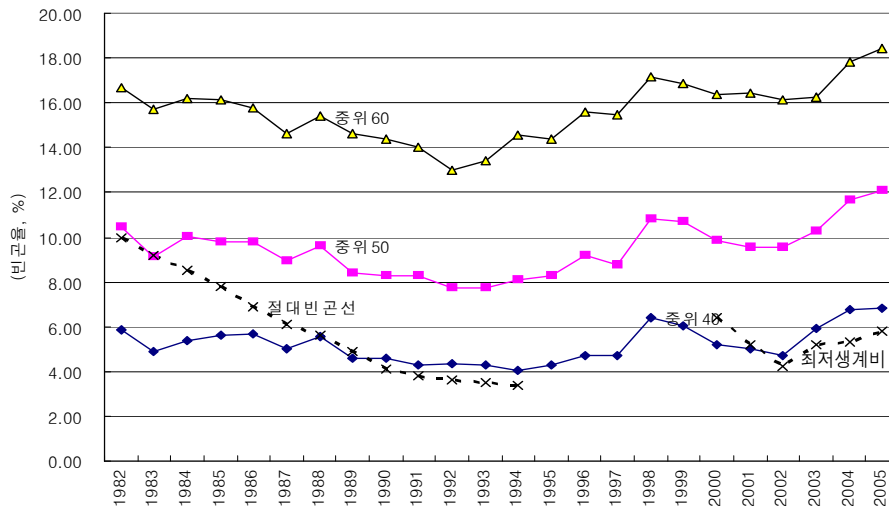
※ 물론 이는 년(12개월) 내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원시가구 표본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이며, 3년간의 패널데이터에서는 표본생존율이 매우 낮아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율을 추정하는데 무리가 따름.

2) 빈곤율의 장기적 추이 : 1982년 ~ 2005년

□ 우리사회의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다 외환위기 직후 그리고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경향은 2005년까지 계속 상승세

- 1990년대 이전은 서상목 등의 절대빈곤선을 활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하면,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990년 중반까지 소득분배 구조 개선과 맥을 같이함.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추정하였으며, 이는 상대빈곤선 중 중위소득의 40% 기준 빈곤율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상대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60%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빈곤율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단, 아래 그림은 2인 이상 도시임금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이라는 점에서 전체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그리고 그 변화양상이 전체 가구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비임금근로가구 및 미취업가구의 소득변화를 설명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존 도시가계조사자료의 빈곤율은 취업빈곤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추정한 자료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그림 6-1] 1980년 이후 도시임금근로자가구의 빈곤율 변화



주: 1) 빈곤율은 경상소득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40%-60%를 빈곤선으로 적용
 2) 조사표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임금근로가구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년간), 각년도 원자료

3) Cross-Section Data의 연간 단위 및 분기 단위 빈곤율

- 본 패널분석에서 활용할 자료를 토대로 연간 빈곤율 및 실업률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 2003년~2005년 빈곤율은 내부에서의 변화폭이 크지 않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빈곤율 추이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증가국면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함. 참고로 2003년 ~ 2005년의 빈곤율은 약 0.5%(가구)와 0.4%(개인)의 변화(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상반기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구빈곤율은 20.1%로 전년 대비 약 3.3%의 증가를 보이나, 이는 빈곤율이 높은 1인 가구가 포함되었기 때문
 - 동일한 표본으로 통제하여 빈곤율을 비교하면,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빈곤율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3년~2005년까지 연간 단위 실업률은 약 0.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표 6-1> 년 단위 가구 및 개인 빈곤율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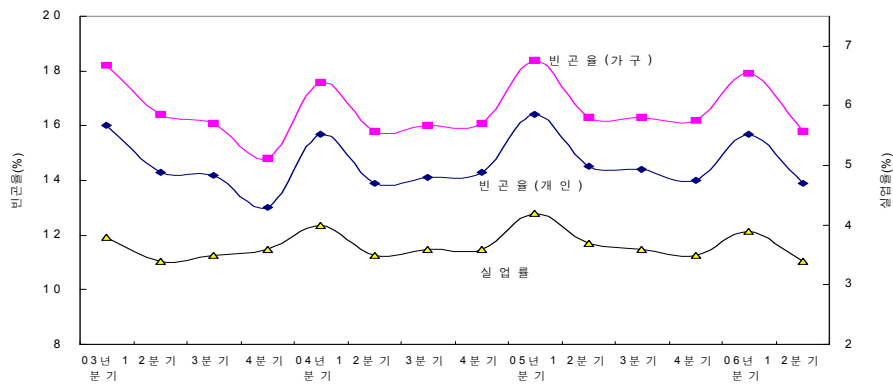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1인 가구 포함)
빈곤율						
빈곤가구 비율	가중	16.4	16.4	16.8	16.9	20.1
	비가중	17.1	17.2	17.1	17.4	20.7
빈곤가구원 비율	가중	14.4	14.5	14.8	14.8	15.2
실업률						
개인단위	가중	3.6	3.7	3.7	-	-

주: 빈곤선은 경상소득의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활용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데이터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데이터

□ 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기별 빈곤율 및 실업률을 추정하면, 분기별 빈곤율과 실업률은 계절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아래 [그림 6-2] 참조).

[그림 6-2] 분기별 빈곤율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데이터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데이터의 분기단위 가공 데이터

4) Panel Data와 Cross-Section Data의 년 단위 및 분기 단위 빈곤율 비교

- Cross-Section data를 단순 이용한 빈곤율(<표 6-1>)이 한 달이라도 빈곤경험이 있는 가구 및 가구의 비율을 추정함에 따라 해당 년도 빈곤율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먼저 각 년도에 12개월 모두 응답한 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빈곤선을 적용하면, 빈곤율은 2003년에 11.5%, 2004년에 12.8%, 2005년에 13.3%로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아래 <표 6-2> 참조).
 - Cross-Section data를 활용한 빈곤율과 12개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빈곤율을 비교하면, 약 5~6%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2> 연간(12개월) 단위로 패널화된 데이터의 연간 빈곤율

	2003년	2004년	2005년
빈곤가구 비율	11.5	12.8	13.3
표본유지율 (12개월 응답가구 / 전체 가구)	62.16 (5,520/8,881)	62.89 (5,760/9,159)	33.83 (3,846/11,367)

- 주: 1) unweighted
 2) 빈곤율 추정방식은 각년도 전체 응답가구 중 12개월 모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빈곤선을 적용하여 추정한 빈곤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데이터의 연간 12개월 단위로 패널화된 데이터

- 아래 <표 6-3>은 각 년도의 응답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당 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 1개월에서 3개월을 응답한 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율이 평균 빈곤율보다 높아, 빈곤가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대표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함.

〈표 6-3〉 응답개월 수에 따른 가구별 빈곤가구 비율

응답개월 수	2003년	
	가구의 %	빈곤율
1	5.15	23.7
2	4.33	19.0
3	4.36	22.1
4	3.43	19.8
5	3.67	16.8
6	3.22	14.9
7	3.23	21.0
8	3.46	19.0
9	3.83	17.7
10	3.89	11.3
11	3.80	15.1
12	57.65	11.5
(전체) 년간	100 (9,575)	14.4

□ 위의 12개월 Panel data를 토대로 추정된 연간 빈곤율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 <모형 A : 각 년도 Cross-Section data의 가구 빈곤율>, <모형 B : 전 기간 패널데이터의 가구 빈곤율>1)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남.

- <모형 A>의 빈곤율은 <모형 B>의 빈곤율에 비해 평균 3.06%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됨. 이는 패널데이터의 경우, 빈곤가구가 표본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고,
- 결국 이 패널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등의 작업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후의 작업에서 배제될 것임.

1) 2003년 1/4분기에서 2005년 4/4분기까지 모두 응답한 데이터의 월 평균소득에 빈곤선을 적용하였으며, 총 가구 수는 3,081가구로 모든 분기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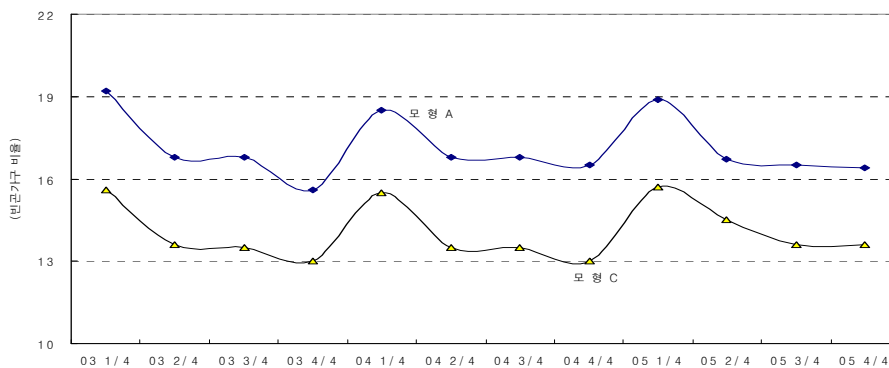
〈표 6-4〉 패널데이터의 분기별 가구 빈곤율

(단위: 가구, %)

	2003년				2004년				200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형 A	19.2	16.8	16.8	15.6	18.5	16.8	16.8	16.5	18.9	16.7	16.5	16.4
모형 B	15.6	13.6	13.5	13.0	15.5	13.5	13.5	13.0	15.7	14.5	13.6	13.6
B - A	-3.6	-3.2	-3.3	-2.6	-3.0	-3.3	-3.3	-3.5	-3.2	-2.2	-2.9	-2.8

주: unweighted

[그림 6-3] 데이터에 따른 분기별 빈곤율 비교



□ 12분기 동안 패널가구가 빈곤을 경험한 평균 횟수는 1.69회(분기)이며, 빈곤을 한번이라도 경험했던 가구의 평균 경험횟수는 4.81회(분기)로 나타나고 있음.

- 아래 표는 12분기 동안 빈곤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 가구의 64.9%, 반대로 말하면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35.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
- 또한 빈곤경험가구의 상당수가 일시빈곤층(transitional poor)이거나 반복빈곤층(recurrent poor)이며, 계속빈곤층(persistent poor)은 전체 가구의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

- 분기단위 빈곤진입 탈출가구의 비율을 추정하려면, 2분기 단위 혹은 쉰 분기에 걸친 Panel화된 데이터가 필요. 문제는 모수추정 기능을 상실하여 몇 %의 가구가 매년 새롭게 진입한다는 의미가 약화된다는 것.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패널가구 내의 빈곤진입과 탈출의 분기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6-5〉 분기 단위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

(단위: %)

	전 분기 대비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 비율									
	'03. 1~2분기	2~3분기	3~4분기	'03.4~ '04. 1분기	1~2분기	2~3분기	3~4분기	'04.4~ '05. 1분기	1~2분기	2~3분기
진입가구	4.0	3.4	3.4	5.4	3.5	3.4	3.6	5.4	3.1	3.2
탈출가구	5.9	3.6	3.9	2.9	5.5	3.5	4.1	2.7	4.3	4.2

주: 패널화된 데이터의 분기단위 소득지위 변화

〈표 6-6〉 연간 단위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

	전년 대비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 비율		전체 기간 중 빈곤진입 및 빈곤탈출 가구 비율
	'03년 ~ '04년	'04년 ~ '05년	'03년 ~ '05년
진입가구	4.1	4.7	6.1
탈출가구	3.6	3.6	4.6

주: 패널화된 데이터의 연간 평균소득 기준 소득지위 변화 (분기 중 1월 이상 응답한 가구를 유효 케이스로 간주)

나. 근로빈곤층의 규모추정

- 근로빈곤층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²⁾.
- 먼저, 조사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이는 취업빈곤층과 실직빈곤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취업빈곤층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되며, 다시 종사상지위에 따라 6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EFILWC(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 둘째, 실질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음. 이는 미국 노동통계청(BLS)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년간 6개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가구원'을 근로빈곤층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는 첫 번째 방식에 비해 그 포괄범위가 넓어 보다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셋째,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음. 이는 연령과 근로능력유무 등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을 구분하는 것임. 이 두 방법 중 후자는 결과적 취업상태보다 근로가능성(workability)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
- 조사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 여기서는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즉 현 취업상태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기로 함.
 - 아래 <표 6-7>은 근로빈곤층 중 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변화폭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줌. 자영빈곤층과 실직빈곤층은 빈곤율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 실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은 약 2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임.

2)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 및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노대명 외(2004)) 참조

〈표 6-7〉 취업상태를 고려한 근로빈곤층의 규모

		경제활동 인구 중 빈곤층	취업자			미취업자 중 빈곤층
			전체 취업자 중 빈곤층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비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2003년	1/4분기	9.7	9.7	8.8	10.5	22.5
	2/4분기	8.8	8.6	7.9	9.8	19.5
	3/4분기	9.1	8.0	7.6	10.9	25.0
	4/4분기	8.7	7.7	7.5	9.7	25.4
	년 평균	9.07	8.50	7.95	10.23	23.10
2004년	1/4분기	10.3	9.7	8.8	12.0	28.6
	2/4분기	9.0	9.0	7.6	11.0	20.0
	3/4분기	8.5	8.6	6.3	12.2	27.0
	4/4분기	8.2	7.6	6.6	10.3	27.7
	년 평균	9.00	8.72	7.33	11.38	25.82
2005년	1/4분기	10.4	9.3	8.2	13.4	31.1
	2/4분기	9.4	8.5	7.5	12.5	25.2
	3/4분기	9.0	8.6	7.5	11.1	26.5
	4/4분기	8.2	8.6	7.2	8.8	30.2
	년 평균	9.25	8.75	7.60	11.45	28.25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자료』와 『경제활동인구』의 Matching Datafh,

- 위의 근로빈곤층 추정규모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치라고 판단됨. 아래 <표 6-8>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를 활용한 추정결과로,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 비율이 외국 근로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실업자일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유럽 15개국 평균이 39%이고 한국이 41.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취업자 중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 유럽 국가의 경우, 실업자 중 빈곤층 비율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정도와 노동시장의 유동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6-8〉 한국과 유럽의 근로빈곤층 규모

(단위 : 개인, %)

	경활인구 중 빈곤층	취업자 중 빈곤층	실업자 중 빈곤층		
			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비임금근로자 중 빈곤층	
EU 15개국 평균	10	7	6	14	39
벨기에	8	5	4	12	32
덴마크	4	4	3	16	7
독 일	8	5	5	5	39
그리스	16	14	9	22	35
스페인	14	9	7	16	44
프랑스	11	7	6	19	34
아일랜드	8	5	4	10	54
이태리	15	10	8	16	49
룩셈부르크	10	9	9	11	43
네덜란드	7	7	6	16	18
오스트리아	7	6	4	26	20
포르투갈	15	15	10	28	34
핀란드	8	6	4	16	26
스웨덴	6	5	3	24	19
영 국	10	7	7	11	49
한 국	16.2	13.2	9.8	19.5	41.6

주: 1) 유럽국가는 1999년, 한국은 2005년 자료임.

2) 빈곤선은 가처분소득을 수정균등화 지수로 나눈 소득 값의 중위60%로 설정

자료: 유럽국가의 근로빈곤율은 EFILWC의 보고서 <Working Poor in Europe>(2004) ; 한국은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3. 빈곤이력에 따른 집단구분(typology of poverty profiles)과 특성비교

가. 문제제기

1) 분석의 의의

- 빈곤주기의 종단적 특징에 따른 유형화는 몇 가지 점에서 정책적 유용성을 가짐 (Walkers, 1994: 119-120 참조).
 - 우선 개인의 복리 차원에서 각 유형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기간의 단일 주기의 빈곤경험은 동 기간동안 일련의 짧은 주기들을 경험한 경우와 다른 경험이며 개인의 삶에 미치는 결과도 상이함.
 - 또한 빈곤주기의 유형과 빈곤의 발생(prevalence)사이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여짐. 빈곤경험의 유무만으로 파악하는 빈곤의 규모 이해에서 탈피하여 빈곤의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구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결국 다른 빈곤유형은 상이한 정책적 대응과 표적화를 필요로 함. 빈곤이력에 따른 집단유형화와 특징 비교는 이러한 상이성의 규명을 가능하게 함.
 - 유형화된 각 집단의 특징에서 나타난 상이성은 결국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의 단서를 제공하게 됨. 본 장에서는 집단유형화와 함께 각 집단의 특징을 내부 구성을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집단 및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2) 분석내용

- 본 장에서는 빈곤이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구분방식은 다음의 유형화방식을 참조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빈곤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들을 중심으로
 - 인구학적인 측면, 가족구조, 가구주의 경제활동-가구주의 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의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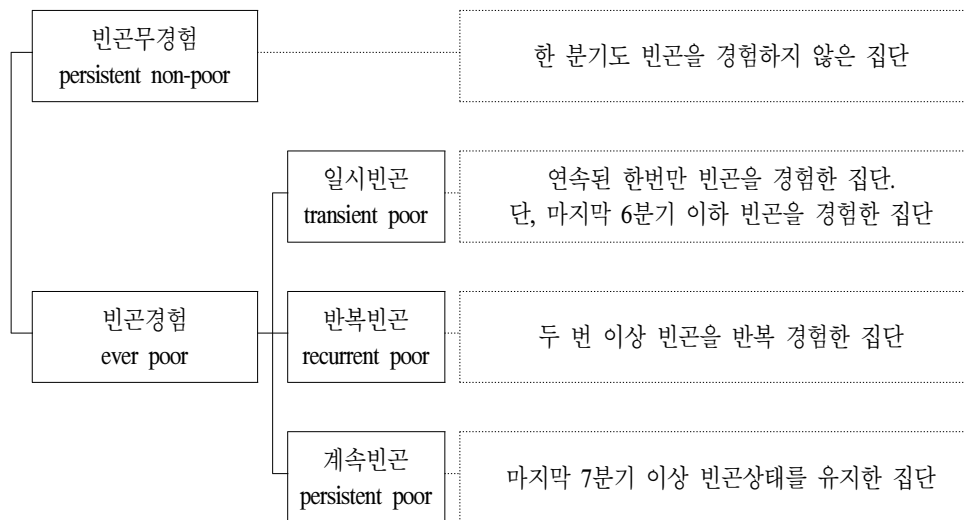
- 그리고 대 빈곤정책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수급과 미래 수급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 이러한 요인들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지스틱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파악
- 점차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빈곤에 대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는 초보적 분석을 추가하였음.

나. 집단유형화

1) 유형화방식

- 2003년에서 2005년까지, 12분기 빈곤상태의 종단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그림 6-4] 집단의 구분



□ Watson, Whelan and Maire(2006)의 구분을 원용

- 5년간(5개의 spell)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종단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
- 관찰기간의 길이, 반복빈곤의 수준, 빈곤주기의 길이, 그리고 빈곤지위의 변동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Fouarge(2002, 2005)의 구분을 기초로 배타성을 확보한 4개 집단으로 구분

- ① 빈곤무경험(기간 내 한번도 빈곤경험이 없는 집단)
- ② 일시빈곤(기간 내 단 한번 빈곤을 경험한 집단)
- ③ 반복빈곤(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한번이상 빈곤을 반복 경험한 집단)
- ④ 계속빈곤(적어도 마지막 3년 이상 연속하여 빈곤을 경험한 집단)

※ 참고: Ashworth, Hill and Walker(1991)은 빈곤무경험(No poverty)과 빈곤경험(Ever poor)으로 이분하고 빈곤경험은 다시 일시(transient) 임시(occasional), 계속(persistent), 반복(recurrent), 만성(chronic), 항상(permanent)으로 재구분.

□ 집단구분의 보완과 이유

- 결과적으로 Watson, Whelan and Maire(2006)의 집단구분과 유사하지만 계속빈곤의 기준은 다소 관대하게 일시빈곤의 기준은 다소 엄격하게 수정됨.
- 이는 계속빈곤 사례의 규모가 지나치게 줄어 분석의 가능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반면 일시빈곤이 자칫 계속빈곤과 차별화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보완임.

2) 집단구분 결과

- 12분기 패널자료(12분기 중 한분기라도 조사가 누락되지 않은 사례들로 구성)를 분석한 결과, 각 집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 6-9〉 유형화된 집단의 구성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구성비(%)	64.9	14.9	16.1	4.1	100.0
사례수	2001	458	496	126	3081

- 한 번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빈곤무경험집단은 전 사례의 64.9%, 한 번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은 14.9%, 2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반복빈곤집단은 16.1% 그리고 계속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4.1%임.
 -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35.1%로서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가능
 - 계속빈곤집단을 마지막 7분기이상 빈곤을 경험한 집단으로 비교적 관대하고 구분하였으나 계속빈곤집단의 규모가 작음.
- 일시빈곤가구 중 '05년 7월 이후 빈곤으로 진입한 가구, 즉 마지막 6분기 이내 빈곤 경험 가구 1.9%, 마지막 분기만 비빈곤인 가구는 1.2%에 불과. **일시빈곤가구 14.9% 중 약 11.8%는 마지막 2분기 이상 비빈곤상태에 있어 빈곤탈피가구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복빈곤가구가 16.1%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상습적인 빈곤경험가구가 많은 것으로 이해됨. 단, 분기단위의 빈곤경험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반복빈곤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다. 인구학적 구성비교

□ 빈곤경험의 종단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별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

- 인구학적 특성은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의 원인과 가능성을 추정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 빈곤의 원인으로서는 가구주의 연령과 성의 영향은 크고, 또한 정책표

적의 추정에서 인구학적 특성별 비중은 각 정책의 대상 규모를 가늠하는데 기여함.

1) 가구주의 연령과 성, 가구원의 연령 비교

□ 가구주의 연령과 성

〈표 6-10〉 집단별 가구주의 연령과 성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연령	24세 미만	0.2	0.7	0.6	0.8	0.4
	25-34세	8.8	9.0	8.3	1.6	8.5
	35-44세	35.5	31.2	23.8	15.9	32.2
	45-54세	36.0	26.2	24.4	13.5	31.8
	55-64세	15.5	20.7	21.0	19.8	17.3
	65세 이상	3.9	18.4	22.0	48.4	9.9
	평균	46	49	53	61	48
	25-64세	95.9	80.9	77.4	50.8	89.7
성	남성	87.3	74.2	70.0	65.9	81.7
	여성	12.7	25.8	30.0	34.1	18.3

-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의 순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남성이 가구주인 비율이 높음. 빈곤무경험가구의 3.9%만이 노인가구주인 반면, 계속빈곤가구의 약 절반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임. 이 집단에 대해서는 빈곤에서의 탈출을 위한 근로지원보다는 기초생활의 보장(protection)이 적절
-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 구간에 있는 가구의 비중을 보면 일시빈곤과 반복빈곤가구에서 약 80%에 이룸. 일시빈곤이나 반복빈곤집단은 근로연령층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 및 근로소득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적절할 것으로 추정됨.

- 가구주의 성을 비교하면 빈곤무경험가구에서 계속빈곤가구로 갈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짐. 계속빈곤가구 중 34.1%나 되는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였음. 반면 빈곤무경험가구에서는 단 12.7%의 가구만 여성가구주 가구였음.
- 전체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18.3%에 이르고 있어 여성가구주 가구를 위한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
- 계속빈곤가구에서도 근로연령층 가구주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취업상태와 비취업사유 등을 파악할 필요

2) 연령별 인구구성

- 가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집단의 인구학적 구성을 연령을 중심으로 비교
- 빈곤무경험가구의 규모가 비교적 커서 인구의 비중은 가구의 비중보다 다소 증가한 반면 계속빈곤가구의 가구규모는 작아서 계속빈곤가구의 인구 비중은 가구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표 6-11〉 집단별 구성원의 연령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18세미만	29.3(19.8)	27.3(4.0)	26.0(3.9)	20.4(0.6)	28.2
18-24	8.0(5.4)	7.8(1.1)	7.1(1.0)	2.5(0.1)	7.7
25-34	11.5(7.8)	11.4(1.7)	10.1(1.5)	3.8(0.1)	11.0
35-44	21.1(14.2)	17.3(2.5)	15.3(2.3)	12.6(0.4)	19.4
45-54	17.9(12.1)	14.4(2.1)	12.9(1.9)	8.8(0.3)	16.4
55-64	7.6(5.2)	11.4(1.7)	14.0(2.1)	16.4(0.5)	9.4
65이상	4.6(3.1)	10.3(1.5)	14.6(2.2)	35.5(1.1)	7.9
계	100.0(67.6)	100.0(14.6)	100.0(14.8)	100.0(3.0)	100.0

주: ()안은 전 인구 중 비율

- 빈곤무경험가구의 아동인구비율이 높고 전체 인구 중 빈곤무경험집단 아동의 비율이 19.8%로 매우 높음. 반면 계속빈곤가구에서는 아동의 비율이 높지만 계속빈곤가구의 비중 자체가 낮아 전 인구 중 계속빈곤가구의 아동 비율은 0.6%에 불과함.
- 전 인구집단 중 아동인구의 비율은 35-54연령대의 인구구성비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아동의 비율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구성과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근로지원이나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소득에 의하여 아동의 복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단연 계속빈곤가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전 노인집단 중 빈곤무경험집단에 속한 노인의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침. 노인의 절반이상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임.
- 55~64세 연령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아 이미 55세부터 빈곤의 위험에 직면하는 것으로 추정
- 계속빈곤가구가 다른 집단보다 구성원의 연령이 높지만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구성비가 24.2%로 이들의 특성을 재분석할 필요

라. 가족구조

1) 가구규모

- 계속빈곤가구의 가구규모는 2.52명으로 가장 작고, 빈곤무경험가구의 가구규모는 3.55명으로 큼.
- 빈곤무경험가구는 4인가구인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일시빈곤가구에서도 같음. 반면 반복빈곤가구에서부터는 가구규모가 작아 2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특히, 계속빈곤가구 중 70% 이상이 2인가구라는 점임. 이 가구의 가구원은 대부분 노인으로 계속빈곤가구 중 가구원이 2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연령을 분석한 결과, 64세임(반복빈곤가구의 2인가구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다소 낮아서 57세임). 이는 가구 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함.

〈표 6-12〉 집단별 가구규모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2인	16.9	26.9	39.7	71.4	24.3
3인	27.3	28.6	23.0	11.9	26.2
4인	42.5	30.3	24.2	10.3	36.4
5인	10.2	11.1	10.5	0.2	10.2
6인	2.6	2.2	1.6	0.0	2.3
7인	0.3	0.7	1.0	0.0	0.5
8인이상	0.0	0.2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가구원수	3.55	3.36	3.14	2.52	3.42
평균취업자수	1.69	1.57	1.43	1.22	1.62

2) 가족구조의 구분

□ 가족구조의 위계적 구분방식

- 가구주주의 연령과 가구주의 성, 그리고 유배우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가구주 가구를 우선 구분하고,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가구만을 다시 가구주의 유배우 상태를 기준으로 유배우가구를 분류함. 이후 무배우 비노인 가구주만을 여성가구주가구와 남성가구주가구로 재분류함.
- 위의 기준으로 분류된 4개의 가족구조 유형 내 아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 유형을 2개로 재분류함. 이는 정책표적으로서의 아동의 분포와 빈곤아동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이해

□ 가족구조의 유형

① 노인가구주 가구(노인가구주+아동, 노인가구주+기타 가구원)

- 만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이면서 만18세미만 아동 있는 가구

-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주와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아동 없는 가구)
- ② 유배우가구(부부+아동, 부부+기타 가구원)
 - 유배우상태(가계조사의 경우 배우자 있음 모두 포함. 즉 비동거포함)의 부부와 만18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자녀가 아니라도 18세 미만 친인척 관계는 자녀로 간주함)
 - 유배우상태(가계조사의 경우 배우자 있음 모두 포함. 즉 비동거포함)의 부부와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아동 없는 가구)
- ③ 남성가구주(편부+아동, 남성가구주+기타 가구원)
 - 편부와 18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
 - 배우자 없는 65세미만 남성가구주와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아동 없는 가구)
- ④ 여성가구주(편모+아동, 여성가구주+기타 가구원)
 - 편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있는 가구
 - 배우자 없는 65세미만 여성가구주와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아동 없는 가구)

□ 가족구조 분류결과

〈표 6-13〉 가족구조 비교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아동유무		4.1		13.0		23.1		50.4		10.3	
노인가구주가구		1.0	3.1	3.7	9.3	6.8	16.3	10.7	39.7	26.3	73.7
유배우가구		88.3		73.3		62.1		35.5		79.7	
		56.8	31.5	42.8	30.5	27.3	34.7	14.9	20.7	62.1	37.9
무 배우 가구	남성가구주가구	2.7		5.1		6.1		5.0		3.7	
		2.7	0.0	5.6	0.0	6.1	0.0	5.0	0.0	100.0	0.0
	여성가구주가구	4.9		8.6		8.7		9.1		6.2	
		4.9	0.0	8.6	0.0	8.7	0.0	9.2	0.0	10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5.4	34.6	60.2	39.8	56.4	43.6	39.7	60.3	62.2	37.8

- 빈곤무경험가구는 노인가구주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으나 계속빈곤가구로 갈수록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 50.4%에 이른다. 반면 비노인가구주 가구이면서 유배우가구는 낮아져서 계속빈곤가구 중 비노인가구주 유배우가구는 35.5%에 불과
- 노인가구주가구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은 반면 유배우가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빈곤무경험가구와 일시빈곤가구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가 유배우가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 비노인가구주 무배우가구는 전체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나 패널화된 자료에서는 모든 무배우가구에 아동이 있어 편부모가구로 분류할 수 있음. 즉, 패널화된 가구에서 3.7%는 편부가구, 6.2%는 편모가구라 해석할 수 있음.
- 편부모가구의 비중은 빈곤무경험가구에 비하여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가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결국 편부모가구의 빈곤경험위험이 높음.

마.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따른 비교

- 4개 집단별로 가구주의 경제활동을 비교하고자 함. 앞서 지적하였듯이 **65세 미만의 비노인가구의 비율이 계속빈곤가구에서도 적지 않았으며 이 가구들의 경제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가구 외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와 취업한 가구주의 직업, 비취업한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를 비교분석함.

1)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 비교

- 65세 미만의 가구주 중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을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빈곤무경험가구에서는 사무종사자 등의 비율이 28.4%로 높으나 계속빈곤가구로 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짐.
- 기능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으로 갈수록 높아지면 특히 서비스종사자의 비중은 계속빈곤가구에서 4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6-14〉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 비교

종사직업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1. 사무종사자등	28.4%	14.5%	12.2%	7.7%
2. 서비스종사자등	18.5%	22.5%	25.9%	41.0%
3. 기능 및 조립종사자	36.6%	46.1%	40.3%	25.6%
4. 단순노무종사자	7.0%	16.8%	21.4%	25.7%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종사직업의 분류

1.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직업군인
2. 판매 및 서비스종사자
3. 기능원 및 조립종사자
4. 단순노무종사자

*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는 가계조사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거의 없음. 일부 수치는 단순노무자로 처리

※ 참고: 종사상태를 중심으로 한 가구구분

- 종사상태를 기준으로 한 집단별 비교를 하면 공무원, 공무원의 사무종사자의 비율은 단연 빈곤무경험가구에서 28.4%로 높고, 전체적으로 상용직의 비중이 빈곤무경험에서 계속빈곤가구로 갈수록 감소함. 계속빈곤가구에서는 단 7.7%만이 사무종사자 등에 속함.
- 피용자가 있는 자영자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낮아서 집단별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단 피고용자가 있는 상인은 빈곤무경험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계속빈곤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자의 비중은 일시빈곤과 반복빈곤가구에서 높고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비중도 이 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즉, 일시빈곤과 반복빈곤가구의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함이 두드러짐.
- 계속빈곤은 무직의 비율이 58.7%로 매우 높음. 일시빈곤과 반복빈곤의 무직 비율도 각각 17.7%와 31.0%로 비교적 높음.

〈표 6-15〉 종사상태를 중심으로 한 가구구분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공무원	10.4	1.5	0.0	0.0	7.0
공무원의 사무종사자	22.4	8.7	5.0	1.6	16.7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5.8	25.8	21.4	15.9	24.7
임시 및 일용노무자	3.5	14.4	16.1	6.3	7.3
상인(자영자-피고용자 무)	18.8	24.5	24.0	16.7	20.4
상인(자영자-피고용자 유)	9.3	6.8	1.8	0.8	7.4
개인경영자	1.8	0.2	0.4	0.0	1.3
법인경영자	1.4	0.4	0.0	0.0	1.0
자유업자(피고용자 무)	0.1	0.0	0.2	0.0	0.1
자유업자(피고용자 유)	0.0	0.0	0.0	0.0	0.0
무직	6.2	17.7	31.0	58.7	1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비취업가구주의 비취업사유 비교

- 65세 미만의 가구주 중 비취업한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속빈곤가구를 제외한 세 개 집단에서는 육아·가사의 비율이 공히 높았으며 빈곤무경험에서 계속빈곤가구로 갈수록 휴직, 구직, 대기의 비율이 낮아짐.
- 심신장애가 이유가 되었던 가구의 비율은 계속빈곤가구에서만 높았으며 이는 계속빈곤가구의 빈곤유지 사유로 의료적 문제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일시빈곤가구와 반복빈곤가구, 그리고 계속빈곤가구에서 ‘쉬었음’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다는 것임. 대체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일용직 등이 잠시 휴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수치는 결국 종사상태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됨.

〈표 6-16〉 비취업가구주의 비취업사유 비교

비취업사유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1. 휴직, 구직, 대기	24.7%	14.2%	15.9%	6.0%
2. 육아, 가사	38.5%	30.4%	35.0%	3.0%
3. 학업 및 학업준비	1.5%	0.0%	0.0%	33.4%
4. 취업준비	1.5%	1.2%	1.6%	3.0%
5. 연로	1.5%	1.2%	4.7%	0.0%
6. 심신장애	0.0%	0.0%	3.9%	15.1%
7. 쉬었음	29.2%	40.4%	36.2%	33.3%
8. 기타	6.2%	11.8%	1.9%	6.2%

주: 비취업사유구분(1. 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2. 육아, 가사 3. 학업 및 학업준비 4. 취업준비 등 5. 연로 6. 심신장애 7. 쉬었음 8. 기타)

3) 가구주의 취업실태 종합

집단별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의 취업, 비취업 실태와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 그리고 비취업한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를 종합 분석

자료의 처리

- 위의 분석을 위하여 경제활동조사자료와 가계조사자료를 결합이 필요하였으며 가계조사자료에서 구성된 패널자료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경활자료의 사례를 결합시킴.
- 근로연령층(18~64세)가구주 가구의 취업여부 및 비취업사유는 경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된 마지막 월에서 지난 1주를 기준으로 구분함.
- 취업가구주의 직업은 가계조사자료의 조사된 마지막 월(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구분함.
- 그림이 이해에서 각 셀의 백분율은 마지막 분류의 셀을 100%로 전제하여 비중을 재계산하였음.

□ 빈곤무경험가구

- 빈곤무경험가구의 노인가구주가구 비율은 단 3.9%이며 근로연령층가구주가구의 비율은 96.1%에 이룸.
- 근로연령층가구주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는 93.5%에 이르러 대부분의 가구주가 취업한 상태임.
-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으로는 사무종사자와 기능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낮음.
- 비취업한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는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이 높고 휴직이나 구직, 대기발령의 비중도 높음. 이 집단 여성의 경제활동이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일시빈곤가구

- 일시빈곤가구의 노인가구주가구 비율은 18.4%이며 근로연령층가구주가구의 비율은 93.9%에 이룸.
- 근로연령층가구주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는 83.9%에 이르러 역시 대부분의 가구주가 취업한 상태임.
-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으로는 사무종사자 등의 비중은 빈곤무경험가구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줄고 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16.8%로 배 이상으로 높아짐. 기능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 46.1%에 이룸.
- 비취업한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로는 쉬었음의 비중이 40.4%로 매우 높고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이 30.4%임.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장을 받는 비중이 높고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일시 비취업이 클 것으로 추정됨.

□ 반복빈곤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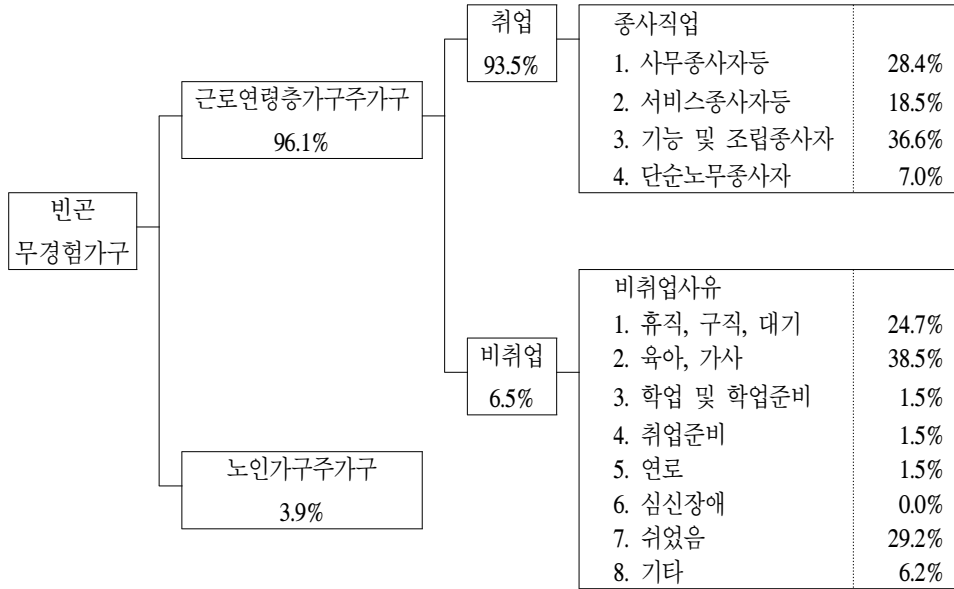
- 반복빈곤가구의 노인가구주가구 비율은 25.7%로 높아졌으며 근로연령층가구주가구의 비율은 78.0%임.

- 근로연령층가구주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는 74.3%이며 비취업상태의 가구주 비중도 25.7%에 이룸.
-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으로는 사무종사자 등의 비중은 역시 빈곤무경험가구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낮고 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21.4%로 일시빈곤가구보다 더 높음. 일시빈곤가구와 유사하게 기능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 40.3%에 이룸.
- 비취업한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로는 쉬었음과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이 가장 높아 각각 33.3%와 33.4%에 이룸. 일시빈곤가구에서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심신장애가 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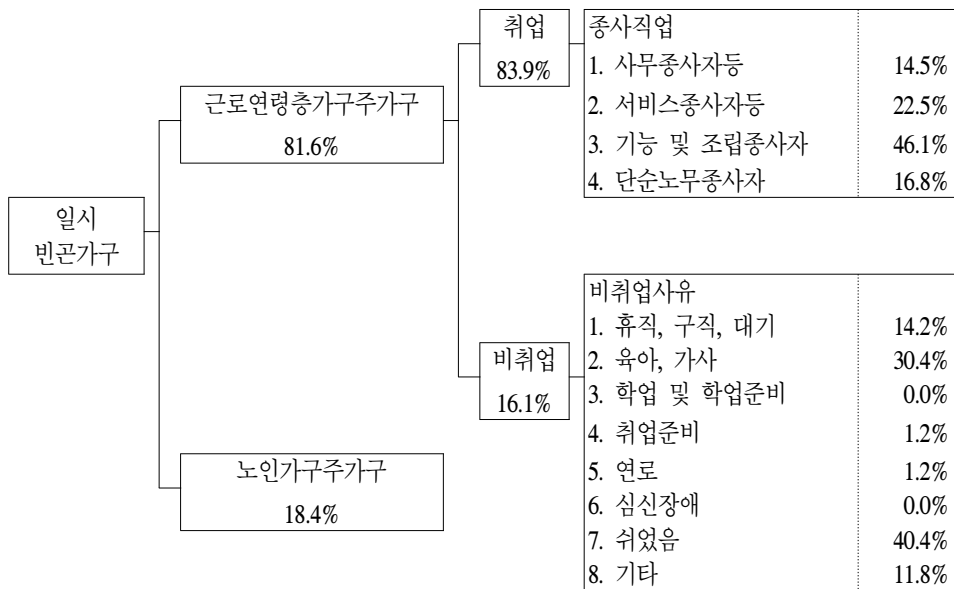
□ 계속빈곤가구

- 계속빈곤가구의 노인가구주가구 비율은 매우 높아서 48.4%이르며 근로연령층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2.9%에 불과.
- 근로연령층가구주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 비중 역시 낮아 52.9%에 불과함.
-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으로는 서비스종사자 등의 비중이 가장 높아 41.0%이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도 25.7%에 이룸.
- 비취업한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로는 반복빈곤가구와 유사하게 쉬었음의 비중은 높으나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은 낮아지고 반면 심신장애가 15.1%에 이르며 학업 및 학업준비의 비중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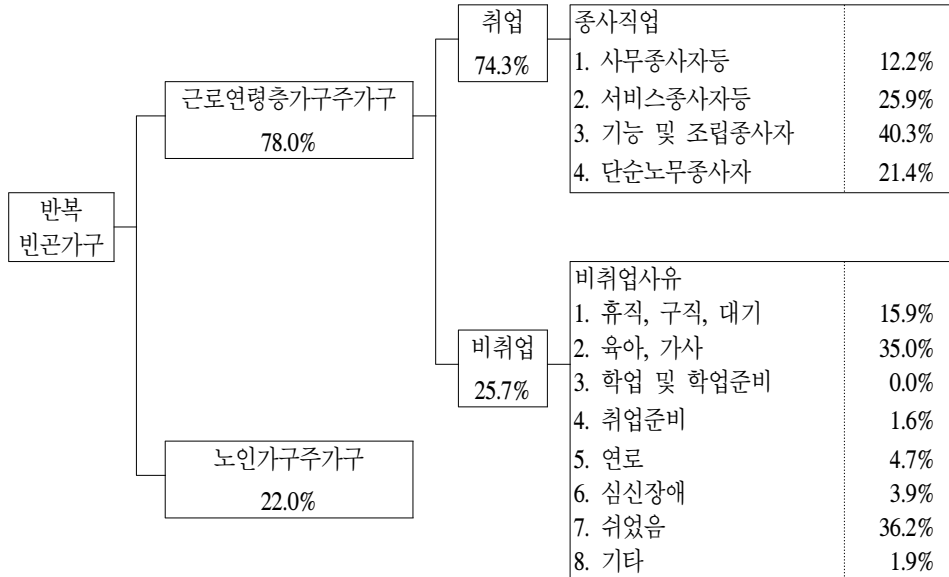
[그림 6-5] 빈곤무경험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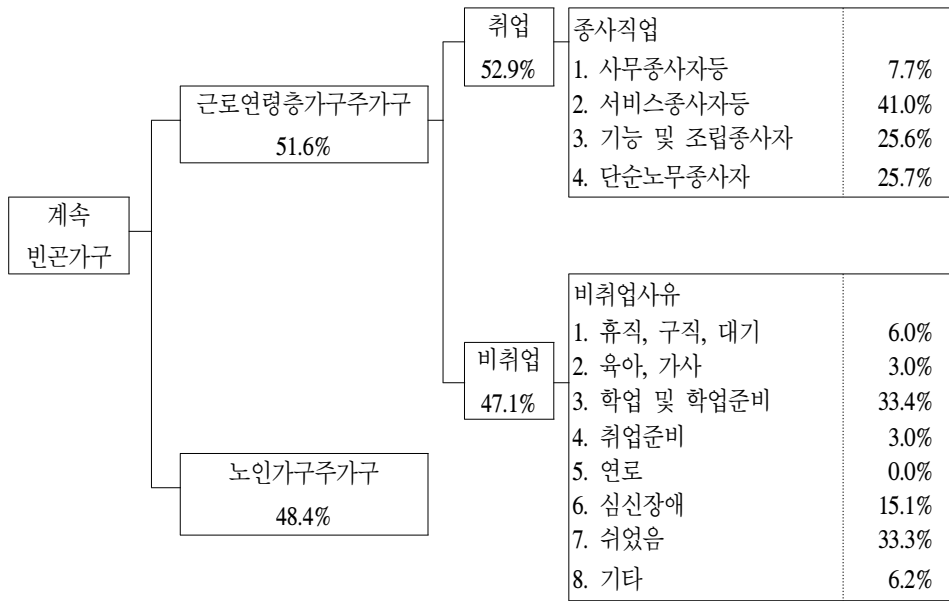
[그림 6-6] 일시빈곤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그림 6-7] 반복빈곤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그림 6-8] 계속빈곤가구의 가구주 취업상태



바. 사회보장수급

□ 연금과 기타사회보장 수급여부 및 평균수급액으로 현재 사회보장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연금기여와 사회보험기여여부를 통한 사회보험 적용가능성을 추정

1) 집단별 사회보장수혜실태 및 수혜가능성 비교

〈표 6-17〉 사회보장수혜비교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계
공적이전수혜	23.3	41.5	52.4	65.1	32.4
평균이전액	78,666	98,716	122,153	100,760	-
공적연금수혜	8.4	12.2	15.9	18.3	10.6
평균이전액	58,911	48,660	44,399	28,349	-
기타사회보장수혜	19.0	37.3	46.0	61.9	27.8
평균이전액	19,754	50,055	777,53	72,410	-
사적이전수혜	33.0	47.8	54.2	61.9	1.3
평균이전액	143,938	201,108	19,754	152,509	-
공적연금기여	81.6	54.4	35.7	16.7	67.5
기타사회보험기여	94.6	84.3	71.4	55.6	87.7

－ 계속빈곤층 중에서도 35%정도는 공적지원을 받지 않음. 공적지원에 노인교통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개 노인이 없는 가구로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일시빈곤이나 반복빈곤의 공적지원이 없는 가구의 비율도 가구원 중 노인의 유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 공적지원을 하위분류로 재분류할 수 없는 자료의 한계로 노인교통수당을 제거한 공적지원을 분석할 수 없음.

－ 공적연금수혜와 수혜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공적연금기여의 측면에서 보면 빈곤무

경험가구가 매우 양호함. 향후 빈곤층의 계속빈곤화 가능성이 높음.

- 사적이전수혜를 보면 계속빈곤가구로 갈수록 이전경험비율은 높지만 이전 액에서는 유의미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즉 빈곤무경험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을 받는 가구 비중은 적으나 이전 액은 클 것으로 추정.
- 건강보험을 비롯한 기타사회보험기여에서도 계속빈곤층의 적용가능성은 낮음. 기본적인 서비스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계속빈곤가구의 약 절반, 반복빈곤가구의 약 30% 가구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2) 가족구조별 공적지원수혜경험 비교

- 가족구조별 공적지원수혜경험이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 이는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를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파악하도록 함.

〈표 6-18〉 공적지원 수혜경험 비교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노인가구주가구		96.2	87.5	95.4	83.6
유배우가구		18.8	32.1	36.9	34.9
무배우가구	남성가구주가구	51.9	72.7a	65.5a	100.0a
	여성가구주가구	36.8	51.4	53.7	81.8a

주: a, 사례수가 30미만으로 결과가 불안정함.

-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집단별 공적지원 수혜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통수당의 영향으로 공적지원 수혜율이 매우 높아진 결과로 해석됨. 즉 노인가구주 가구의 공적지원 수혜경험이 과다 추정됨.
- 전체적으로 유배우가구의 공적지원 수혜경험은 낮으며 일시빈곤, 반복빈곤, 그리고 계속빈곤의 차이도 거의 없음. 유배우가구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클 것으로 보이며 근로지원 등의 정책적 강화가 이러한 공백을 줄일 것으로 짐작됨.

- 무배우가구, 즉 편부모가구에 대한 공적지원 수혜는 비교적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배우가구 중 일시빈곤 및 반복빈곤가구의 약 30-50%정도는 공적지원의 수혜경험이 없음. 단, 사례수의 한계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사.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 :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 집단을 종속변수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

변수의 선택

- 자료의 크기가 작아서 변수를 적을 수로 제한. 주로 가구특성에 주목. 가구규모, 가구 내 취업자의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가구주의 혼인상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독립변수로 투입.

분석결과

- 분석결과, 가구 내 취업자의 수, 가구주의 성,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계속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음. 취업자의 수가 적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이면, 그리고 가구주가 중졸이하이면 그 이상보다, 가구주가 무배우 상태이면 빈곤무경험가구보다 계속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단 가구주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보다 가구주의 연령이 25~54세 일 때 계속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려움.
-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가구주의 성이 여성이면,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이하이면 가구주가 고용이나 상시직인 경우보다 임시일용이거나 무직인 경우에 빈곤무경험가구보다 일시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 적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이면, 가구주의 연령이 25~54인 경우보다 그 이하인 경우에, 가구주가 중졸이하이면, 가구주의 종사상태가 무직이거나 임시일용인 경우에 빈곤무경험가구보다 반복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 전체적으로 가구의 취업자 수, 가구주의 성, 가구주의 학력은 빈곤경험에 거의 비슷

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가구주의 종사상태는 일시 및 반복빈곤가구와 빈곤무경험가구를 구분하는데 영향을 주는 반면 계속빈곤가구와 빈곤무경험가구를 구분하는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반면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빈곤무경험가구와 계속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9〉 가구특성이 빈곤역동성 유형에 미치는 영향

구분	계속빈곤		일시빈곤		반복빈곤		
	B	S.E.	B	S.E.	B	S.E.	
가구규모	.018	.151	.120	.059**	.167	.063*	
가구내 취업자 수	-1.394	.292*	-.406	.087*	-.755	.101*	
가구주 성	-.797	.314**	-.517	.157*	-.691	.158*	
가구주 연령	25~54	14.015	.310*	-.963	.794	-1.345	.750**
	55~	15.069	.000	-.627	.804	-.976	.761
가구주 학력	초급대졸이하	-.992	.319*	-.504	.136*	-.804	.142*
	대졸이상	-2.291	.635*	-1.600	.208*	-1.827	.227*
가구주의 혼인상태	-.650	.350***	-.196	.190	-.225	.191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자영	.126	.456	-.256	.255	-.465	.233**
	고용	-1.044	.825	-.574	.300***	-1.950	.376*
	임시일용	.555	.550	.869	.289*	.677	.270**
	상시직	-.696	.450	-.742	.244*	-1.339	.226*
intercept	-13.586		1.917		10.289		
사례수	2903						
-2Log likelihood	2063.054***						

주: * p<.01 ** p<.05 *** p<.1

종속변수: 준거집단=빈곤무경험가구, 기준변수는 여성, 25세 미만, 중졸이하, 무배우, 무직임.

아. 1인가구의 빈곤

- 가계조사자료는 2006년 이전까지 1인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하지만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내 빈곤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 빈

곤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미래 가족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빈곤 및 사회보장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미를 가짐.
- 따라서 1인가구를 포함하는 가구소비조사자료(1996년, 2000년)과 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비중 변화와 빈곤율 변화, 그리고 1인가구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함.
- 1인가구의 비중은 1996년 12.9%에서 2000년 15.1%, 그리고 2006년 15.6%로 증가하고 있음.
- 1인가구 내 가구빈곤율을 보면 1996년 26.6%, 2000년 36.4%, 2006년 44.3%에 이룸. 1인가구 내 가구빈곤율은 높으면서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6-20〉 1인 가구 빈곤율

	1996	2000	2006
가구비율	12.9	15.1	15.6
빈곤율(가구)	26.6	36.4	44.3

- 1인 빈곤가구의 특징을 보면 1996년에서 2006년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5~45세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1인 빈곤가구의 평균연령이 감소하고 있음.
-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이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어 1인가구의 증가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문제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무직의 비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시일용직의 비율도 높음. 1인가구의 근로연령층의 취업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됨.

〈표 6-21〉 2006 상반기 1인 빈곤가구 특성

가구특성		1996년	2000년	2006년 상반기
성별	남	14.1	18.8	23.4
	여	85.9	81.2	76.6
연령	만18세 미만	0.1	0.6	0.1
	18~25세 미만	5.0	4.2	3.1
	25세~45세 미만	8.5	11.3	13.3
	45세~65세 미만	25.0	24.8	26.9
	65세 이상	61.3	59.0	56.5
	평균연령	63.0	62.4	61.9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6.9	0.8	6.3
	임시일용근로자	14.5	14.5	10.8
	고용주(피고용인 유)	0.0	0.2	0.2
	자영자(피고용인 무)	5.7	7.6	7.1
	무직(무급, 실업, 비경활)	72.9	76.9	75.5

자. 시사점

□ 탈빈곤정책의 유용성

-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35.1%로 높은 반면 계속빈곤가구는 단 4.1%에 불과함. 즉, 빈곤을 일시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음. 이는 **빈곤의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

□ 집단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

- 빈곤무경험가구의 3.9%만이 노인가구주인 반면, 계속빈곤가구의 약 절반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임. 교통수당 등 일부 공적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 65세 이상의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Protection)을 강화할 필요

- 반면 일시빈곤과 반복빈곤가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 구간에 있는 가구의 비중이 약 80%에 이르며 취업한 가구주의 비율도 그 중 70-80%에 이릅니다. 따라서 근로지원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보장-기능 및 조립, 서비스 종사자-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빈곤으로의 진입과 반복진입을 방지할 필요
- 계속빈곤가구 중 70% 이상이 2인가구임. 이 가구의 가구원 평균연령은 64세임. 이는 계속빈곤가구 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함.
- 계속빈곤가구에서도 65세 미만의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적지 않음.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에서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서비스종사자의 비중은 41.0%에 이릅니다. 서비스업의 저임금구조의 문제가 심각함. 근로빈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
- 65세 미만의 가구주 비취업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속빈곤가구에서 심신장애가 이유가 되었던 가구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음. 계속빈곤가구의 빈곤유지 원인으로 의료적 문제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계속빈곤가구 중 34.1%나 되는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였음. 여성가구주 가구를 위한 affirmative action의 모색요망.
- 빈곤무경험가구, 일시빈곤가구와 계속빈곤가구에서는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로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이 30-40%로 높음. 돌봄의 사회화 등 여성의 근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강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

□ 사회보장의 사각 해소

- 계속빈곤층 중에서도 35%정도는 공적지원을 받지 않음. 보편적 급여인 노인교통수당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계속빈곤층 중 공적지원에서 배제된 규모는 더 클 것임. 당장의 빈곤층의 기초보장의 보완이 절실
- 공적연금수혜에서도 빈곤경험가구는 열악하며 공적연금과 기타 사회보장의 수혜가능성에서도 계속빈곤층의 적용가능성은 낮음. 계속빈곤가구의 약 절반, 반복빈곤가구의 약 30%가구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보임.

- 사회보험 등 미래의 빈곤예방을 위한 1,2차 안전망의 적극적 적용 강화도 고려할 필요. 가구주 임금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 기본 틀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회보험의 보완을 검토

□ 1인 빈곤가구 증가에 대한 대책

-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가 절실함.
 - 꾸준히 증가하는 빈곤 1인가구의 주 특징은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5~45세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임.

4. 빈곤 진입탈출 분석

가. 문제제기

- 빈곤진입 및 탈출확률 분석은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임.
 - 빈곤의 진입 및 탈출에 대한 이해는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줄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됨.
 - 빈곤지위상의 불안정성이 심할 경우, 개별 가구의 일시적 빈곤탈출은 용이하더라도 전체 빈곤층의 규모는 줄지 않게 됨.
 - 빈곤 지속구간(spell)의 길이, 지속구간의 수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반복빈곤의 문제와 빈곤의 장기화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빈곤대책의 방향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 이 장에서는 빈곤경험가구의 폐널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경험가구의 분포와 빈곤탈출(재진입)확률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
 - (분석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가구로 하며, 주로 가구특성요인(가구주의 연령, 성, 교육수준과 가구원수)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임.

나. 빈곤경험가구의 분포

1)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분포

□ 패널화된 자료에 포함된 총 3,081가구 가운데 '03~'05년간 한 분기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수는 1,080가구

- 이 가구들의 평균 빈곤기간은 4.81분기이며, 전체 기간의 절반이 넘는 6분기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30%에 달함. 12분기 내내 빈곤을 경험한 계속빈곤 가구도 91가구 존재
- 빈곤으로의 진입이후 탈출까지의 기간을 빈곤 지속구간(spell)이라고 할 때, 분석 대상 가구의 약 46%가 복수의 빈곤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빈곤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1.65개의 지속구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2〉 총빈곤기간의 분포

총빈곤기간(분기)	빈도(가구)	백분율(%)	누적백분율(%)
1	253	23.43	23.43
2	167	15.46	38.89
3	104	9.63	48.52
4	90	8.33	56.85
5	77	7.13	63.98
6	65	6.02	70.00
7	52	4.81	74.81
8	49	4.54	79.35
9	46	4.26	83.61
10	42	3.89	87.50
11	44	4.07	91.57
12	91	8.43	100.00
평균		4.81분기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표 6-23〉 빈곤지속구간(poverty spell)의 분포

빈곤지속구간수	빈도(가구)	백분율(%)	누적백분율(%)
1	584	54.07	54.07
2	323	29.91	83.98
3	142	13.15	97.13
4	26	2.41	99.54
5	5	0.46	100.00
평균	1.6528개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 빈곤지속구간의 차수별로 빈곤이 지속된 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빈곤의 지속구간수가 늘어날수록 각 구간의 길이는 짧아짐.

- 1차구간의 평균기간은 3.32분기, 2차는 2.44분기이며 5차의 경우 1.2분기로 줄어듦.
- 이러한 경향은 비빈곤기간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 1차 비빈곤기간의 평균은 약 4.31분기, 2차는 2.32분기, 3차는 0.49분기로 줄어듦.

〈표 6-24〉 빈곤지속구간 차수별 지속기간 분포

(단위 : 가구(%))

지속기간 (분기)	1차 지속구간	2차지속구간	3차지속구간	4차지속구간	5차지속구간
1	507(46.94)	244(49.19)	84(48.55)	20(64.52)	4(80.00)
2	185(17.13)	83(16.73)	42(24.28)	8(25.81)	1(20.00)
3	94(8.70)	54(10.89)	19(10.98)	2(6.45)	-
4	44(4.07)	44(8.87)	18(10.40)	1(3.23)	-
5	41(3.80)	23(4.64)	8(4.62)	-	-
6	32(2.96)	19(3.83)	1(0.58)	-	-
7	21(1.94)	9(1.81)	-	-	-
8	18(1.67)	9(1.81)	1(0.58)	-	-
9	19(1.76)	8(1.61)	-	-	-
10	12(1.11)	3(0.60)	-	-	-
11	16(1.48)	-	-	-	-
12	91(8.43)	-	-	-	-
계	1080(100.00)	496(100.00)	173(100.00)	31(100.00)	5(100.00)
평균기간	3.32분기	2.44분기	2.03분기	1.48분기	1.2분기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다. 빈곤탈출확률 분석

1) 생존분석 대상가구의 분포

□ 빈곤경험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빈곤으로의 재진입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재구성

- 조사 시작시점인 '03년 1/4분기 현재 빈곤상태에 놓여있던 가구는 빈곤의 시작시점이 관측되지 않은 좌측절단된(left censored) 가구임.
 - 이들 가구의 경우 빈곤 진입·탈피 분석을 위해서는 좌측절단된 구간을 분석에서 제외해줄 필요
- 그러나 좌측절단된 빈곤지속구간을 갖는 모든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이들 가구가 갖는 (빈곤 시작이 관측된) 2번째 이후의 빈곤구간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관측된 빈곤지속구간을 갖고 있는 모든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위해, 03년 1/4분기 현재 빈곤에 놓여있던 가구중에서 복수의 빈곤지속구간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킴. 단 이들 가구의 첫 번째 빈곤구간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두 번째 이후의 빈곤구간은 분석에 포함시킴.
- 이에 따라 생존분석에 포함된 전체 가구의 수는 모두 861가구이며 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03년 1분기 비빈곤, 이후 빈곤경험 가구	+	'03년 1분기 빈곤가구중 복수 빈곤구간을 갖는 가구	=	시작시점이 관측된 빈곤구간을 갖는 모든 가구
599가구		262가구		861가구

- 생존분석 대상가구의 평균 빈곤경험기간은 3.52분기이며, 평균 빈곤구간수는 1.51개로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빈곤경험기간보다 짧으며 빈곤구간수도 적음.

〈표 6-25〉 생존분석 대상가구의 빈곤지속구간(poverty spell)의 분포

빈곤지속구간 개수	빈도(가구)	백분율(%)	누적백분율(%)
1	515	59.81	59.81
2	261	30.31	90.13
3	73	8.48	98.61
4	12	1.39	100.00
계	861	100.00	100.00
평균	1.5145개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 분석 대상 가구가 복수의 빈곤구간을 갖는 경우 각 구간을 독립적인 구간으로 간주하여 분석

- 총 1304개의 구간(spell)이 분석 대상이 됨.
- 생존분석 대상이 되는 빈곤지속구간의 길이 분포는 다음 표와 같음.

〈표 6-26〉 빈곤지속구간(poverty spell)의 길이 분포

빈곤지속구간 길이(분기)	빈도(구간)	백분율(%)	누적 백분율(%)
1	676	51.84	51.84
2	251	19.25	71.09
3	126	9.66	80.75
4	91	6.98	87.73
5	45	3.45	91.18
6	39	2.99	94.17
7	18	1.38	95.55
8	21	1.61	97.16
9	18	1.38	98.54
10	11	0.84	99.39
11	8	0.61	100.00
평균	1.5145분기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2) 빈곤탈출확률

□ 생명표 분석방법에 의해 빈곤경험가구의 탈출확률을 분석

- 생명표 분석방법은 Kaplan-Meier방법과는 달리 빈곤탈출이 (특정 시점이 아닌) 특정 구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적절한 방법임. 본 분석의 경우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분기(3개월)주기로 이루어지므로 생명표 분석방식을 적용
- j 번째 구간에서의 조건부 탈출확률을 q_j 라고 할 때 i 번째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 t_i 에서 파악한 생존확률 $S(t_i)$ 는 다음과 같음

$$S(t_i) = \prod_{j=1}^{i-1} (1 - q_j)$$

- 생명표 분석방식에서 빈곤기간의 종료는 관측되지 않은 우측절단된 표본의 경우, 그 절반을 유효표본으로 간주

□ 빈곤진입 후 첫분기 안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은 약 45%, 두 번째분기에서 탈출할 확률은 33%이며 이후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출확률은 점차 감소함.

- 9분기 빈곤경험후 탈출확률이 높아지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분기 경과 후 전체의 63%가 3분기 경과후 전체의 73%가 빈곤에서 탈출함.

□ 전체 분석대상가구의 빈곤탈출확률과 여성가구, 노인가구의 빈곤탈출확률을 비교한 결과 노인빈곤가구의 빈곤탈출속도가 가장 느리며, 여성가구의 탈출속도도 상대적으로 낮음.

〈표 6-27〉 빈곤지속기간별 탈출확률

지속기간 (분기)	빈곤탈출표 본	우측절단 표본	유효표본	조건부탈출확률 (표준오차)		빈곤층 잔류확률 (표준오차)	
0	0	0	1304.0	0(0)		1.0000	(0)
1	559	117	1245.5	0.4488	(0.0141)	1.0000	(0)
2	199	52	602.0	0.3306	(0.0192)	0.5512	(0.0141)
3	98	28	363.0	0.2700	(0.0233)	0.3690	(0.0142)
4	46	45	228.5	0.2013	(0.0265)	0.2694	(0.0134)
5	26	19	150.5	0.1728	(0.0308)	0.2151	(0.0129)
6	21	18	106.0	0.1981	(0.0387)	0.1780	(0.0126)
7	10	8	72.0	0.1389	(0.0408)	0.1427	(0.0122)
8	5	16	50.0	0.1000	(0.0424)	0.1229	(0.0120)
9	9	9	32.5	0.2769	(0.0785)	0.1106	(0.0120)
10	2	9	14.5	0.1379	(0.0906)	0.0800	(0.0123)
11	0	8	4.0	0(0)		0.0689	(0.0128)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표 6-28〉 집단별 빈곤탈출확률 비교

지속기간 (분기)	빈곤 탈출확률		
	전체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
1	0.4488	0.3213	0.4011
2	0.6310	0.4508	0.5658
3	0.7306	0.5664	0.6781
4	0.7849	0.6202	0.7279
5	0.8220	0.6455	0.7443
6	0.8573	0.7174	0.7991
7	0.8771	0.7535	0.8268
8	0.8894	0.7843	0.8357
9	0.9200	0.8323	0.8883
10	0.9311	0.8742	0.8883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3) 빈곤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본 연구에서 빈곤 진입과 탈출이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산시간 해자드 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빈곤탈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

- 가구 i 가 t 시점에서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을 P_{it} 라 하면 표준적인 로짓 모형에서 빈곤탈출 확률은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회귀식에 의해 추정됨.

$$\log(P_{it}/1 - P_{it}) = \alpha_{it} + \beta_1 x_{it1} + \dots + \beta_k x_{itk}$$

- 그런데 이 회귀식 모형은 빈곤탈출이 단위 기간(분기)내의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여 빈곤탈출이 분기 내의 어떤 시점에서든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적 log-log 모형(complementary log-log model)을 이용하여 추정

$$\log\{-\log(1 - P_{it})\} = \alpha_{it} + \beta_1 x_{it1} + \dots + \beta_k x_{itk}$$

□ 로지스틱 회귀식을 통한 이산시간 분석을 위해 빈곤이 지속되는 분기별 관측치를 각각 독립된 관측치로 간주하여 데이터셋을 재구성

- 예컨대 3분기동안 지속된 빈곤구간의 경우, 생존확률 분석에서는 1개의 관측치로 간주되었으나 이 분석에서는 3개의 관측치(빈곤이 유지된 2개분기와 빈곤에서 탈출한 1개분기)로 간주됨.
- 가구-분기단위의 관측치는 모두 3033개임.

□ 빈곤탈출확률의 결정모형에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빈곤지속기간과 가구특성과 관련된 변수(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성별, 가구주 교육수준)만을 고려

- 이 설명변수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분석 모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모형1에서는 가구원수와 빈곤지속기간 더미를 설명변수로 추정함. 모형2에서는 가구주 연령 더미를, 모형 3에서는 여기에다 여성가구주 더미를, 모형 4에서는 또 가구주 교육수준 더미를 덧붙여 분석함.

- 추정결과 모든 모형에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탈출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빈곤기간 1분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분기에서는 탈출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5분기 이상으로 빈곤경험기간이 늘어날수록 빈곤탈출확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짐.
- 가구주연령이 25~44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서는 탈출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층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함
- 여성가구의 경우 빈곤탈출확률이 떨어짐.
- 가구주 교육수준은 빈곤탈출확률에 거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 교육수준을 고려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가구 탈출확률의 유의성이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노인가구가 저학력 가구라는 사실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표 6-29〉 빈곤탈출모형 추정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1.7752(.1032)***	-1.6493(.1513)***	-1.4881(.1566)***	-1.4813(.1563)***
가구원수	0.1516(.1516)***	0.1332(.0304)***	0.1151(.0310)***	0.1133(.0310)***
빈곤기간(기준=1분기)				
2분기	0.3226(.0827)***	0.3165(.0827)***	0.3138(.0827)***	0.3125(.0828)***
3~4분기	-0.0401(.0892)	-0.0324(.0893)	-0.0347(.0893)	-0.0322(.0893)
5~7분기	-0.3914(.1195)**	-0.3749(.1197)**	-0.3694(.1197)**	-0.3640(.1199)**
8~11분기	-0.5853(.2031)**	-0.5803(.2036)***	-0.5713(.2036)***	-0.5713(.2036)***
가구주연령(기준=25~44세)				
24세 이하		0.3729(.2866)	0.4499(.2849)	0.5209(.2888)*
45~64세		0.0963(.1050)	0.0797(.1042)	0.0562(0.1066)
65세 이상		-0.3949(.1193)***	-0.4485(.1196)***	-0.4731(.1242)***
가구주성별(여성=1)			-0.2644(.0746)***	-0.2727(.0763)***
가구주교육수준(기준=초졸)				
중졸이하				-0.0139(.0632)
고졸이하				0.0973(.0512)*
대학재학이상				-0.1032(.0752)
-2LL	3615.508***	3586.858***	3573.783***	3569.187***
표본의 크기	3033			

주: *는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라. 빈곤재진입 확률 분석

1) 비빈곤 경험구간의 분포

- 빈곤 탈출 후 재진입에 걸리는 기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곤경험가구 중 빈곤재진입 경험이 있는 496가구(복수의 빈곤기간을 갖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 복수의 비빈곤구간을 갖는 경우, 각 구간을 독립적인 case로 간주하여 분석
 - 이 가운데 구간의 시작이 관측되지 않은 비빈곤구간(03년 1분기에 비빈곤 상태였던 구간)을 제외하고 총 968개의 비빈곤구간을 대상으로 분석
- 전체 구간 가운데 1~2분기의 길이를 갖는 비빈곤구간이 절반을 넘음. 빈곤탈출 후 재진입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2.52분기임.

〈표 6-30〉 비빈곤지속구간(non-poverty spell)의 길이 분포

비빈곤지속구간 길이(분기)	빈도(구간)	백분율(%)	누적 백분율(%)
1	413	42.67	42.67
2	192	19.83	62.50
3	139	14.36	76.86
4	67	6.92	83.78
5	75	7.75	91.53
6	26	2.69	94.21
7	34	3.51	97.73
8	12	1.24	98.97
9	7	0.72	99.69
10	3	0.31	100.00
평균	2.52분기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2) 빈곤재진입 확률분석

- 앞의 빈곤탈출확률분석과 마찬가지로 생명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빈곤재진입확률을 분석

- 빈곤으로 재진입이 관측되지 않은 비빈곤구간(우측절단구간)의 절반만 유효표본으로 간주
 - 빈곤탈출 후 1분기 경과 후 빈곤층으로 재진입할 확률은 36.4%이며, 2분기 경과후 53%가 빈곤으로 재진입
 - 기간별 조건부 빈곤 재진입확률은 2~5분기까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6분기째 하락한 후 7분기 이후 다시 상승
- 전체 가구와 노인가구, 여성가구를 비교한 결과 노인가구의 재진입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여성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는 빈곤탈출확률의 경우와 다른 양상임. 빈곤탈출확률의 경우 여성가구의 탈출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6-31〉 비빈곤지속기간별 재진입확률

지속기간 (분기)	빈곤재진입 표본	우측절단 표본	유효표본	조건부재진입확률 (표준오차)		비빈곤유지확률 (표준오차)	
0	0	0	968.0	0(0)		1.0000	(0)
1	339	74	931.0	0.3641	(0.0158)	1.0000	(0)
2	143	49	530.5	0.2696	(0.0193)	0.6359	(0.0158)
3	88	51	337.5	0.2607	(0.0239)	0.4645	(0.0168)
4	51	16	216.0	0.2361	(0.0289)	0.3434	(0.0167)
5	41	34	140.0	0.2929	(0.0385)	0.2623	(0.0161)
6	14	12	76.0	0.1842	(0.0445)	0.1855	(0.0152)
7	15	19	46.5	0.3226	(0.0686)	0.1513	(0.0149)
8	6	6	19.0	0.3158	(0.1066)	0.1025	(0.0145)
9	6	1	9.5	0.6316	(0.1565)	0.0701	(0.0148)
10	3	0	3.0	1.0000	(0)	0.0258	(0.0122)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표 6-32〉 집단별 빈곤재진입확률 비교

지속기간 (분기)	빈곤 재진입확률		
	전체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
1	0	0	0
2	0.3641	0.4488	0.3684
3	0.5355	0.6063	0.5300
4	0.6566	0.7160	0.6754
5	0.7377	0.7941	0.7720
6	0.8145	0.8812	0.8608
7	0.8487	0.8995	0.9072
8	0.8975	0.9246	0.9233
9	0.9299	0.9246	0.9452
10	0.9742		0.9890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3) 재진입확률 결정요인

- 앞절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추정과 동일한 모형에 의거하여 빈곤재진입확률을 분석
- 비빈곤지속기간을 분해하여 가구-비빈곤분기 데이터를 생성한 결과, 표본수는 2,440 분기임.
 - 분석결과 비빈곤상태의 지속기간 이외의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모형3의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재진입확률이 1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빈곤상태가 지속될수록 빈곤재진입확률은 낮아지나, 8~10분기 경과후에는 반대로 빈곤진입확률이 높아짐. 이로부터 계속빈곤에비해 항상빈곤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됨.

〈표 6-33〉 빈곤재진입모형 추정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0.9203(.1221)**	-0.9781(.1735)**	-1.0631(.1823)**	-1.0495(.1831)**
가구원수	-0.0404(.0330)	-0.0288(.0369)	-0.0183(.0374)	-0.0179(.0374)
비빈곤기간 (기준=1분기)				
2분기	-0.1602(.0907)*	-0.1551(.0908)*	-0.1547(.0909)*	-0.1590(.0909)*
3~4분기	-0.2572(.0913)***	-0.2548(.0915)***	-0.2527(.0915)***	-0.2523(.0915)***
5~7분기	-0.2568(.1124)**	-0.2515(.1125)**	-0.2640(.1125)**	-0.2418(.1125)**
8~10분기	0.4659(.2121)**	0.4524(.2127)**	0.4439(.2129)**	0.4515(.2129)**
가구주연령 (기준=25~44세)				
24세 이하		-0.1691(.3394)	-0.2111(.3405)	-0.2201(.3514)
45~64세		-0.0671(.1237)	-0.0571(.1238)	-0.0565(.1288)
65세 이상		0.2076(.1326)	0.2324(.1337)*	0.1937(.1421)
가구주성별(여성=1)			0.1320(.0843)	0.1107(.0859)
가구주교육수준 (기준=초졸)				
중졸이하				-0.0212(.0750)
고졸이하				-0.0998(.0614)
대학재학이상				0.0128(.0948)
-2LL	2899.266***	2891.833***	2889.415***	2885.135***
표본의 크기	2440			

주: *는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가계조사 패널자료('03~'05)

마. 연구의 시사점

□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절반에 근접하는 가구가 4분기 이하의 빈곤경험기간과 반복빈곤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빈곤층에서 단기빈곤층과 반복빈곤층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는 별도로 재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

사함.

- 빈곤탈출확률 분석에서 여성가구와 노인가구는 취약성을 드러냄. 여성과 노인가구는 정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동태적측면에서도 취약층을 형성함.
 -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빈곤탈출과 재진입 모든 측면에서 확인되는 만큼 이 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

5. 결론

- 한국사회 빈곤문제의 특성은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이 매우ダイナミック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 2003년~2005년 3년간 1분기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35.1%로 높은 반면, 계속빈곤가구는 단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빈곤을 일시적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
 - 그리고 일시 또는 반복빈곤층 대부분은 근로빈곤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향후 우리사회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진입을 예방하고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일시빈곤과 반복빈곤가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25-64세 구간에 있는 가구의 비중이 약 80%에 이르며 취업한 가구주의 비율도 70-80%에 이룸. 따라서 근로지원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보장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빈곤으로의 진입과 반복진입을 방지할 필요.
 - 일시빈곤과 반복빈곤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취업특성에 대한 일차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 가구의 가구여건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 현 자료로는 건강상태 등에 대한 분석이 곤란
-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소득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지원정책 간의 균형을 잡는 노력이 매우 중요

- 이는 현 노동시장여건에서 당분간은 강력한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근로빈곤층의 반복빈곤문제가 일정수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음.
-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되 근로유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잠재력이 큰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인적자본개발과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이 필요
- ※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사회서비스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전적으로 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

□ 빈곤지위와 관련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계속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

- 계속빈곤계층의 규모는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 집단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관대한 보장정책이 필요
- 빈곤무경험가구의 3.9%만이 노인가구주인 반면, 계속빈곤가구의 약 절반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임. 교통수당 등 일부 공적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 65세 이상의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Protection)을 강화할 필요.
- 아울러 계속빈곤가구 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급여에 대한 현실화 이상으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함. 이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보장체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계속빈곤가구 중 34.1%나 되는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였음. 이는 고령의 여성가구의 비중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이며, 이들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affirmative action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빈곤가구 내의 65세 미만 비노인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한 관심이 필요

- 이는 서비스부문의 만성적인 저임금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취업한 가구주의 종사직업에서 서비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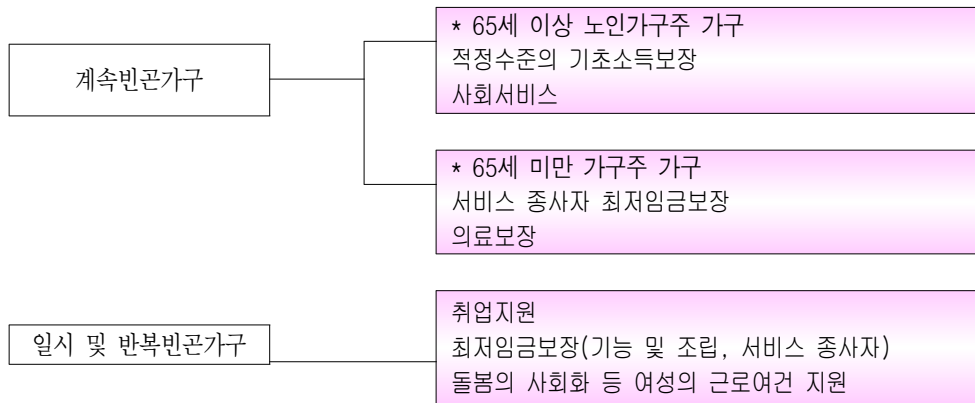
스중사자의 비중은 41.0%에 이릅니다.

- 아울러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음. 실제로 65세 미만의 가구주 비취업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속빈곤가구에서 심신장애가 이유가 되었던 가구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실질적인 근로불능집단임을 시사

□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성에 대한 의도적 지향이 필요

- 우리사회의 빈곤문제가 매우ダイナミック하다는 것은 전체 국민 중 많은 사람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좀더 보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 이는 복지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
- 실제로 빈곤무경험가구, 일시빈곤가구와 계속빈곤가구에서는 가구주의 비취업사유로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이 30-40%에 달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돌봄의 사회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예로, 사회보험 등 미래의 빈곤예방을 위한 1,2차 안전망을 내실화하는 것이 관건.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그 원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주 임금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 기본 틀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모색이 필요

[그림 6-9] 빈곤층 지원정책의 예시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석훈 외(2003),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제18집 1호, 2003년 9월
- 강철희(2004),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 관점과 인간능력 관점을 중심으로 한 탐색」, 제5차년도 노동패널 분석 학술대회 발표논문
- 강철희(1997) 「자활보호기구의 자활보호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34, pp.87~118.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pp.351~374.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pp.82~112.
-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pp.511~539.
- 김미곤 외(2005) 『2004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 외(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수·허준수(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8권 2호, pp.43~70.
- 노대명 외(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외(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최승아(2004) 『한국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 외(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2004) 「기초보장수급기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 외(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6),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서동우 외(200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고취 프로그램 효과제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지미·안주엽(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제27권(3), 2003년
- 신영석 외(2001) 『의료급여제도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외(2005a) 『2006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외(2005b)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외(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준 외(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덕희·김창엽,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의 이중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 이병희·정재호(2001), 「외환위기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소·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학술대회 『한국경제 전환기의 노동자 상태 및 노사관계』 발표 논문, 2001년 12월
- 이정우·이성립(2001),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 제7권 제1호
- 이태진 외(2004a)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외(2004b)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3), 2003년
- 정진경(2004) 「공공부조수급자의 복지의존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연구원(2003),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 정책의 방향」
- 홍경준(2004) 「빈곤의 동태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24. pp.199~223.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4년 2월

홍경준(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호. pp.61~85.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 외국문헌

Allison, P.D.(1997)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NC: SAS Institute.

Anne Huff Stevens(1999),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 Measuring the Persistence of Poverty over Multiple Spell",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4 no.3

B. Matire & B. Nolan(2000), "Income Mobility in the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urvey", *EPAG Working Paper*, January 2000.

Bane and Ellwood(1994), *Welfare Realities: From Rhetoric to Reform*, Harvard Univ. Press.

Bane and Ellwood(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1).

Baulch, B. and J. Hoddinott(2000) "Economic mobility and Poverty Dynamics in Developing Countr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6(6). pp.1~24.

Boskin, M. J. and F.C. Nold(1975) "A Markov Model of Turnover in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0(4). pp.467~481.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2).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 U.S. Department of Labor, 2002.

Bureau of Labor Statistics(1996), *Current Population Surveys*

Christopher T. Whelan, Richard Layte, Bertrand Maître(2003), "Poverty, Deprivation and Tim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ructuring of disadvantage", *EPAG Working Paper*,

september 2003.

Coe, R.(1978) "Dependency and Poverty in the Short and Long Run," in G. Duncan and J. Morgan ed., *5000 American Families: Patterns of Economics Progress*, Vol.6. Univ.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DHHS(2000), *The Low Wage Labor Markets*

Didier Fouarge & (2003), "Duration of Spells in Poverty", ECHP Panel Analysis

Didier Fouarge and Richard Layte, "Welfare Regimes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 3:407~426.

Dorothy Watson, Christopher T. Whelan and Bertrand Maire(2006), *Social Class, Deprivation and Poverty: Assessing the New European Socio-economic Classification(ESeC)*, ESRI(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 M. Gramlich & C. M. Heflin(1998), "The Spatial Dimension : Should Worker Assistance Be Given to Poor People or Poor Places?", in *Generating Jobs ; How to increase Demand for Less-Skilled Workers*, ed. by Richard B. Freeman &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Elke Holst & C. Katharina Spiess(2001), "Labor Market Attachment of Not Economically Active Persons : New Aspects of Hidden Laour Force in Europe", *EPAG Working Paper*, august 2001.

Elke Holst & C. Katharina Spiess(2004), "The Transition into work?: specialities for the hidden labour force in comparison to other economically inactive persons", *EPAG Working Paper*, march 2004.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EFILWC)(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Fouarge, D. and R. Layte(2005) "Welfare Regimes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2), pp.407~426.

Goerge, R. M. et. al.(2004) "Understanding the Food Stamp Program Participation Decision of TANF Leavers,"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at Univ. of Chicago.

- Greg J. Duncan et al.(1993), "Poverty dynamics in eight countries", *Population Economics*, vol.6.
- Heather Boushey(2001), "Last Hired, First Fired : Job losses plague former TANF recipients", *EPI Issue Brief*, Economic Policy Institute December 12, 2001 Issue Brief #171
- INSEE(1997), *Budget de Famille*, FRANCE
- J.B. Davies & A.F. Shorrocks, "The Distribution of Wealth", A.B. Atkinson et al.(2000),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ume 1, Elsevier Science B.V.
- Jared Bernstein & Heidi Hartmann(2000), "Defining and Characterizing the Low-Wage Labor Market", Keileen Kaye ed.(2000), *The Low-Wage Labor Market*, US DHHS
- Jean-Michel Hourriez(2000), "Que nous apprend l'information statistique disponible sur les travailleurs pauvres?", *Le Colloque Working Poor*, mai 2000
- John Iceland(2000), "Poverty Among Working Families: Findings from Experimental Poverty Measures",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Reports*, P23-203, September 2000.
- Lee, B. J., R. M. "Goerge and J. Dilts(2001) Outcomes for the Income Maintenance Caseload After Receipt: Caseload Dynamics, Employment and Earnings in Illinois 1995-1999", Discussion Paper CS-65,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University of Chicago.
- Lee, B. J., R. M. "Goerge and J. Dilts(2000) Outcomes for the Income Maintenance Caseload During Receipt: Caseload Dynamics, Employment and Earnings in Illinois 1991-1999", Discussion Paper CB-XX,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University of Chicago.
- Levy, F.(1976) "How Big is the American Underclass," Berkele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Working Paper.
- Lillard, L., A. and R. J. Willis(1978) "Dynamic Aspects of Earning Mobility," *Econometrica*, 46(5). pp.985~1012.
- Mary Jo Bane & David Ellwood(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1 No.1
- Michael F. Förster(2000)

- Miller, C.(2002) *Leavers, Stayers, and Cyclers: An Analysis of the Welfare Caseload*,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Oxley, H., T. T. Dang, and P. Antolin(2000) "Poverty Dynamics in Six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0
- Plotnick, R.(1983) "Turnover in the AFCD Population: An Event History Analysis," *Jornal of Huaman Resources*, 13(1). pp.65~81.
- Richburg-Hayes, L. and S. Freedman(2004) *A Profile of Families Cycling on and off Welfare*,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Robert Castel(1995), *Les me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 une chronique du salariat*, Fayard
- Robert Haveman & Edward N. Wolff(2000), "Who are the Asset Poor? :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Working Paper 00-12 in *Inclusion in Asset Building : Research and Policy Symposium*,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2000.
- Robert Walker, *Poverty Dynamics: Issues and Example*, Avebury, 1994.
- Ruud Muffels, Didier Fouarge(2000), "Insecurity, Labour Market Exclusion and Income Poverty Evidence from Wave 1 and Wave 2 of the ECHP", *EPAG Working Paper*, September 2000
- S. Ponthieux & P. Condiardi(2000), "Bas salaires et travailleurs pauvres", *Revue de l'IRES*, No.33.
- Serge Paugam(2000), *Le Salarié de la Précarité*, PUF
- Stevens, A. H.(1999)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Measuring the Persistence of Poverty over Multiple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3), pp.557~588.
- Stevens, A. H.(1994) "The Dynamics of Poverty Spells: Updating Bane and Ellwoo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pp.34~37.
- Valletta, R. G.(2006) "The Ins and Outs of Poverty in Advanced Economics: Government Policy and Poverty Dynamics in Canada, Germany,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2(2), pp.261~284.
- Wolfgang Strengmann-Kuhn(2002), *Working Poor in Europe : A Partial Basic Income for Workers?*,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9th International Congress, september 2000.
- Yannick L'Horty(2000), "<Working poor> en France", *Le Colloque Working Poor*, mai 2000

[제 6 회 회 의 록]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 의견 및 토론

○ 연구목적과 분석수준

- 정책제안이 목적이라면 절대 빈곤선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음. 상대빈곤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 50%의 기준은 국가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킴.

○ 빈곤층 각 특성별 분석과 정책제안

-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본다면, 계속 빈곤상태에 어느 정도 머무는지도 중요하지만, 일시빈곤, 반복빈곤층 등, 각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각 특성별 빈곤층의 요인들을 분석하면 정책제안에 있어 의미가 클 것임.

○ 분석대상 표본수

- <표 6-5>에서 보면 표본유지율이 2005년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약 3000개의 사례를 갖는 데이터를 갖고 유형화된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연령이나 성 등의 변수로 분해하여 구한 해당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은가?
- 원래의 샘플 수 자체가 작은 것을 또 분해하여 빈곤률을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5인 이상으로 묶는 등, 좀더 크게 구분하여 빈곤률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그리고 샘플 크기 자체가 작아 해석상 유의하라는 점을 각주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계절적 요인 통제와 가중치

- [그림 6-2] 를 보면, 일정한 정규성을 보이고 있음. 즉, 1분기에는 빈곤율과 실업률이 높아졌다가 2, 3, 4분기에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이에 대한 해석은 계절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통계청의 기준 가중치는 지역별 추출률로 알고 있음. 일반적으로 모수를 사용하는 분석을 하려고 하면 나온 추출률에 역승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함. 또 다른 핵심이슈는 보정되어있는 부분은 가중치도 같이 보정되어 있다는 것임.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 빈곤가구 구분방식

-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집단으로 구분하였음. 3년밖에 안되는 기간 속에서 일시빈곤과 반복빈곤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사회복지 수혜대상층

- 빈곤무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계속빈곤 구분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봄. 계속빈곤이 4%인 것은 수급자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로 의미가 있음. 일시빈곤과 반복빈곤, 그리고 계속빈곤의 합이 전체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하위 35%~40%의 수치는 서민층을 잘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음.
-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하위 35%~40%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음.

○ 분석모형 및 결과해석에 대한 의견

- 패널로지스틱의 경우에 다이나믹스 모형을 많이 사용함. 이로써 설명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봄. 다항회귀분석보다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임.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봄.

- <표 6-16>을 보면 취업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빈곤요인 분석에서 취업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학업 및 학업준비의 경우. 계속빈곤의 경우에만 33.4%로 나타남.
- 노인, 여성가구 등을 뺀 일반가구만을 분석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Q & A

- 분석자료의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패널자료에서 빈곤층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임.

▶▶ 발표자 답변

- 표본을 패널로 이었을 때, 동일한 가구가 계속 조사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이를 전제로 하였을 때 25%정도가 36개월을 응답한 가구로 봄. 횡단면 자료에 비해 패널데이터는 빈곤률이 약 4% 낮게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표 6-15>에서 종사상태에 따른 빈곤상태를 보여주는데, 상식과는 달리 상용노동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 우리나라 근로자 분포를 보면,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노동자와 대등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 발표자 답변

- 통계청에서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 상용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노인교통수당은 수당의 형태로 공적부조와 다른 범주인데 왜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는가?

▶▶ 발표자 답변

- 전국가계조사자료에 공적이전자료는 연금,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 등), 기타로 구분됨. 기타에 기초보장급여를 포함한 보험이 아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발표자 종합 정리

- 외국의 경우, 노동에 관련된 사항은 월단위로 분석하기도 함. 그러나 가구소득을 놓고 월단위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그러나 년 단위로 보기에 본 연구의 자료가 3년 단위이기 때문에 반복빈곤을 뽑기가 어려웠음. 외국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분기별로 보는 연구가 있었음.
- 전 개월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 20% 대로 떨어짐. 이에 분기별 1개월 이상 응답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월단위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 또한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결과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은 계속 주지시키고 있음. 방법론상 분기별로 하면 과대 추정될 수 있으나 빈곤의 동태를 보기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함.
- 중위 50%선을 빈곤선으로 삼았을 때, 특정시점에 빈곤층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가구는 소득이 상당히 불안정한 집단이므로 정책표적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Working Paper 2006-05

2006년 빈곤포럼 II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원
편 지	이 태 진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430-8 93330